

지방균형
도시포럼
2021



1차 포럼

[지방중소도시 연속 기획 포럼]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발견

주관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공동주최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한국도시설계학회 대구경북지회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지방중소도시 연속 기획 포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발견

제1차 포럼: 지방중소도시 분석

2021. 09. 23.(목) 19:00
대구YMCA 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주 관 : (사)대구사회연구소

공동주최 : 대구경북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대구경북지회

프로그램

◎ 제 1차 포럼 : 지방중소도시 분석

발 표	내 용	좌장
1차 9.23(목)	○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이슈 최예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재훈 소장 (대구사회연구소)
	○ 경상북도 지방중소도시 쟁점 김용현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토론	○ 김규호 명예교수 (경주대 문화관광산업학과) ○ 박상우 교수 (경북대 경제학과) ○ 박찬돈 교수 (경운대 건축학과/한국도시설계학회 지회장) ○ 유정근 과장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 제 2차 포럼 : 지방중소도시 대안

발 표	내 용	좌장
2차 10.21(목)	○ 축소도시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재훈 소장 (대구사회연구소)
	○ 일본 콤팩트시티 윤철재 (경북대 건축학부/한국토지설계학회)	
토론	○ 진종현 교수 (공주대 지리학과/대통령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 최영은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 이장환 교수 (어반오퍼레이션즈 / 서울시 마을건축가)	

◎ 제 3차 포럼 : 지방중소도시 전략

발 표	내 용	좌장
3차 11.25(목)	○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구독 지역발전전략 조덕호 교수 (대구대 행정학과/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엄창욱 교수 (경북대 경제학과)
	○ EU의 중소도시 발전전략 김재훈 교수 (대구대 경제학과/대구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 권오혁 교수 (부경대 경제학부/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 조진형 명예교수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 김주일 교수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학부) ○ 이영아 교수 (대구대 지리교육과)	



제1차 토론회 일정

○ 등록 및 인사말 (18:40~19:00)

□ 등록 및 안내

□ 인사말

-

○ 토론 발표 (19:00~21:00)

제 1세션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이슈

제 2세션 경상북도 지방중소도시 쟁점

○ 종합토론

- 김규호 교수(경주대학교)

- 박상우 교수(경북대학교)

- 박찬돈 교수(경운대학교)

- 유정근 과장(경상북도청)

□ 마무리

Contents

목 차

1. 지방중소도시의 현황 및 이슈

- 최예슬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2. 경상북도 지방중소도시 쟁점

- 김용현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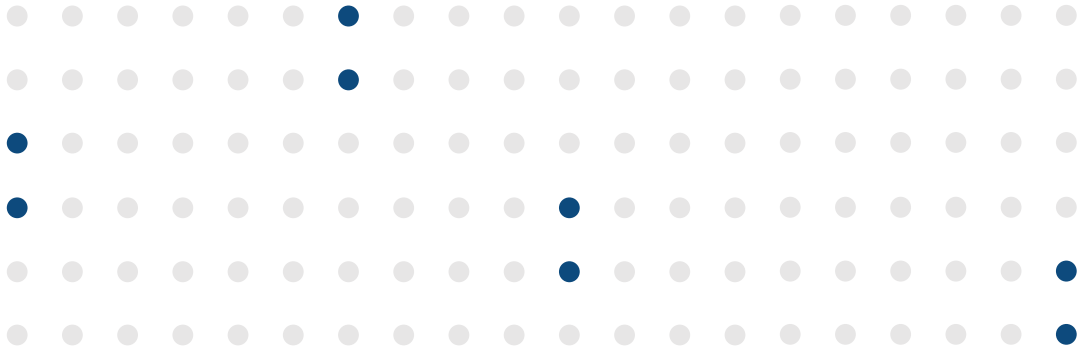
▣ 종합토론

- 김규호 교수(경주대학교)
- 박상우 교수(경북대학교)
- 박찬돈 교수(경운대학교/한국도시설계학회)
- 유정근 과장(경상북도 인구정책과)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이슈

■ 최예슬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대구사회연구소 –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발견

[포럼1] 지방중소도시 분석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이슈

최예솔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목차

- I 지방이 사라진다** —————
- II 경북 23개 시·군 인구변화와 실태 진단** —————
- III 인구감소에 따른 경북 지역이슈와 과제** —————
- IV 경북의 대응 방향과 전략은?** —————
- 부록 지방소멸 대응 지원시책 발굴 지자체 수요조사**
-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경북도 및 23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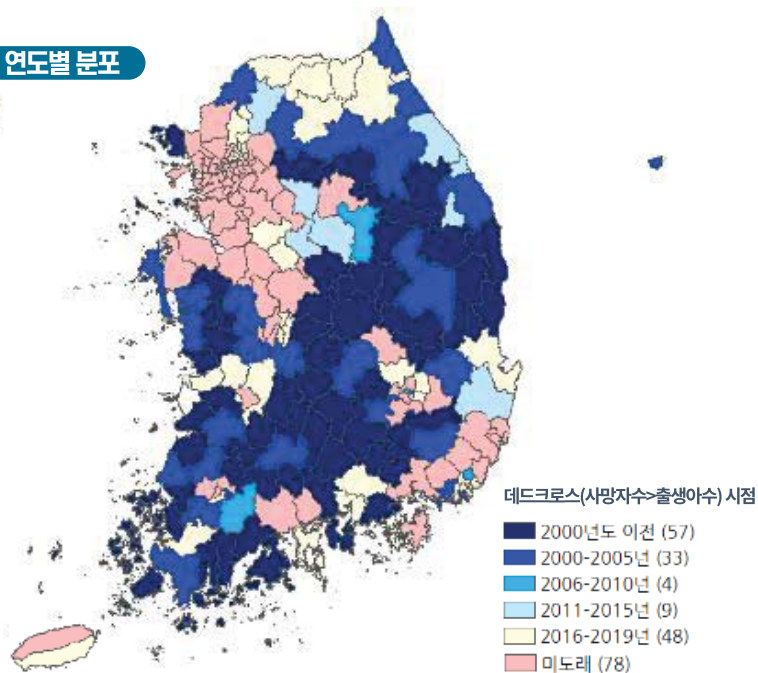
지방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2021.4~1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발표자료를 기초로 작성

01 전국 66% 지자체 데드크로스 직면

시·군·구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시·군·구 4곳 중 1곳(24.8%)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데드크로스가 진행

데드크로스 시점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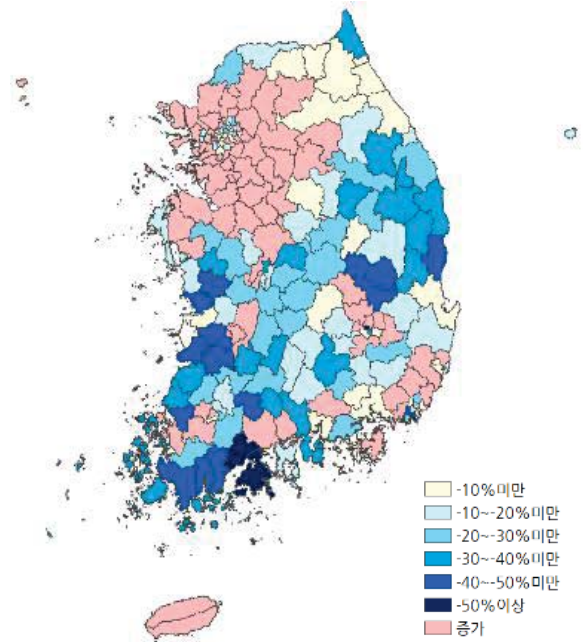
02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지난 20년간 인구감소 시·군·구는 151곳(66%)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57곳..

〈2000~2020년 간 인구감소율 분포〉

인구감소율	지자체 수	인구수
-10% 미만	42개	1,243만명
-10~-20% 미만	52개	801만명
-20~-30% 미만	46개	286만명
-30~-40% 미만	10개	67만명
-40% 이상	1개	17만명
계	151개	2,414만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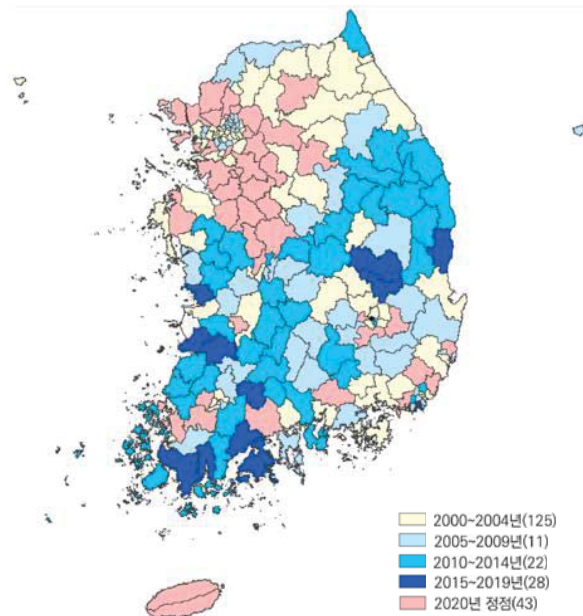
03 인구저점 미 도래

지자체 절반은 인구저점 미 도래

인구정점연도는 2000년대(54%)에 집중.. 인구저점연도는 2020년(52%)에 집중

〈인구 정점연도와 인구 저점연도 분포〉

연도	인구정점연도	인구저점연도
2000~2004년	125개(54%)	67개(29%)
2005~2009년	11개(5%)	20개(9%)
2010~2014년	22개(10%)	5개(2%)
2015~2019년	28개(12%)	19개(8%)
2020년	43개(19%)	118개(52%)
총계	229개(100%)	229개(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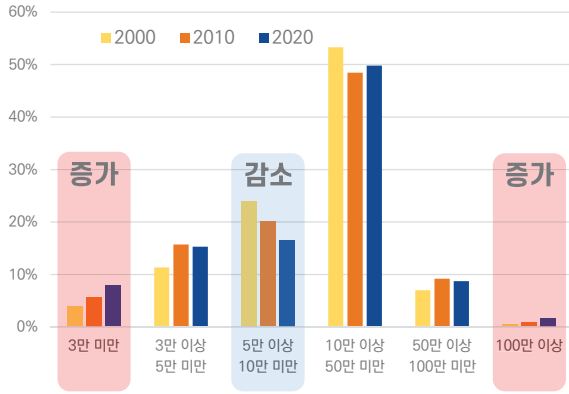
6

04 인구의 공간적 편재와 양극화 심화

지자체 인구 규모별 양극화 심화... 중소도시→대도시 이동 심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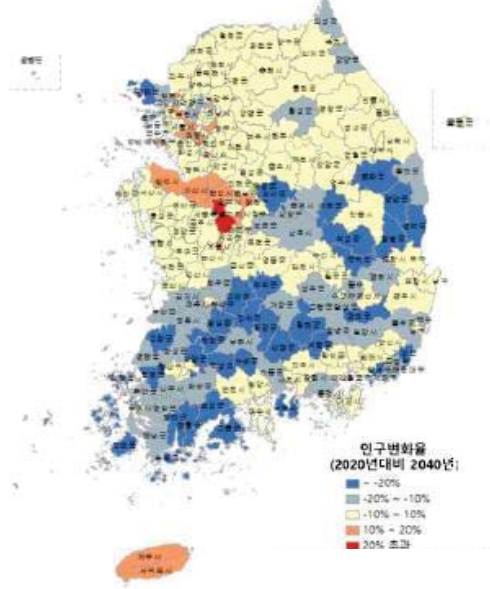
인구 3만 미만은 3배 증가(6개→18개), 인구 100만 이상은 4배 증가(1개→4개)

인구 규모별 지자체수 변화(2000~2020)



✓ 2000~2020년 기간동안 순증가 인구(443만명)는 50만명 이상 시·군·구와 3만 미만 시·군·구에서 증가한 반면, 3만이상~50만 미만 시·군·구에서 감소

2020년 대비 2040년 인구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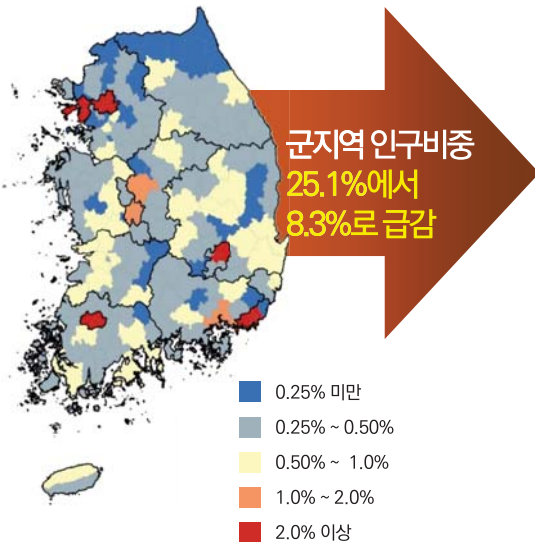


자료 : 이보경 (2019,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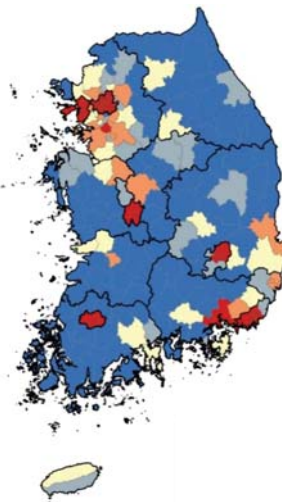
참고

지난 40년간 군지역의 현저한 인구감소

1975년 인구비중



2015년 인구비중



인구정점대비 절반이상 감소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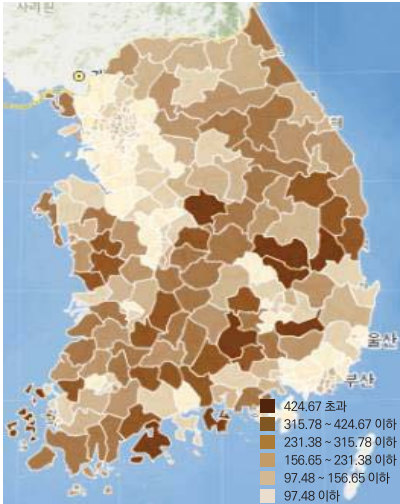
김제시	221,414명 → 84,269명 (▼ 61.9%)
태백시	117,090명 → 46,715명 (▼ 59.0%)
나주시	212,246명 → 92,582명 (▼ 56.4%)
상주시	226,278명 → 98,960명 (▼ 56.3%)
정읍시	248,193명 → 110,627명 (▼ 55.4%)
문경시	161,095명 → 71,863명 (▼ 55.4%)
남원시	175,203명 → 80,499명 (▼ 54.0%)
삼척시	140,092명 → 69,509명 (▼ 50.4%)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00~2040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의료 취약계층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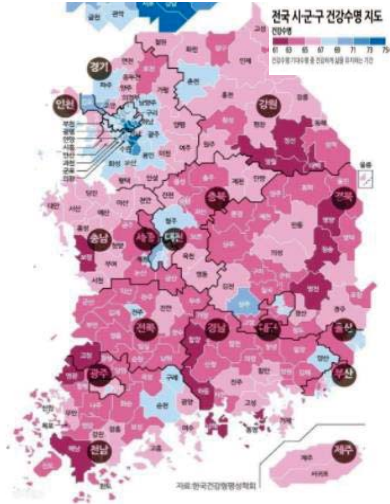
사회·경제(소득) 격차는 건강수명과도 밀접하게 관련

노령화 지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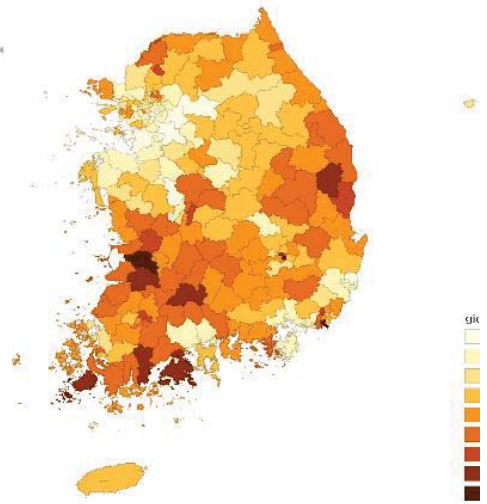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건강수명(2020)



자료: 한국건강형평성학회(2020)

기초생활수급자 비율(2015)



자료: 장인수(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인구 구조변화와 지방소멸 단계 진입

“유소년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의 형태(1단계, 92%)

시·군·구의 92%(210곳)가 1단계, 8%(19곳)는 0단계

(일본) 지역별 인구감소 전망과 지방소멸 단계 (2015~2045)

1단계 (유소년 감소, 노령층 증가)

도쿄도, 중핵시, 특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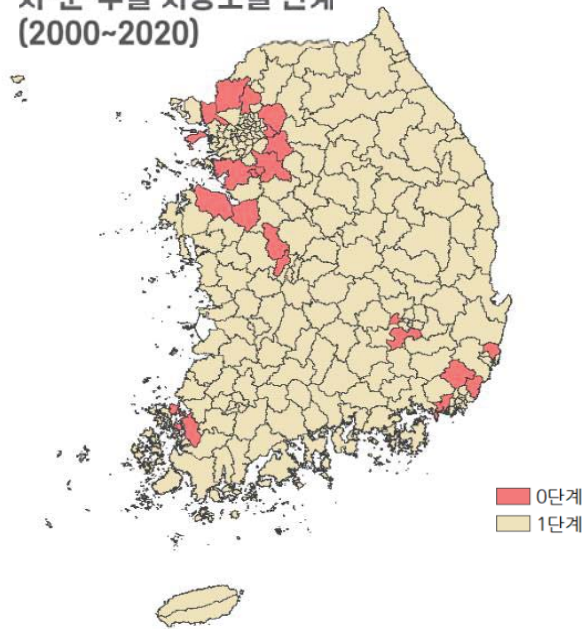
2단계 (유소년 감소, 노령층 유지)

인구 5만명 이하의 시정촌

3단계 (유소년 감소, 노령층 감소)

과소지역의 시정촌

시·군·구별 지방소멸 단계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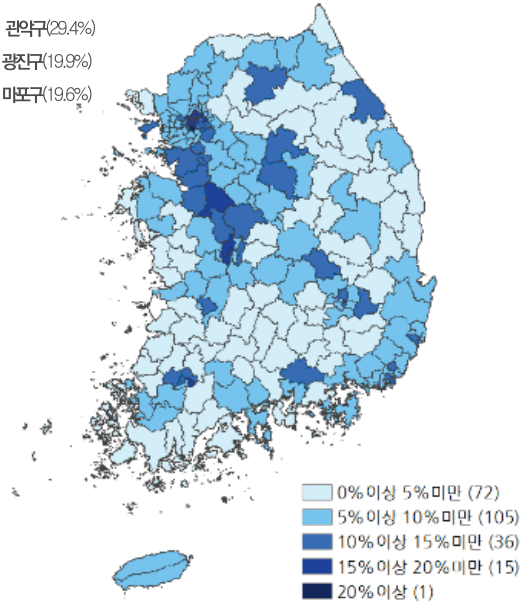


청년 1인가구는 서울시와 대도시에 집중 분포

고령 1인가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청년 1인가구의 분포와 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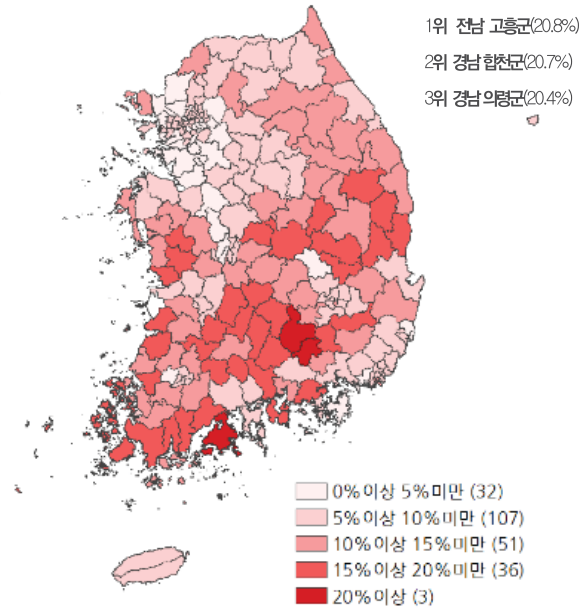
20~30대 청년1인가구 분포(2019)

- 1위 서울시 관악구(29.4%)
- 2위 서울시 광진구(19.9%)
- 3위 서울시 마포구(19.6%)



65세 이상 고령1인가구 분포(2019)

- 1위 전남 고흥군(20.8%)
- 2위 경남 함안군(20.7%)
- 3위 경남 의령군(20.4%)



06 지방 인구감소 요인

사회적 증감(유출)이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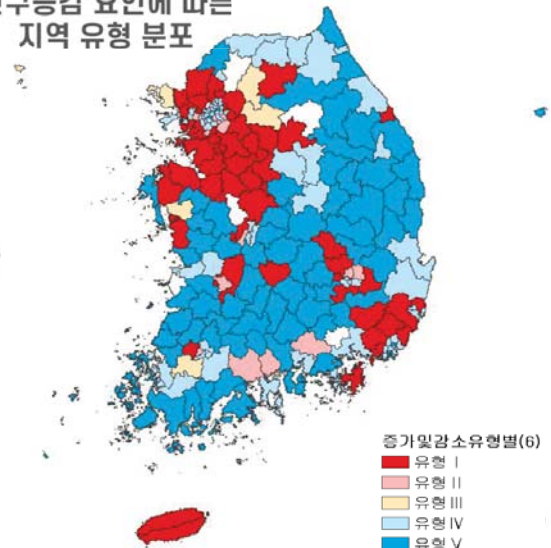
인구감소 지역은 IV유형(+,-)과 V유형(-,-)

$$\text{인구증감} = \text{자연적 증감(출산, 사망)} + \text{사회적 증감(유출, 유입)}$$

구분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유형	개수	행정체제별			인구 규모별			
					시	군	구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인구 증가 지역	+	+	I	53	36	8	9	2	4	34	13
	+	-	II	13	7	-	6	-	-	9	4
	-	+	III	7	1	6	-	1	3	3	-
	소계			73	45	14	15	3	7	46	17
인구 감소 지역	+	-	IV	72	18	6	48	5	8	51	8
	-	-	V	78	14	60	4	43	23	12	-
	소계			150	32	66	52	48	31	63	8

※ 세종시 및 분류불가 지자체(5) 제외하고 분석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지역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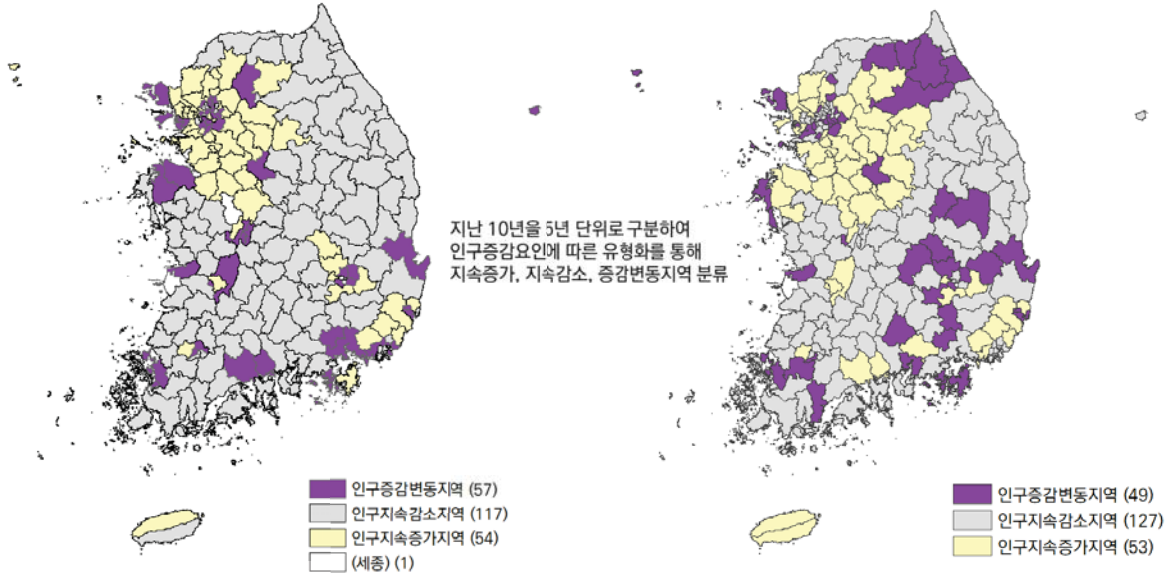
- 증가및감소유형별(6)
- 유형 I
- 유형 II
- 유형 III
- 유형 IV
- 유형 V

지난 20년간 인구가 지속감소지역은 87곳(38%)

인구가 지속증가지역은 38곳(17%)... 인구가 증감변동지역은 104곳(45%)

2000~2009년

2010~2019년



고학력·고속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로 전문가, 기술자, 관리자...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단순반복 업무 종사자, 영업직, 단순 노무직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현황과 직종 특성은...

유출여부	빈도(명)	비율(%)	유출범주	빈도(명)	비율(%)	평균연령
이동	25,824	25.52	지방 중소도시 → 타 지방 중소도시	7,894	30.57	36.4세
비이동	75,354	74.48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대도시	8,109	31.40	31.1세
			지방 중소도시 → 수도권	9,821	38.03	30.6세
합계	101,178	100	합계	25,824	100.00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		
순위	한국표준직업분류명(코드)	유출비율(%)
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	16.38
2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	16.34
3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	13.98
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13.92
5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13.73
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	13.13
7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	11.89
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	11.88
9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11.82
10	기타 기능 관련직 (79)	11.80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		
순위	한국표준직업분류명(코드)	유출비율(%)
1	농·축산 숙련직 (61)	1.36
2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	2.42
3	어업 숙련직 (63)	2.64
4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4.05
5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	5.01
6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5.06
7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	5.09
8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	5.45
9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5.80
10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	5.83

07 거주지와 연령에 따라 이동 목적 및 패턴 상이

군부에서 20~30대 주로 유출, 50~60대는 군부로 유입

군부에서 20~30대는 주로 직업 목적으로 유출... 50~60대는 직업과 기타 목적으로 유입

최근 3년간 20~30대의 지역간 이동 목적

구분		순이동률 평균(%)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수도권	서울	0.35	-0.92	1.64	0.70	-1.07
	시부	1.46	0.71	0.47	-0.14	0.42
	군부	-0.31	0.24	-0.05	0.20	-0.70
광역시*	시부	-1.38	-0.27	-0.81	0.06	-0.36
	군부	3.93	1.96	0.43	-0.30	1.84
도	시부	-1.75	-0.21	-1.33	-0.40	0.19
	군부	-4.65	-1.27	-2.26	-0.90	-0.22

최근 3년간 50~60대의 지역간 이동 목적

구분		순이동률 평균(%)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수도권	서울	-1.55	-0.95	-0.18	0.03	-0.45
	시부	0.82	0.59	0.01	-0.01	0.23
	군부	2.57	1.88	0.24	0.01	0.44
광역시*	시부	-0.86	-0.39	-0.19	0	-0.28
	군부	3.36	2.11	0.40	0	0.85
도	시부	0.51	0.21	0.22	0	0.08
	군부	1.43	0.40	0.52	-0.01	0.52

주 1: 같은 지역 유형별 순이동률 평균을 산출 *인천광역시를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주 2: (순이동자수 ÷ 총인구수: +이면 사회적이동으로 인구 증가/-이면 사회적이동으로 인구 감소)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8~2020년) 재구성

참고 20~30대 청년층 이동 양상

20~30대 청년층은 지역별, 목적별로 상이한 이동 양상

강원도 거주 청년은 수도권으로 바로 이동... 광역시 인접한 경북, 전남 등은 광역시, 수도권으로 이동

20~30대 교육 목적 유출지



20~30대 직업 목적 유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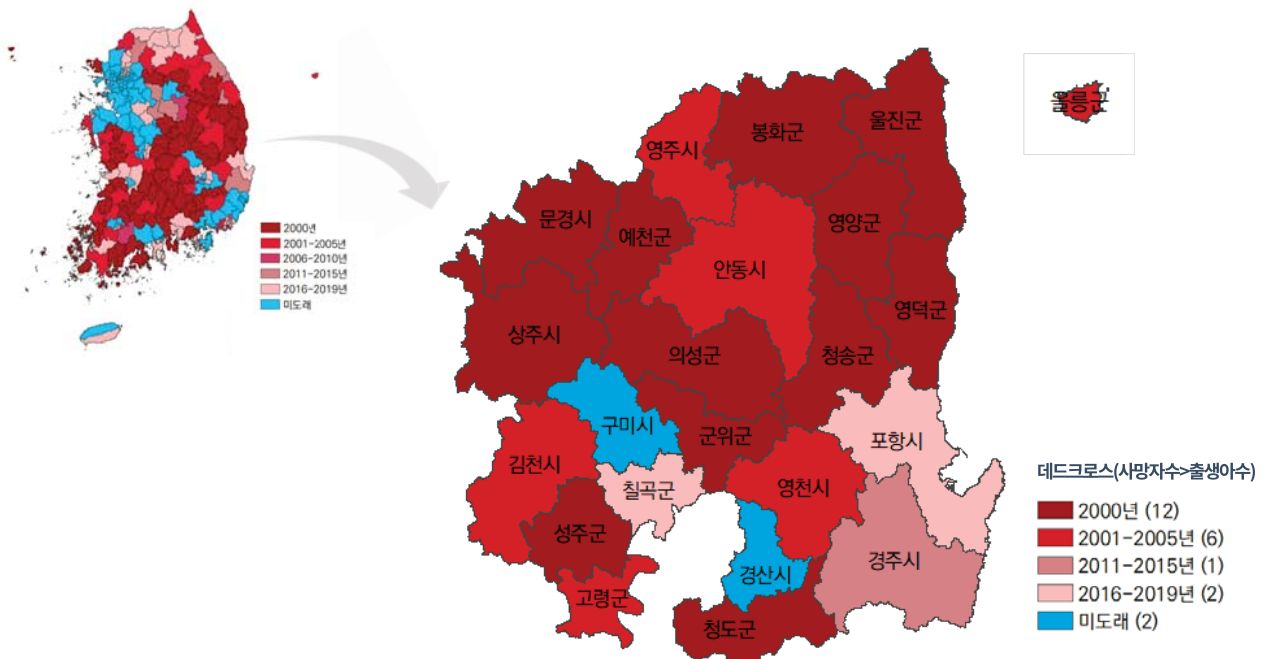


경북 23개 시·군 인구변화와 실태 진단

경상북도(2021.4~11),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발표자료를 기초로 작성

01 | 21개 시·군 데드크로스 진입

전국(66%)에 비해 도내 시·군(91%)의 데드크로스 심각
21개 시·군 데드크로스 경험... 구미, 경산시 데드크로스 진입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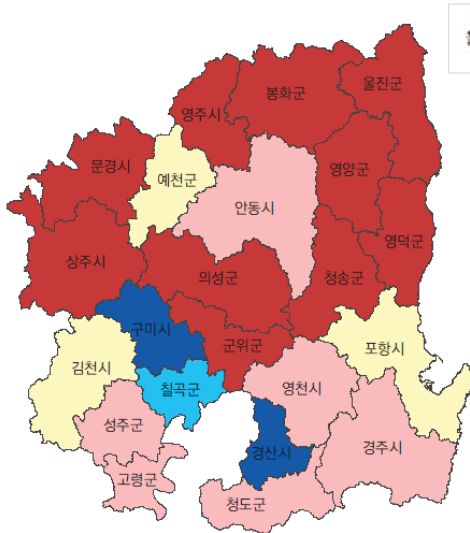


02 | 23개 시·군 인구증감 추이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최근 5년간 유출된 인구의 절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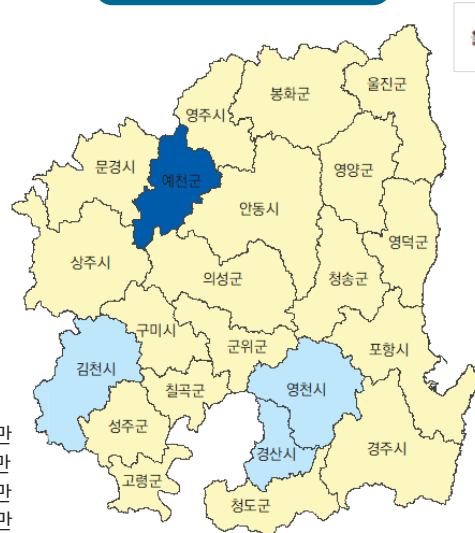
산업위기에 직면한 구미시, 포항시는 유출... 혁신도시·도청이전 지역은 유입

최근 20년간 인구증감률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0% 이상 10% 미만
- -10% 이상 0% 미만
- -20% 이상 -10% 미만
- -30% 이상 -20% 미만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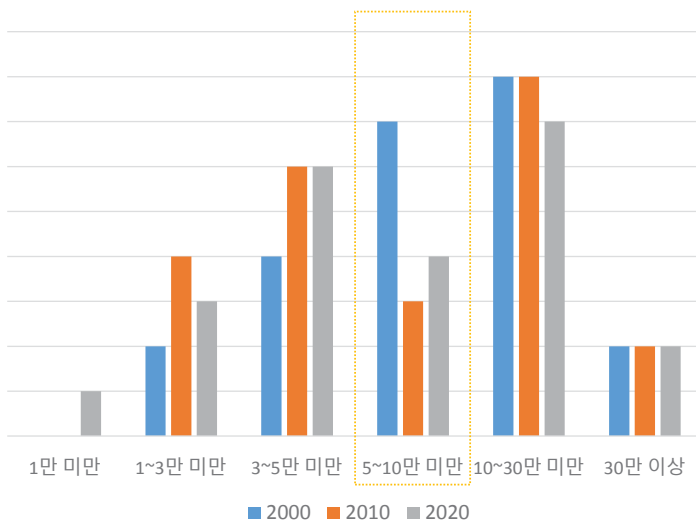


03 | 지자체의 과소화와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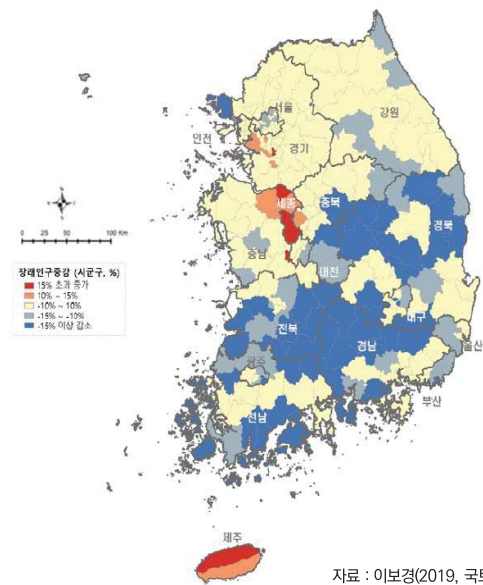
중간규모(5~10만명) 지자체의 현저한 감소

지자체의 과소화·축소로 행정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및 주민 삶의 질 수준 저하

경북 인구 규모별 지자체수 변화(2000~2020)



2020년 대비 2040년 인구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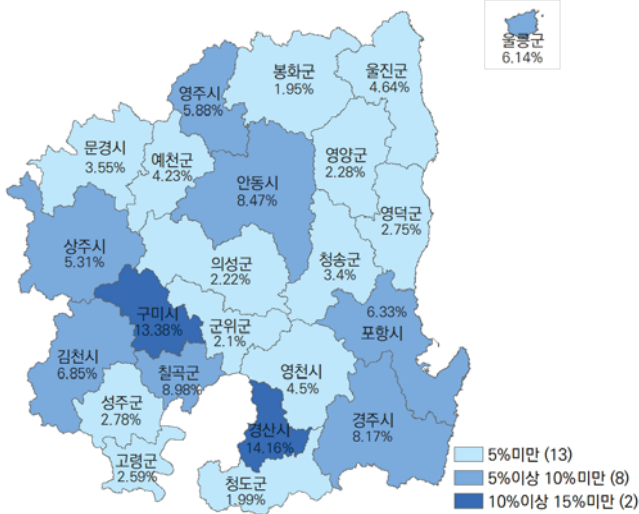
자료 : 이보경(2019, 국토연구원)

04 고령인구 증가와 성장잠재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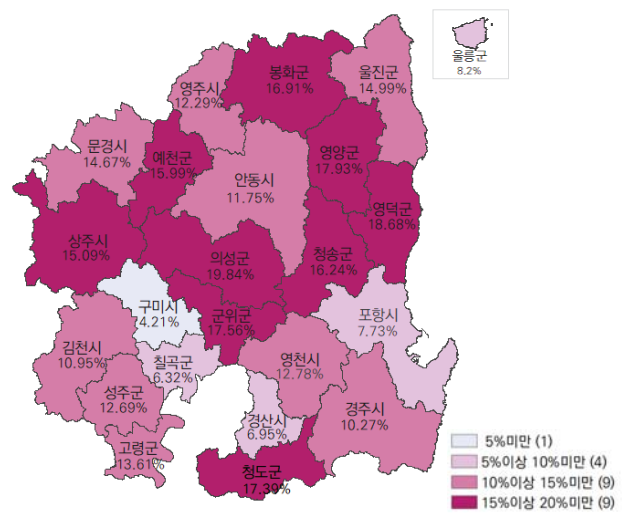
2037년 고령화율 50%를 넘는 시·군은 8곳(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봉화)에 달함

고령인구 1%p 증가시, 성장률 0.5%p 감소 (한국경제연구원, 2021)

20~30대 청년1인가구 분포(2019)



65세 이상 고령1인가구 분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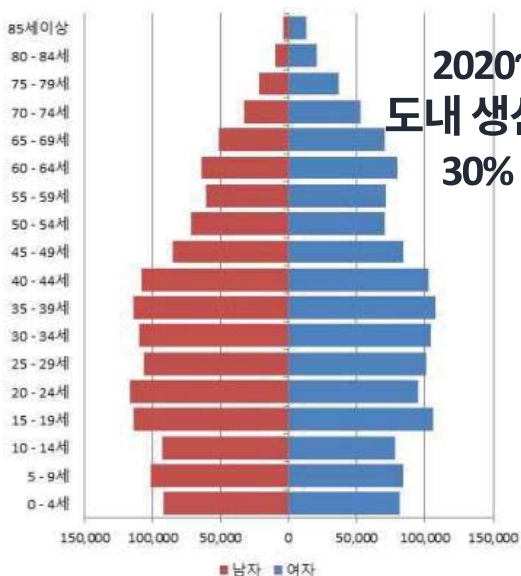
경북 고령화율 (2020년) 20.7% → (2037년) 38.1%

05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지역경제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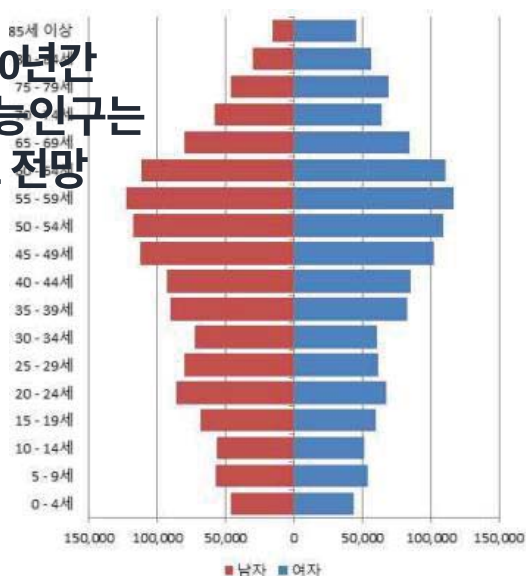
경북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은 전국보다 높음

2020~2040년간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경북(-30%) > 전국(-23%)

2000년 경북 인구구조



2019년 경북 인구구조



2020~2040년간
도내 생산가능인구는
30% 감소 전망

06 시·군별 인구증감 요인과 유형

자연·사회 증감 모두 감소하는 유형이 18곳(78%, 전국 52%)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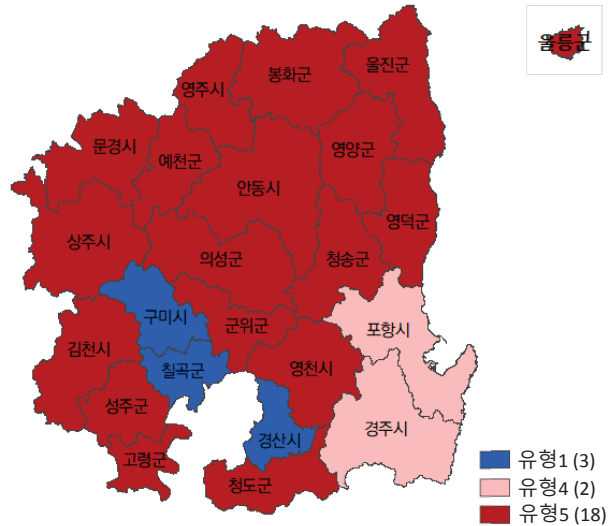
일부 시·군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상황

*의성 1.76명, 청송 1.62명 등

시군별인구증감유형

구분	인구증감유형	증감요인		행정체제별		인구규모별				
		자연증감	사회증감	시	군	3만 미만	3~5만 미만	5~10만 미만	10~30만 미만	30만 이상
인구증가지역	1	+	+	2개	1개	-	-	-	2개	1개
	2	+	-	-	-	-	-	-	-	-
	3	-	+	-	-	-	-	-	-	-
인구감소지역	4	+	-	2개	-	-	-	-	1개	1개
	5	-	-	6개	12개	4개	6개	3개	5개	-
	6	-	+	-	-	-	-	-	-	-

※2000-2019년 기준



참고

시·군별 인구증감 요인과 지속·변동성

소규모 군부 인구감소 고착화... 도내 시·군간 양극화 심화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에서 인구감소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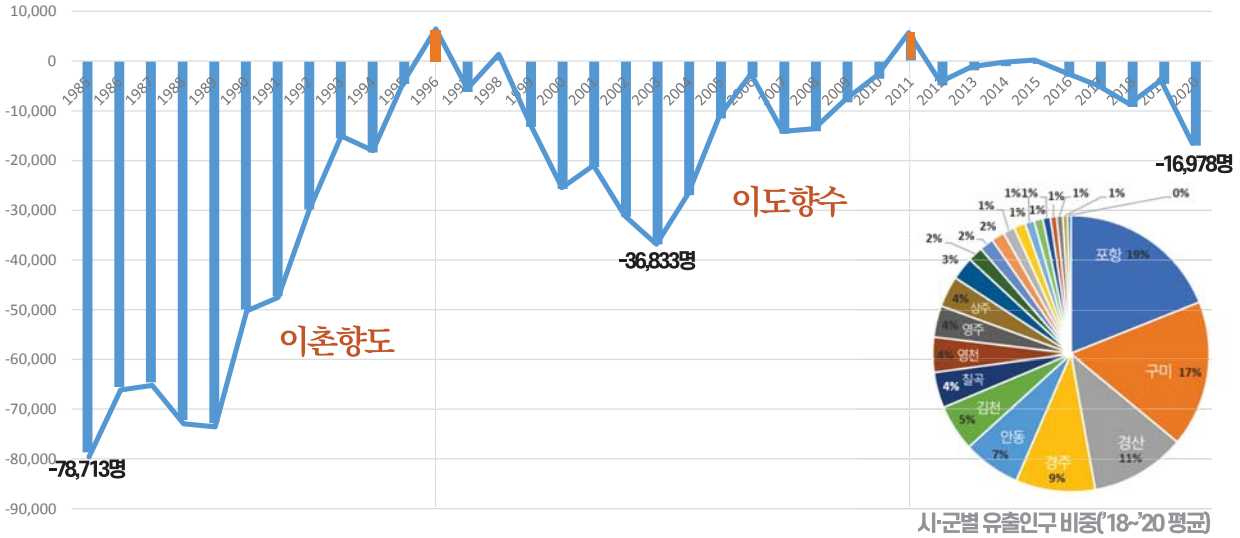
도시규모	시군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비고																												
경상북도																																		
1만 미만	울릉군	4	4	2	5	<table border="1"> <tr> <th>인구증감유형</th> <th>증감요인</th> <th>자연증감</th> <th>사회증감</th> </tr> <tr>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td> <td>-</td> <td>-</td> </tr> <tr> <td>5</td> <td>-</td> <td>-</td> <td>-</td> </tr> <tr> <td>6</td> <td>-</td> <td>+</td> <td>+</td> </tr> </table>	인구증감유형	증감요인	자연증감	사회증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인구증감유형	증감요인	자연증감	사회증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1만 이상 3만 미만	군위군	5	3	5	5																													
	청송군	5	5	6	6																													
3만 이상 5만 미만	영양군	5	5	6	6																													
	영덕군	5	5	5	5																													
	청도군	5	5	6	6																													
	고령군	5	6	3	5																													
	성주군	5	5	6	6																													
	봉화군	5	5	6	5																													
5만 이상 10만 미만	울진군	5	5	6	5																													
	문경시	5	5	5	5																													
	예천군	5	5	5	3																													
10만 이상 30만 미만	의성군	5	5	5	6																													
	경주시	4	4	5	5																													
	김천시	4	4	5	3																													
	안동시	4	5	2	5																													
	영주시	4	5	5	5																													
	영천시	5	5	5	3																													
	상주시	5	5	5	6																													
	경산시	2	1	1	1																													
30만 이상 50만 미만	칠곡군	1	1	1	4	★																												
	구미시	1	1	1	4	★																												
50만 이상 100만 미만	포항시	4	2	2	4	★																												

※'19년 기준 도시규모 24

07 | 경상북도 인구유출 흐름(1985~2020)

'85~'89년 1차 인구유출, '02~'04년 2차 인구유출
 최근 3년간 포항, 구미, 경산 등 시 지역에서 유출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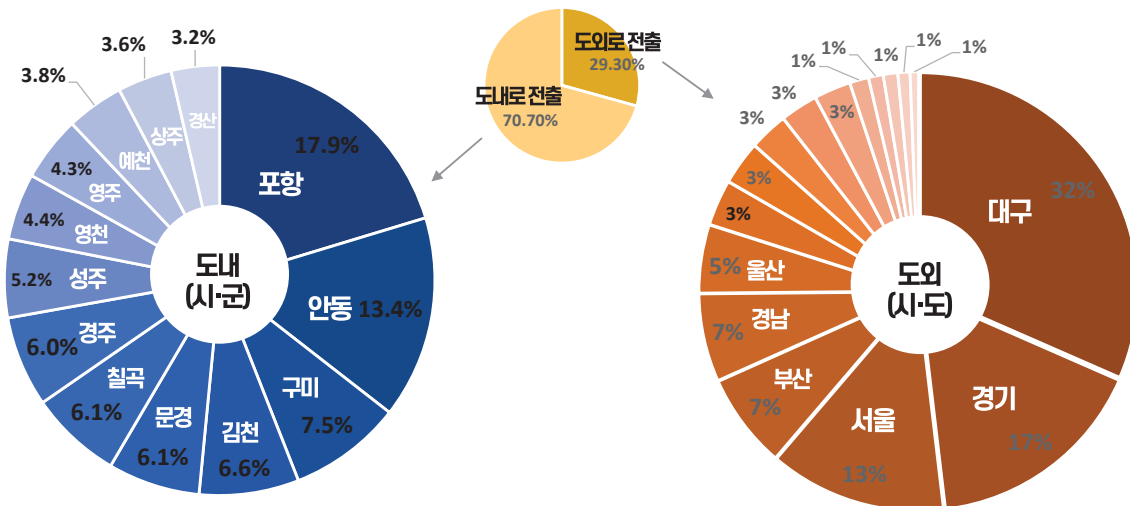
경북 순이동 패턴(1985~2020)



08 | 시·군별 인구가동 패턴 : 주요 유출지역

인구유출지는 도내는 시부로, 도외는 대구-경기-서울 순으로
 최근 3년간 도내 전입지는 포항-안동-구미-김천-문경 순

최근 3년간(2018-2020) 경북 인구가동 지역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가동통계(2018-2020년) 재구성
 주: 도내 전출지(시군에서 같은 시군구내 이동은 제외)

09 청년 및 중장년층 이동 양상

최근 3년간('18~'20) 연령대별 상이한 인구이동 양상

20~30대 청년층은 직업·교육 목적으로 유출...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주택 목적으로 유입

구분	3년간 순이동	20~30대 이동 양상(목적별)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계	-30,774	-3.1	-0.6	-2.1	-0.8	0.4
19세 이하	-6,725	-2.1	-0.1	-1.9	-0.3	0.2
20~39세	-43,743	-3.9	-0.9	-2.3	-1.2	0.5
40~59세	11,752	1.5	0.8	0.4	0	0.3
60~69세	7,384	0.7	0.4	0.1	0	0.2
70세 이상	558	2.1	1.2	0.6	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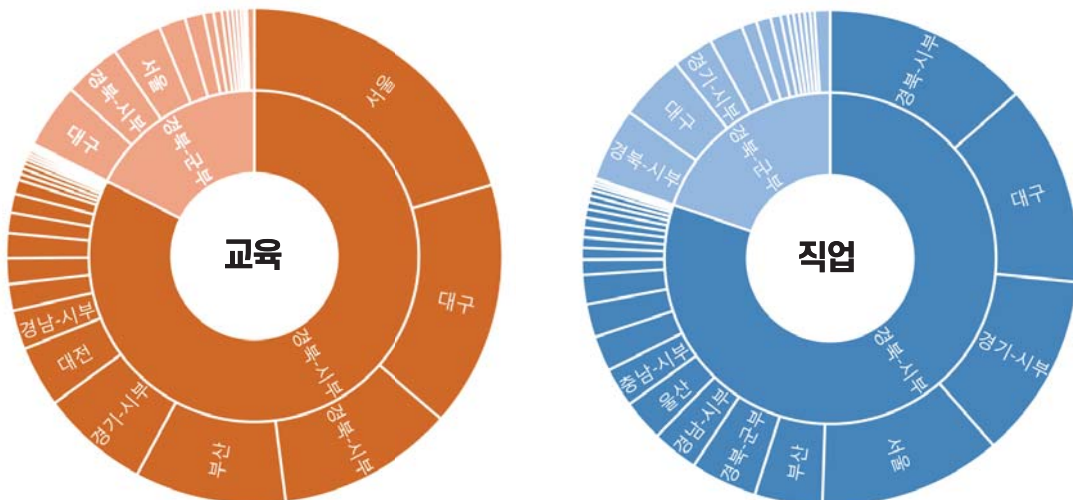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8-2020년) 재구성

10 20~30대 청년의 이동 목적지

[교육] 군부 청년은 대구-시부(경북)-서울, 시부 청년은 서울-대구로 이동

[직업] 도내 청년은 시부(경북)-대구-경기-서울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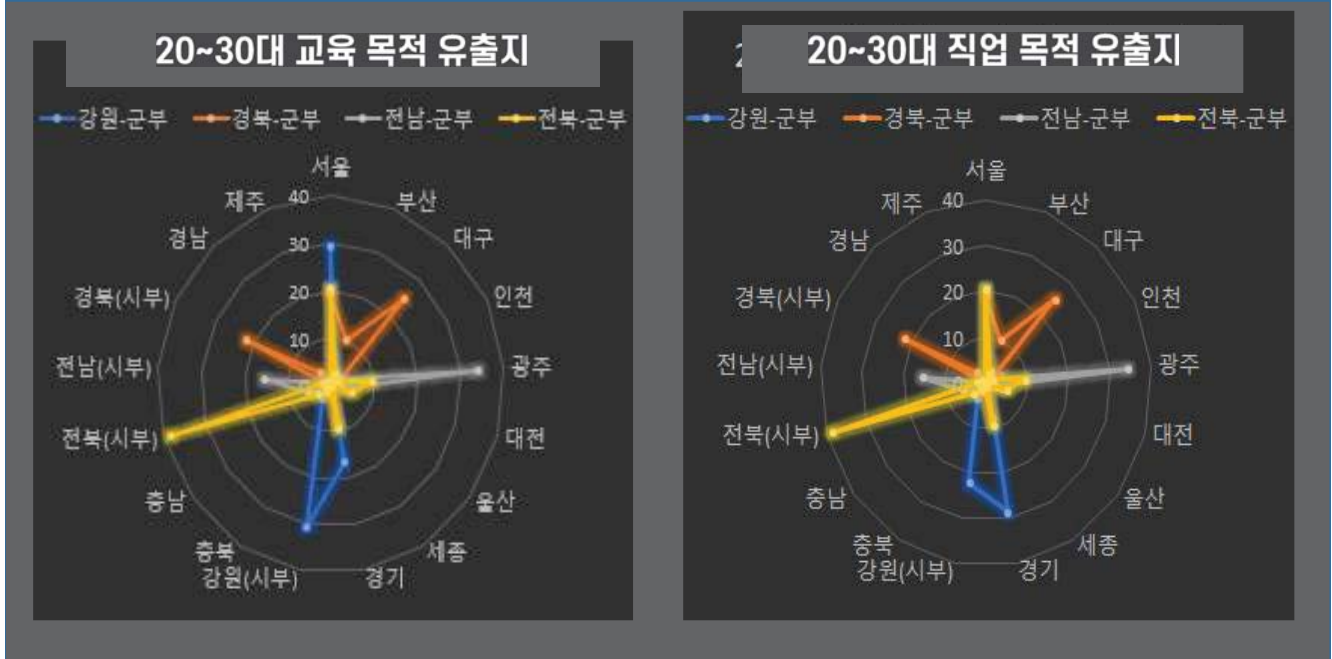
경북 20~30대 청년의 이동 목적지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8-2020년) 재구성

20~30대 청년인구는 지역별, 목적별로 상이한 이동 양상

강원도 청년은 수도권으로, 경북 청년은 수도권, 대구광역시로 이동



11 시사점

- 1

도내 시·군의 91%가 데드크로스 상태

 - 전국(66%)에 비해 훨씬 높은 인구감소세
 - '80년대 이후 1차 유출('85년 78,713명), '00년대 초반 2차 유출('03년 36,833명)

- 2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고령1인가구 급증 전망

 - '20~'40년간 전국보다 높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을 나타냄(전국 -23% vs. 경북 -30%)
 - 고령화율 : (2020년) 20.7% → (2037년) 38.1%, 고령화율 50% 이상 8곳 전망(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봉화)

- 3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주로 사회적 감소(자연적 감소)에 기인

 - 자연·사회적 감소로 인한 유형(유형5)이 18곳(78%)으로, 전국(52%)에 비해 높은 편
 - 소규모 군부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고착화 양상... 도내 시·군간 양극화 심화

- 4

20~30대 도내 청년들은 주로 대구광역시-수도권으로 이동

 - 경북 청년은 교육, 직업 목적으로 대구-수도권으로 이동, 반면 강원도 청년은 수도권으로 직접 이동
 - 50~60대는 군부지역으로 유입 양상을 보이며, 주택이 주요 이동사유로 작용

인구감소에 따른 경북 지역이슈와 과제

경상북도(2021.4~11),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발표자료를 기초로 작성

01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영향·이슈

인구감소 & 인구구조 변화



좋은 일자리와 지역활력 저하

주민 삶의 질 & 지역매력도 저하

지방재정 취약성 증대 &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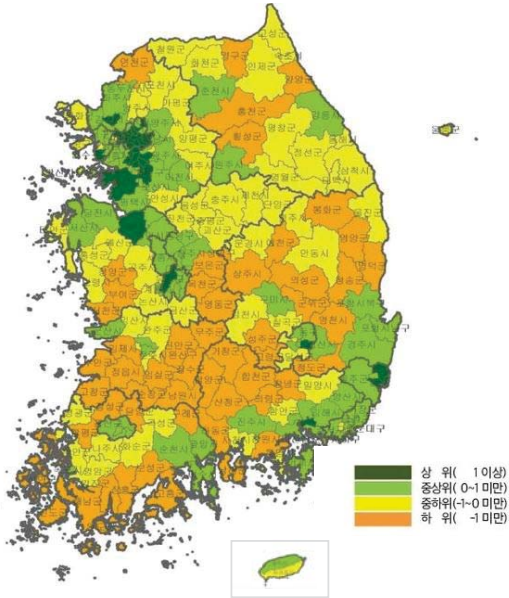
02 | 좋은 일자리 부족

좋은 일자의 82%가 수도권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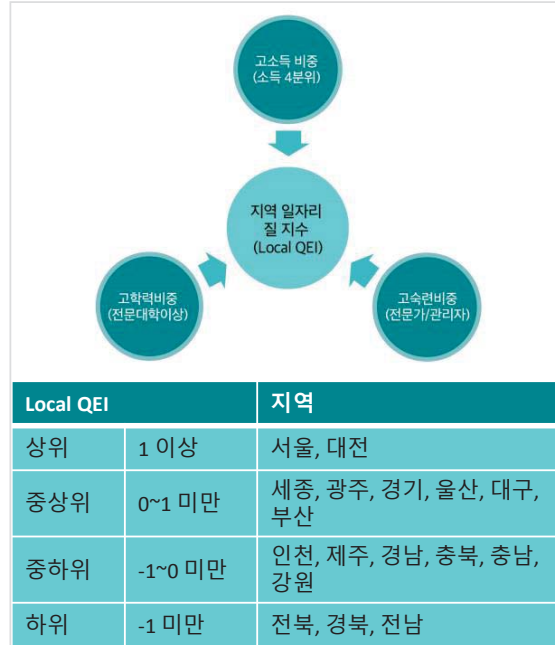
좋은 일자리 지수(Local QEI)가 광역지자체 중 하위 그룹...

포항, 구미, 경산 등이 도내 좋은 일자리 제공처

시군구별 일자리 질 지수 분포



자료 : 이상호(2019)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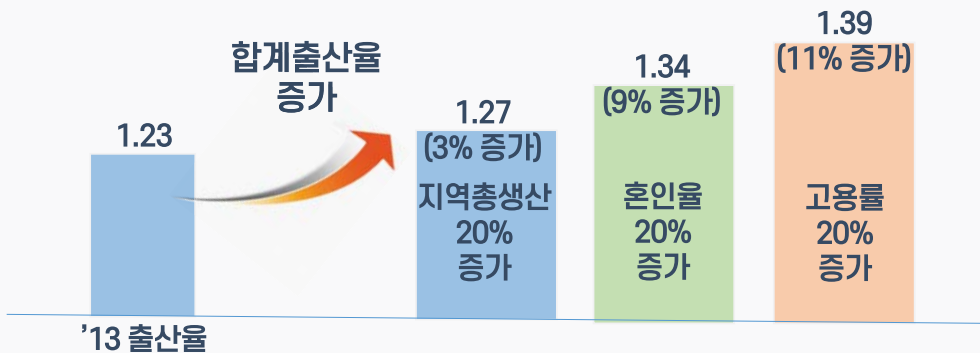
33

참고

일자리와 출산율 상관관계

출산율 증가에는 고용률, 혼인율, 지역총생산 순으로 크게 작용(경기도 사례)

기존 보육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 일자리 등 경제 중심 정책으로 전환



자료 : 김수연(서울대 보건대학원) 2021.07.19 국토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34

03 |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위기 직면

구미, 포항 등 전통적 산업도시의 위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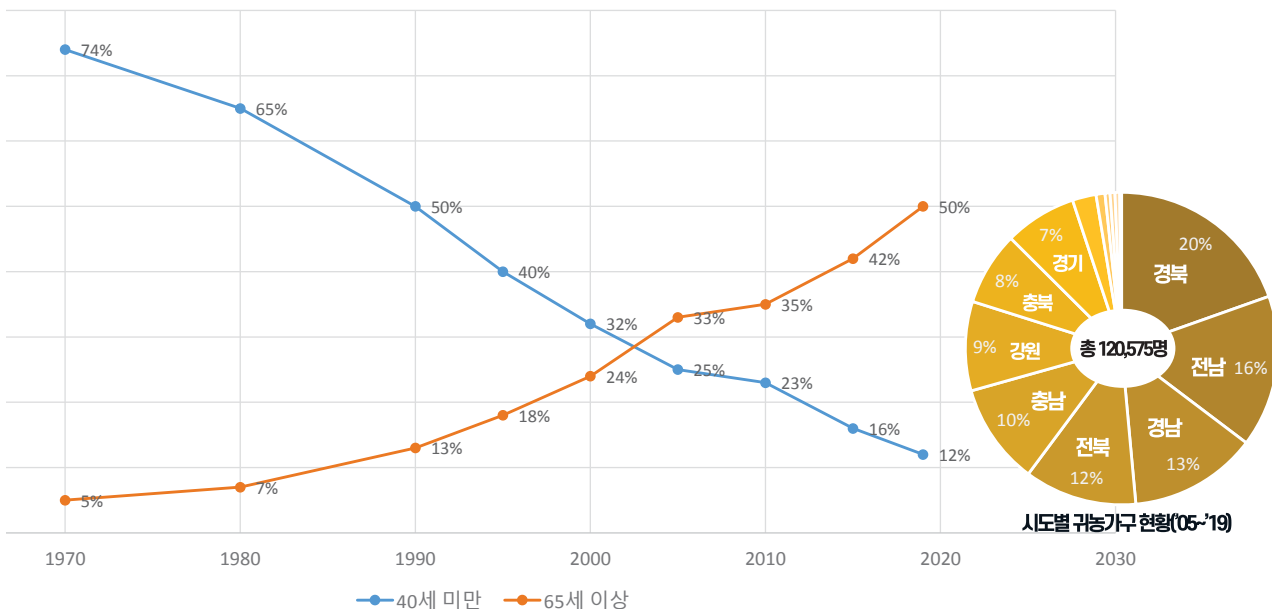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전환 대응 미흡... 조선업 위주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04 | 고령농가 증대와 귀농1번지

고령농가의 급격한 증가와 귀농가구 증대

귀농가구 전국 1위(05~19)... 2014년 이후 2,000명대 귀농가구 유입 지속



자료: 경상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자료

05 주민 삶의 질과 지역활력 저하

쉼터(도시공원, 녹지 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예천군의 지역발전지수가 현저하게 높아짐(16년 23위→'20년 9위)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 구미시 (56.8)
- 경산시 (46.5)
- 칠곡군 (44.1)
- 예천군 (42.9)
- 포항시 (42.5)
- 김천시 (41.4)
- 영천시 (37.6)
- 전국 평균(22.25)**
- 경주시 (33.6)
- 안동시 (33.3)
- 울릉군 (33.2)
- 울진군 (28.5)
- 성주군 (27.2)
- 영주시 (25.1)
- 상주시 (24.8)
- 문경시 (24.3)
- 영덕군 (20.0)
- 고령군 (19.4)
- 청송군 (18.9)
- 봉화군 (18.8)
- 영양군 (17.5)
- 의성군 (16.0)
- 청도군 (13.3)
- 군위군 (13.0)

[지표]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조출생률수

삶터: 생활서비스

- 구미시 (44.5)
- 포항시 (40.9)
- 경산시 (39.7)
- 안동시 (38.5)
- 칠곡군 (38.1)
- 경주시 (37.8)
- 영주시 (35.5)
- 전국 평균(35.36)**
- 문경시 (34.4)
- 김천시 (33.2)
- 예천군 (32.7)
- 영천시 (31.4)
- 청도군 (28.7)
- 고령군 (28.0)
- 상주시 (25.7)
- 영덕군 (24.0)
- 성주군 (23.9)
- 울진군 (22.5)
- 의성군 (21.4)
- 청송군 (21.2)
- 봉화군 (17.9)
- 영양군 (16.9)
- 군위군 (13.7)
- 울릉군 (8.9)

[지표] 노후주택비율, 공교육 기반, 의료서비스의 질 등

일터: 지역경제력

- 구미시 (46.6)
- 포항시 (32.1)
- 성주군 (30.6)
- 경주시 (30.2)
- 고령군 (29.3)
- 칠곡군 (28.9)
- 경산시 (26.5)
- 전국 평균(24.93)**
- 청도시 (24.1)
- 김천시 (24.0)
- 영천시 (23.7)
- 의성군 (18.6)
- 청송군(18.6)
- 울릉군(18.1)
- 군위군 (17.8)
- 안동시 (17.5)
- 봉화군 (17.5)
- 울진군 (16.7)
- 영양군 (16.4)
- 상주시 (16.4)
- 예천군 (16.1)
- 문경시 (16.0)
- 영주시 (15.1)
- 영덕군 (14.7)

[지표]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GRDP 등

쉼터: 삶의 여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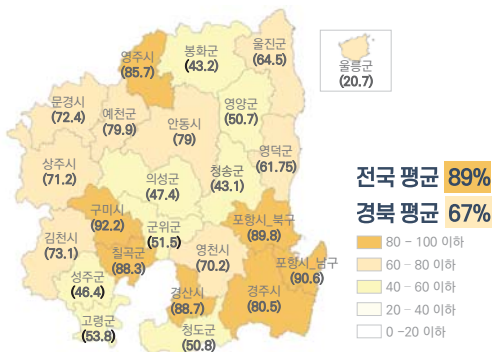
- 의성군 (43.6)
- 상주시 (39.5)
- 군위군 (35.7)
- 안동시 (35.5)
- 영덕군 (33.0)
- 문경시 (26.8)
- 청도군 (26.3)
- 봉화군 (23.8)
- 포항시 (23.7)
- 구미시 (23.6)
- 영양군 (23.4)
- 김천시 (23.3)
- 경주시 (23.1)
- 울진군 (22.4)
- 전국 평균(22.25)**
- 청송군 (21.4)
- 고령군 (20.8)
- 영천시 (20.8)
- 칠곡군 (20.6)
- 영주시 (19.0)
- 경산시 (17.4)
- 울릉군 (17.2)
- 성주군 (15.9)
- 예천군 (15.3)

[지표] 인구천명당도시공원면적, 녹지율, 문화기반시설 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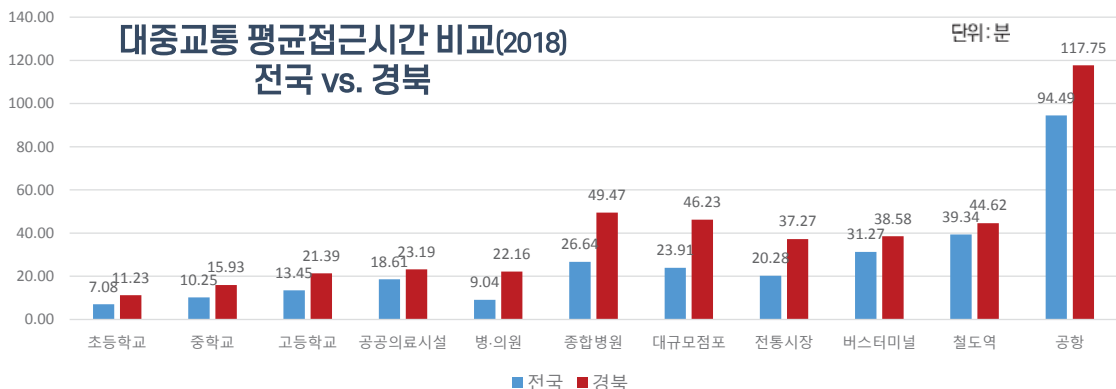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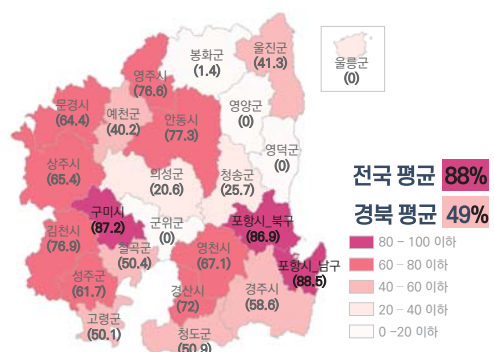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RDI 지수(전국 159개 기초생활권 대상) 37

06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현황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1km 내 영유아인구비율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10km 내 인구비율



자료: 국토정보플랫폼(2019년 기준 자료), 교통통계 DB

07 | 의료·건강인프라 수준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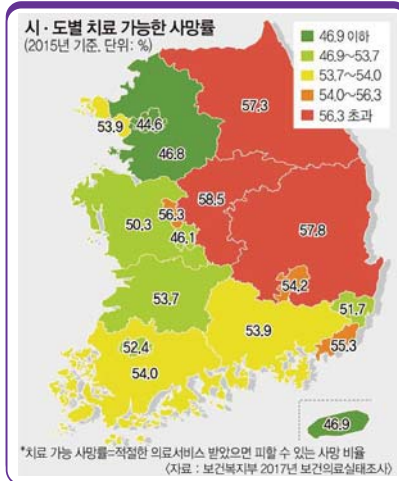
분만 취약, 건강수명, 입원사망비 등 지역의료건강 수준 열악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29.6명인 데 비해 영양군은 107.8명으로 3.64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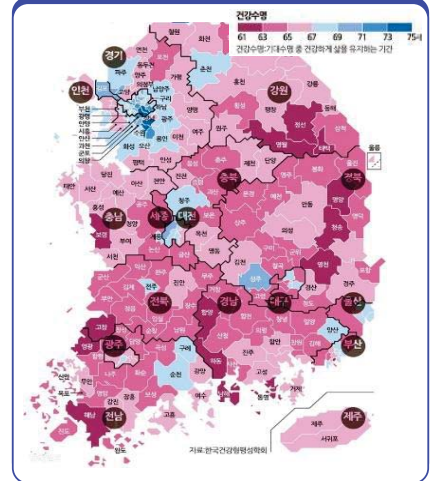
분만취약지역



치료 가능한 사망률



건강수명 지도



자료 :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매너투데이 POPCON 발표자료(2021.6.30)

08 | 인프라 노후화와 지역쇠퇴 확산

빈집, 폐교, 노후산업단지 등 인프라 노후화 확산

인구감소 및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

빈집 분포



자료 : 통계청 빈집실태조사(2019)

보유폐교 분포



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21)

노후산업단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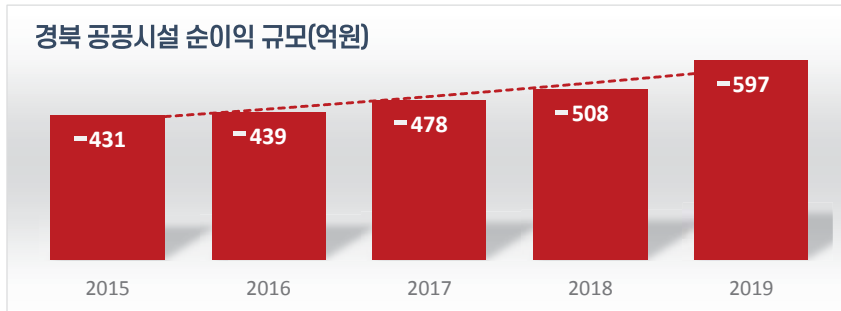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입지정보망(국토연구원, 2021.7)

09 공공시설 운영비용 적자폭 확대

도내 공공시설 운영 적자가 5년간 1.4배 증가

인구감소 → 시설 이용 수요 감소 → 시설 수 및 유지관리비용 증대 → 지방재정 취약



<전국 vs. 경북 공공시설 운영실태(문화·체육·복지, 기타시설)>

구분	전국	경북	전국 대비 (%)	비고
주요 공공시설수	863개소	82개소	9.5	· 건립비100억원 이상(기초), 200억원 이상(광역) ·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 시설
운영비용	1조 8,127억원	752억원	4.1	
운영수익	8,191억원	155억원	1.9	
적자규모	-9,936억원	-597억원	6.0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1.7), 2019년 자료

주: 경북 공공시설 운영의 순이익규모(2019년 기준)는 문화시설(-387억) > 체육시설(-137억) > 기타시설(-55억) > 복지시설(-18억) 순

10 지역 관광 실태와 낮은 소비력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농어촌 체험관광, 관광소비력 증진 필요

낮은 외국인 관광객 비중... 도농교류활동(농어촌체험활동)의 저조

-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방문지 : 경주시 > 안동시 > 영덕군 > 포항시 순
 - 도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만족한 활동은 '자연경관 감상',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순
 - 최근 5년간 경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지가 숙박여행 등의 체류형 관광이기 보다는, 당일 관광패턴을 보임
- 경북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2% 수준으로 매우 낮음

▶ 1인당 연간소비액('18년 기준) 15,852천원 기준

외국인관광소비액(1,422천원) 11명 해당,

국내숙박관광소비액(49천원) 324명 해당,

국내당일관광소비액(27천원) 587명 해당

주: 경북1인당 연간소비액('18년 기준), 외국인관광소비액, 국내숙박 및 당일 관광소비액('19년 기준)

자료: 김동영(2020)

일본 사례



정주민구
1명 감소분



외국인관광소비액
8명 해당

또는



국내숙박관광소비액
25명 해당

또는



국내당일관광소비액
80명 해당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체재·교류인구 증대의 지역경제효과

자료: 차미숙(2016)

경북의 대응 방향과 전략은?

행정안전부(2021.4~1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및 경상북도(2021.4~11),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발표자료를 기초로 작성

01 |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현주소 : 중앙정부 차원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둔 인구사회정책을 추진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 청년층에 집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3개 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
 - 목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 1차 계획(2006~2010)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 2차 계획(2011~20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 3차 계획(2016~2020) : OECD 국가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 제4차 계획에서 “지역” 관점 처음 포함
 -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을 통해 인구분산과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시책

- 중앙정부 부처: “저출산 대응”
 - 임신·출산지원
 - 육아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지자체: “인구 늘리기”
 -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
 - 저출산·고령화대책 위주 공동사업 추진 (중앙정부 보조사업 84.1%)
 - 출산 장려*와 청년인구의 유입에 초점
- * 합계출산율 여부 상관없이 출산장려금 등 공통 시책

범부처 인구정책 TF 및 인구감소지역

- 중앙부처 차원의 인구정책TF(‘19년 1기, ’20년 2기, ’21년 3기)를 구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
 - 2기 TF(2020) 부터 지역공동화, 지역소멸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대응 노력
 - 제3기 TF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 선제대응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9(정의) 개정 포함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군·구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개념 정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란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자립적인 지역발전이 어렵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

- * 지방소멸론(2014)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산, 고령화와 도쿄권으로 이동으로 인한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를 지방소멸 현상으로 지칭
- 지방소멸 위험지수(65세이상인구/가임여성인구)로 소멸위험도를 제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정책적 정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특별법안 제2조제1호)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일본의 과소지역지속발전지원촉진법(과소지역) :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가능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을 지칭하며, 시정촌을 대상으로 인구기준과 재정기준을 적용
- 인구기준: 인구감소율, 65세이상 고령자비율, 15세이상 29세이하 인구비율
- 재정기준: 재정력지수(기간내 평균재정력지수 0.56이하)
- 현재 선정된 과소지역은 820개(전국 시정촌의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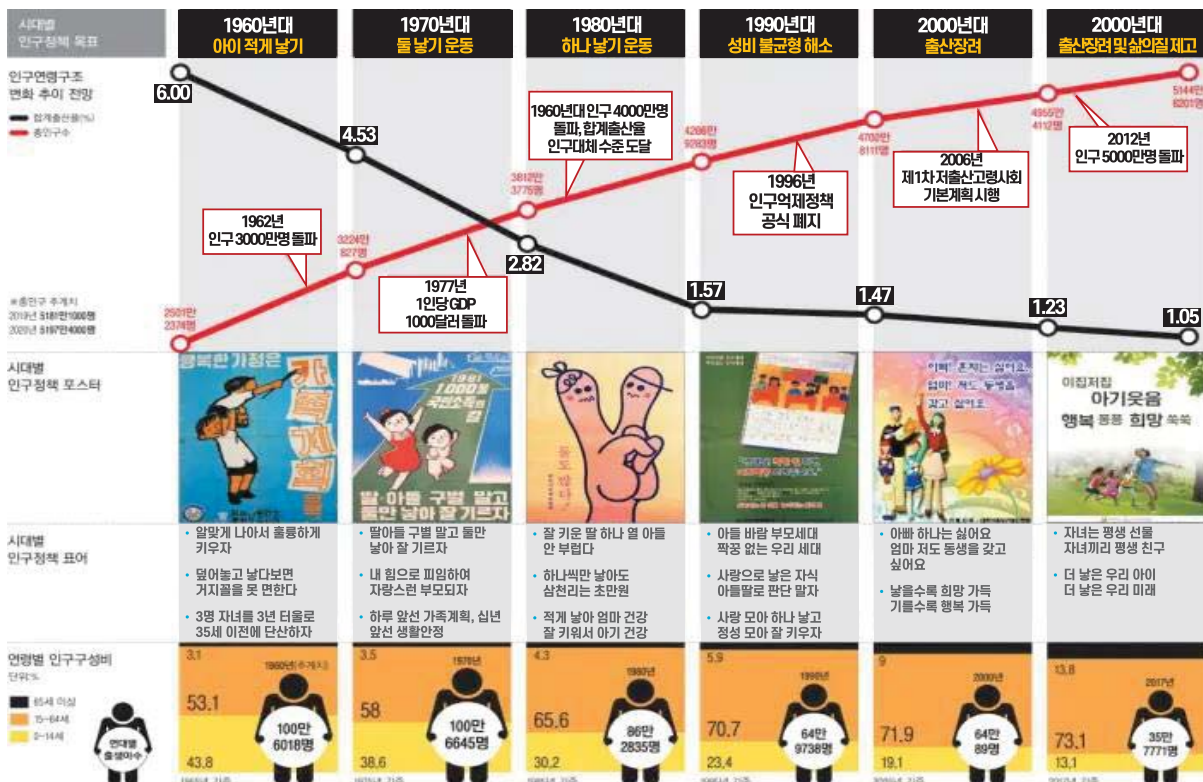
인구감소/지방소멸 특별법안 추진경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특별법안 국회 발의(6건)

- 2021.4.22 국회행정안전위 입법공청회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수행 중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기본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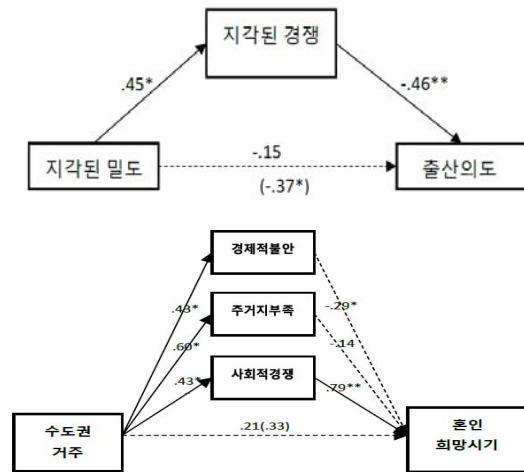
- 목적 :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지역 주도와 협력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도모
- ✓ 사람 중심 접근과 지역 중심 접근의 통합적 정책 지향
- ✓ 지역의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접근 및 분권 강화 지향
- ✓ 지역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 인구불리기 경쟁 탈피, 세대 간 조화와 지역순환경제, 유언거주 촉진
- ✓ 도시-지방간 교류 및 상생·공존 지향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리
- 지방소멸 위기대응 중앙-지방 추진체계
- 지역 주도와 중앙 지원의 계획수립 체계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시책과 특례사항
- 지방소멸 위기대응 재원조달과 협력협약
-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높은 인구밀도는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출산율 저하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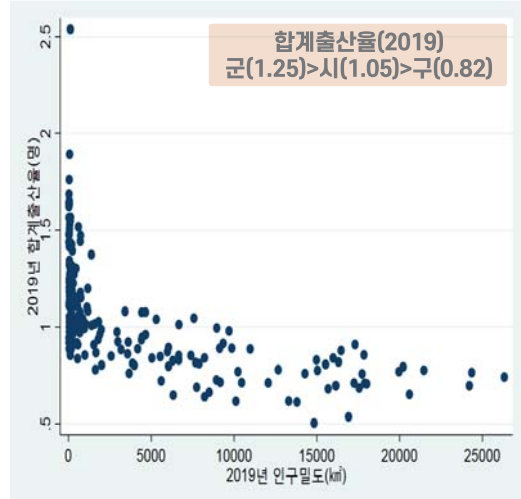
(1993~2017년 기간동안)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 (감사원, 2021)

높은 인구밀도 → 경쟁심화 → 저출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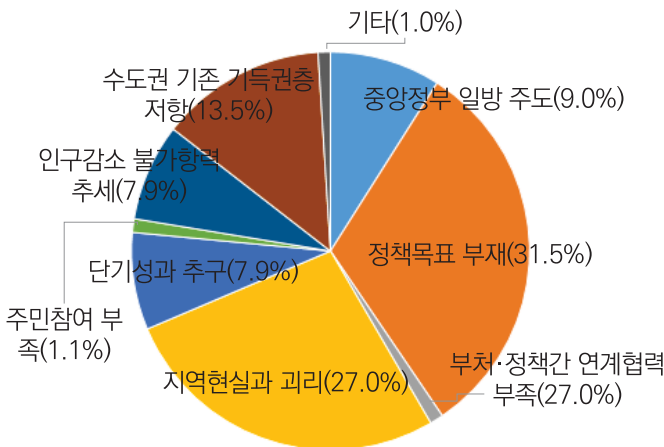
자료: 감사원(2021),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연구 결과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관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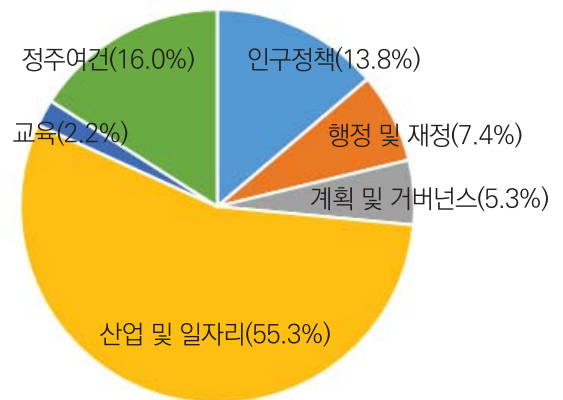


「기초지자체장 대상」 지방소멸 대응 제안

지방소멸 대응 정책 한계



지방소멸 위기 대응 고려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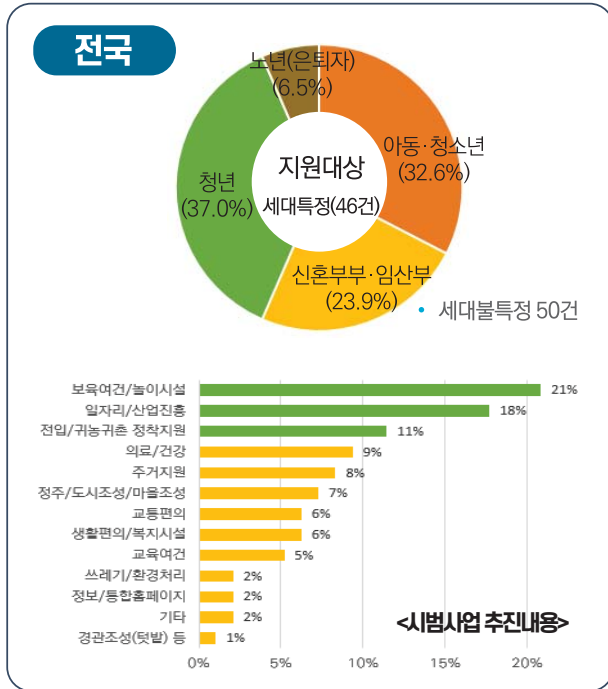


- (조사목적)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 (조사대상) 229개 시·군·구의 장 (응답 94명)
- (조사기간) 2021.1~2월 (e-mail 활용)
- (조사주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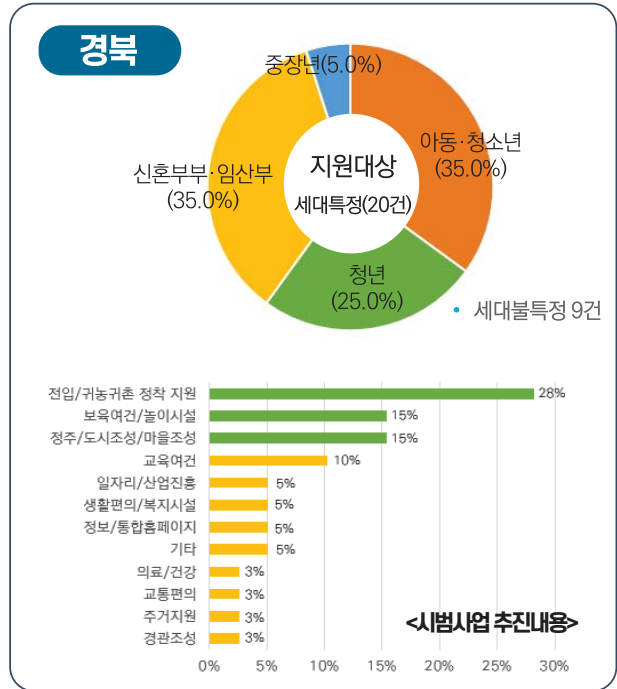
02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추진현황 : 지자체 차원

출산장려, 일자리, 귀농귀촌 등 다양한 시범 사업 추진 중

대부분 청년 대상... 출산장려, 일자리, 귀농귀촌 지원사업 위주



자료: 행정안전부 조사자료(2021.4-5)



49

03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추진사례

보육·교육 및 놀이시설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경북 영주)
- 출산축하용품 행복맘꾸러미 지원(경북 청송)
- 육아 종합센터 설치·운영(경북 상주)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창녕, 함양) 등



일자리 및 산업진흥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경북 칠곡)
-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경북 칠곡)
- 이웃사촌 시범마을-스마트팜 창농 지원(경북 의성)
-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전남 고흥)



고령군, 청년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자료: 지자체 수요 조사(2021.4-5)

03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추진사례

전입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경북 포항, 문경, 예천 등)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경북 청도 등)
-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경북)
-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전북 무주)

문경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

문경시청 | 010 9923231566 | 010 99231566

시범에 4억 원 확보 - 농사대아 영농 계획 공간 조성



청도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교육 및 간담회

청도군청 | 010 99231566 | 010 99231566



포항시 '전입자에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 지급'

포항시청 | 010 99231566 | 010 99231566

입주지원 100% 지원 - 임대주택 100% 확보 및 영농지원금 지급



무주군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서울시민 상대 정책설명회

무주군청 | 010 99231566 | 010 99231566



정주기반 및 마을조성

-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경북 의성)
- 농촌형 팜프라 조성사업(경북 군위)
- 행복 보금자리 조성(충북 괴산)
- 빈집 리모델링 지원(경남 함양)

편집자 사표 쓰고 차린 만둣가게의 '특별한 원칙'

함양군청 | 010 99231566 | 010 99231566



함양군, 귀농귀촌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



군위군, 경북도 인구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군위군청 | 010 99231566 | 010 99231566

저출산 극복 및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 2개 사업 최종 선정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괴산군청 | 010 99231566 | 010 99231566



자료 : 지자체 수요 조사(2021.4-5)

03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추진사례

의료·건강 및 생활편의 시설

- 구미 함께 살피미 앱 운영(1인가구 고독사 예방)(경북 구미)
- 비대면 영덕 아이맘 임신부 건강교실(경북 영덕)
- 산모·아기 돌봄 100일 대작전(경북 김천)
- 건강새마을 조성사업*(경북 청도 외 32개 마을)



교통편의 및 정보시스템

- 농촌형교통모델(천원택시) 운영(경북 청송)
- 인구정책 원클릭 통합홈페이지 운영(경북 구미)
- 임신부 아기사랑택시 운영(경북 영천)
- 버스공영제 추진(강원 정선)



자료 : 지자체 수요 조사(2021.4-5)

청년농부·교육생 모두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 언급

이외에도 “판로 개척”,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전담 중재기관”, “소규모 스마트팜 창농 지원” 필요성 언급

- (목적) '19.3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140억 예산)으로, 의성군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 (지원) 월 200만원 수당(교육생 1인당), 창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농비용 지원 등



(스마트팜 청년농부육성사업 워니팜 방문)

구분	사업명	연도	참여	정착
스마트팜	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2019(1기)	29명	8명
		2020(2기)	20명	교육 중
		2021(3기)	30명 모집	-

“ 대구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농촌지도사를 준비하다가 1기 수강생으로 참여, 오빠와 함께 창농해서 '20.12월 중순경 첫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워니팜은 600평 규모이며, 창농비용 일부는 지원받고, 나머지는 저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과 안계면 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안혜원 워니팜 대표)

“ 자분이 부족한 청년들도 쉽게 창농할 수 있는 '소규모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과 창농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생들과, 교육생-공무원 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담 중재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생에게 지원해주는 주거시설은 시설에 비해 세가 비싼 편이고, 그 외 적당한 가격에 청년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는게 어렵습니다. (스마트팜 3기 교육생)

경북 의성과의 연(緣)에서 시작된 청년 이주 프로그램 지원

해당 지역의 문화 및 자연환경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필요

- (목적) 도시청년의 의성군 정착 및 창업 지원
- (지원) 1인당 3천만원의 창업비용 지원 및 창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경북 의성 출신. 10여년 간의 영국 등 외지생활 후, '19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지원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요식업 창업을 준비했는데, 초기 창업비용과 유사업체와의 경쟁이 부담되고, 의성에 레스토랑이 없어 의성에서 창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창업비용을 일부 지원, '20.8월에 창업(흑자). 의성의 마늘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고, 향후 음식과 의성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클래스 오픈 예정입니다. 의성의 문화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연계하면 청년 유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준호 달빛레스토랑 대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수혜청년인양 송피출리더이 달빛레스토랑 방문)

구분	사업명	연도	참여	정착
창업지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2019(1기)	4명(2팀)	
		2020(2기)	3명(2팀)	
		2021(3기)	진행 중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지역 커뮤니티 진입·교통편·주거’ 지원 필요, ‘도-군 청년 간 중재기관 필요’ 등

- (목적) 도시청년이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의성에서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20.4월~현재 3기 운영)
- (운영주체 및 방법) (주)메이드인피플, 매기수 15명 선발 후 12주간(기초 6주, 심화 6주) 의성군 안계면에서 생활

“ 거주지·직장은 수도권이나, 도시 생활에 지쳐 쉬어 가고 싶어 의성에 내려오게 되었고, 대체로 프리랜서라 공간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현재는 의성에서 문화 등의 분야 관련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3기 청년들)

“ 청년들의 농촌 커뮤니티 진입 어려움, 차량·주거지원, 가로 등 설치, 군-도청과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단체, 청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진 및 3기 청년들)

지원자들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 출신입니다. 청년들에게 귀농, 귀촌 옵션 외에 우리는 지역을 알고, 재미, 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청년들에게 소속감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주)메이드인피플 대표)



사업명	연도	지원	참여	정착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 (청춘구 행복동)	2020(1기)	75명	15명	7명
	2020(2기)	111명	15명	5명
	2021(3기)	60명	15명	진행 중

지역의 유희자원(한옥, 적산가옥, 정미소 등) 활용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브랜드화

지역 맞춤형, 지역의 기회를 모토로 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례

- (목적) (주)리플레이스는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 사업(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통해 5명이 창업
- (운영주체 및 방법) 주요사업은 로컬 콘텐츠 개발(공간, 여행상품)이며, '21년 현재 직원은 15명(문경 출신 5명)
- (운영사업)
 -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 별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 봉오리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 대구에서 살다가, 창업을 위해 경북 지역을 탐색하였으나,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불친절해서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문경시로부터 유희공간(한옥)을 임대 받아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 저희는 “맞춤형, 지역의 기회”를 모토로 삼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15명의 직원 중 5명이 문경 출신이에요. 앞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이린 팀장)



04 |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간담회(2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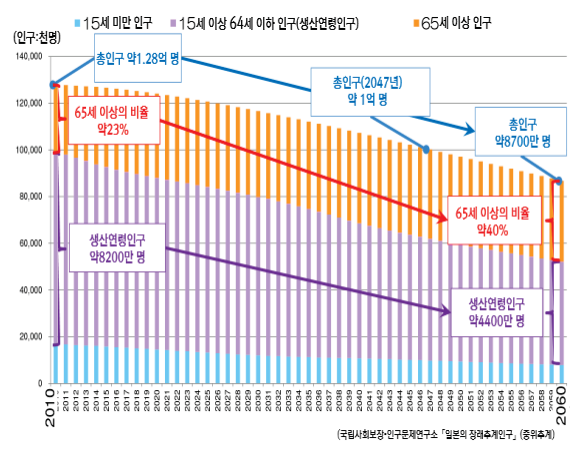
매일매일 출생아수, 사망자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3~4배 정도 많습니다.

예천 금당실마을은 전통 한옥마을 민박 체험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어요. 지역 고유의 매력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후 그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걸 보고 우리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은 출혈경쟁만 유도할 뿐입니다. 우리 지역은 재정이 취약해 주변지역처럼 장려금을 줄 수 없어 고민입니다.

해외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창생정책



지방소멸론(마스다 히로야, 2014)

- 2008년 인구정점 이후 본격 감소 추세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 무거주화·과소지역화

* 2040년까지 1742개 중 896개의 시정촌 소멸위기 전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

일자리
고용의 질·양 확보 및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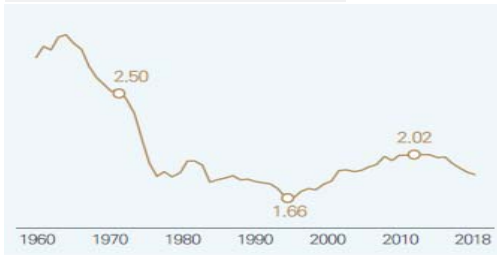
사람
인재·육성, 결혼·출산
·자녀교육 지원

지역
지역 특성에 따른 과제 해결

* 제1기 지방창생정책(4개) : 지역개발전략(3개), 저출산전략(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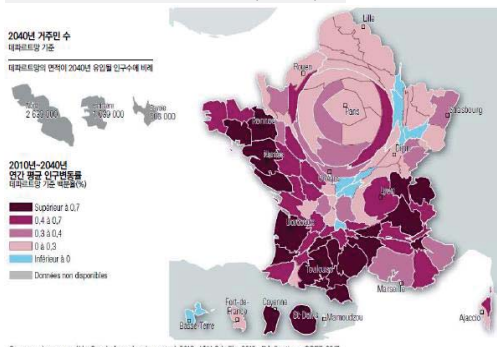
장기비전	▶ 미래에도 활력있는 지역사회 실현 ▶ 동경권 일극집중의 시정		
제2기 종합전략	기본목표	추진시책	횡단목표
	① 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 지역자원, 산업을 활용해 지역경쟁력 강화 ▶ 전문인재의 확보 및 육성 ▶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취업환경과 담당자 확보	①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추진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활약하는 지방창생 추진 ▶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추진
	②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만든다	▶ 지방이주 추진 ▶ 청년의 교육 및 취업에 의한 지방정착 추진 ▶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 ▶ 지방으로 자금의 흐름 창출 및 확대	②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한다 ▶ 지역 Society5.0 추진 ▶ 지방창생 SDGs 실현 등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③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어 준다	▶ 결혼·출산·육아 지원 ▶ 일·육아 양립 ▶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지역어프로치) 추진	
④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있는 지역을 만든다	▶ 질 높은 생활을 위한 마을의 기능 충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있는 지역 형성 ▶ 안심하고 생활이 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인적 지원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 지방창생공세주르 제도	재정 지원 ▶ 지방창생교부금제도 - 기업판교향세, 지방거점 강화세 연장등	정보 지원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1960~2018년)



• 1994년 1.66명 → 2010년 2.02명으로 상승

프랑스 지역별 인구분포 전망(2040년)



Sources : Insee, modèle Orphée, scénario central, 2010 ; IGM Geofla, 2015 ; Maktaton ; CGET, 2017

내일의 소도시 프로그램

- 소도시 내 교원연합체 중심의 자립 기반 마련
 - 소도시 지역 내 주민의 삶의질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 소도시 중심성 강조하고 다핵공간구조로 전환
 - 균형발전 차원의 중앙-지방 간 사업 연계

농촌활성화지역(ZRR) 선정·지원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 활성화
 - 지역 내 고용창출 기여 기업 대상 세제 지원(사회보장기여금 면세)
 - 지정기준은 평균이하 인구밀도, 평균이하 소비단위 과세소득 총족
 - 최근 지역 선정을 위한 등급 간소화, 공간단위를 교원연합으로 설정하여 등급 재조정
- 인구감소지역 교부금 차등지원 제공
 - 교부금 차등지원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인구수에 거주인구·관계인구·교류인구를 포함하여 산정

농촌의제를 위한 200개 제안



농촌의제 (Agenda Rural)

- 농촌지역을 위한 실행계획
 - (개요) 프랑스 전체인구 1/3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 인구유입을 위한 실행계획
 - (시기) 2019년 9월 총리 공표
 - (주무부처) 국토통합및지자체연대부 주관
 - (목적) 격차해소, 국토균형발전 “누구든지 ‘농촌지역을 포함한’ 국토공간 어디서든 거주하는 곳에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 (부문) 건강, 문화, 교육, 공공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 농촌의제를 위한 200개 제안의 주요내용
 - 건강 : 의료사각지대 해소(농촌지역 인터넷과정 의무화 등)
 - 이동성 : 농촌지역 15-25세 청년 운전면허 교습비 지원 등
 - 인터넷 : 5G 시범적용, 통신사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 교육 :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 재분류, 농촌협약 확대 보급
 - 공공서비스 : 30분 이내 공공서비스 접근성 보장
 - 일자리 : 장기실업 제로지역 시범시행, 확대 등
 - 주택 : 주거취약계층 지원의 상당부분을 농촌지역에 할당
 - 친환경 전환 : 환경유해기업과 지자체 참여의 오염물질환경 연대기금 조성, 농촌시설의 환경적 부가가치 고려
 - 청년 : 청년사회진입정책의 역할 강조, 농촌청년의 사회적 경제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활동 지원사업 홍보
 - 고령자 : 고령자 수용/환대방식 개선, ZRR내 사회보장제도분담금 면제

05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 출산율 등 인구의 양적 증대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은 매력적인 지역만들기로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

지역 주도의 분권형 지방소멸 대응

- 중앙정부 주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낮은 성과와 효과 저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짐에 따라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이 주도하는 종합대책 마련

People-oriented approach (인구사회정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목적)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
- (시책)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Place-oriented approach (지역발전정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정책
- (목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 (시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혁신도시 등





목표	전략	주요 정책과제(예시)
건강한 경북	①출산·보육여건 개선	출산장려 국가책임제,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운영 등
	②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	농산어촌 유학·교류체험 촉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등
	③생활인구 확보와 유연거주 확대	생활인구 확충 및 대상별 유치·지원, 세컨하우스 등
	④건강·안심 생활기반 조성	경북형 마을주치의 확대, 커뮤니티 기반 건강마을 조성 (CCRC 등),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
활기찬 경북	⑤좋은 일자리/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공공기관 유치 및 위성오피스·워킹스페이스 지원 등
	⑥창농 지원 및 소득 창출 기반	청년농부 육성, 로컬푸드 생산유통 마을 조성 등
	⑦지역대학-지자체 협력 강화	외국인학생 체류 및 정착 지원, 지역대학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리빙랩) 운영 등
	⑧로컬 기반 비즈니스 모델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육성 등
매력적인 경북	⑨주거·생활·교통 등 정주기반 조성	주거지원, 교통 및 이동성 증진 지원, 생활편의 지원 등
	⑩지역경관 개선 및 특화 브랜드 육성	경북형 산림활용 모델(리틀포레스트, 클라인가르텐 등), 경북 문화·관광 브랜드화 지원 및 공동 마케팅 등
	⑪노후·유휴시설 활용 및 공간 재생	빈집 플랫폼 연계 운영, 폐교 활용 촉진, 지역공공시설 종합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등
	⑫생활권 설정과 연계협력 촉진	지역주도 생활권 설정 및 협력 촉진 등

부록

지방소멸 대응 지원시책 발굴 지자체 수요조사

01 | 지자체 수요조사 개요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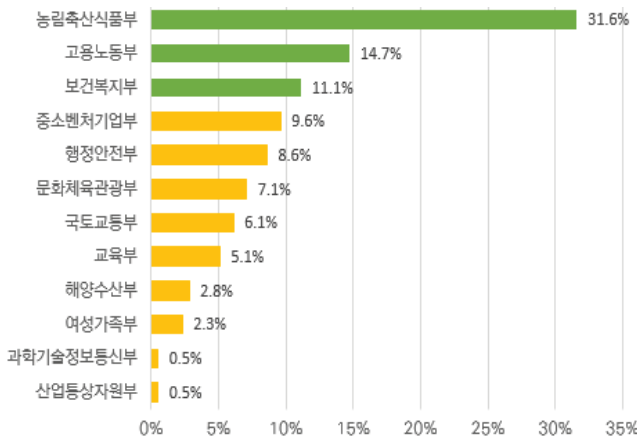
- ✓ **조사목적**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시책 발굴 수요조사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제안
- ✓ **조사기간** : 2021년 4~5월 중
- ✓ **조사대상** :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대상
- ✓ **조사방법** : 행정안전부 행정시스템(온라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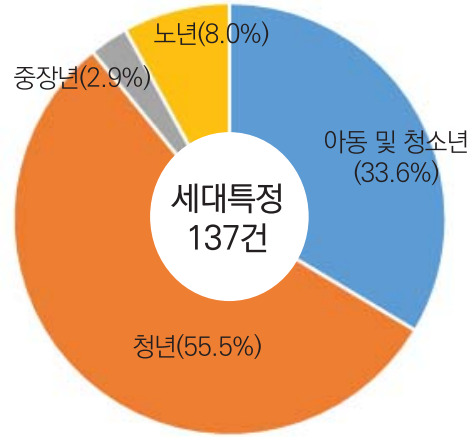
02 |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희망 사업 제안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일자리 확충사업 희망

부처별(농림부·고용부·복지부 순), 세대별(청년·아동청소년 순)



<주관부처별 제안사업>



• 세대불특정 258건(65%)

<지원 대상별 제안사업>

03 | 지방소멸 대응 지역특화 및 신규 시책 제안

구분	제안 사업명(예시)	지자체수(중복)
일자리 및 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지원 지역특산자원 활용 '얼굴있는 로컬푸드형 융복합 상품' 개발 지역 온라인몰 모바일 할인권 연계 등 	33건
보육·교육여건 및 놀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주 공동 돌봄나눔터 조성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 등 	26건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커뮤니티센터(동아리방) 조성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16건
정주기반 및 마을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청년특화거리 조성 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참여자 공유공간 조성 등 	14건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목적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아트트랜스포머(예술극장으로 변신하는 이동차량) 어르신 대상: 추억의 영화관 상영 등 	11건
전입, 귀농·귀촌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활력센터 및 셰어하우스 조성 도시민 체험농원 조성 및 체류형 가족정원 조성 등 	10건
교통편의 및 도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콜택시 이용지원 여촌공동체 온라인 시장 진입 유통비(택배비) 지원 등 	10건
의료·건강·치유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솔비치 공동스포츠 건강도시 운영 식생활 증진 스마트센터 구축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육 활성화 혁신 교육지구 조성 등 	10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주거시설 신박한 정리지원 각종 현금성 지원 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12건
총계		1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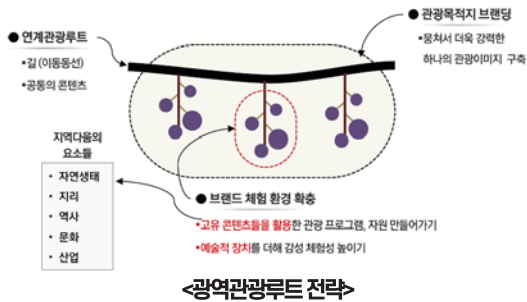
04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제안

지역브랜드 공동 개발

- 컬러로 같이하는 가치증대사업(경북 청송)
- 지역특산물 발굴 및 식문화 창출(강원 삼척)

관광개발 및 체류인구 유치

- 섬진강 생활권 중심 통합관광벨트(경남 하동, 전남 곡성)
- 속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경북 상주)
- 경북 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경북 영주)



시설 공동이용

- 산-휴 건강증진센터(전북 김제)
- 폐광지역 단기 청소년쉼터 조성(강원 삼척)
- 치매안심병원 건립(경남 의령)
-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전남 완도)
- 화장장 건립(경북 영주)
- 내포신도시 시설 공동운영관리(충남)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충북)
-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전남 완도)
- 시외거점시설 이용 운영 지원(경남 합천)

도-농 및 지역간 연계

- 삼척 워킹홀리데이 도입(강원 삼척)
- 시군 경계지역 농로 및 배수로 등(전북 고창)
- 함창·낙동 생활권 농촌협약(경북 상주)

05 규제개선 및 특례 제안

구분	규제개선 제안명(20건)
농림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막 용도규제 완화 • 후계 농업경영인 대상자 연령제한 규제 완화 • 농어촌 민박사업 기준 완화 등 6건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통합 보육 • 보육시설 없는 인구감소지역 만3세 유아 병설유치원 학기 중 입학 허용 등 5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경로당 이용기준 변경 • 인구감소지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완화 • 문화재 발굴 조사비 지원대상에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 포함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 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 수익계약 체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기부 기탁 절차 개선(행정안전부)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국토교통부) • 소기업 진흥에 관한 특례 확대(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사업명	내용
경상북도 (1건)	• 지역인구감소 위기극복 패키지 지원사업	•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국가보조사업(9+4) - 일자리+주거+문화보육의료+지역개발+청년유치+공동체강화
영주시 (1건)	• 청년마을 스타트업 지원	• 일자리-주거-양육-여가공간-교통 패키지 청년마을조성
상주시 (1건)	• 청년 농부가 상주하고 싶은 보금자리 상주	• 청년센터 운영,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금자리 조성 등
군위군 (1건)	• 경북 군위형 청년마을 기델언덕 조성사업	•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집적된 One-Stop 공간 구성
의성군 (12건)	• 지역인구감소 위기극복 국고보조사업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지원사업	• 스마트팜 기술 및 정착 지원, 주거부담 완화, 출산·육아 지원 등
	• 마을이 메우는 틈새돌봄 공동체 e-Land	• 지역아동센터지원, 방과후활동, 다함께돌봄, 중장년취업 등
	• 윈스톱 청년 창농·업·정착 활성화 사업 등	• 청년센터+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사회적기업 육성
청송군 (1건)	• 지역기반활력 회복사업	• 통리읍면동 대상 정주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영양군 (1건)	• 체류형 가족 정원 조성사업	•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주거공간 조성·정주여건 개선
성주군 (1건)	• 살기좋은 성주 조성사업	• 공단 신·증설 및 이전기업 유치, 창농,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울릉군 (1건)	• 청년정착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구분	사업명	내용
경상북도 (1건)	• 농촌형 청년 특화거리 조성	• 소공원 조성, 청년 창업사업 연계, 지역민 프렌차이즈 입점 지원 등
안동시 (1건)	•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	•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경북형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개발 구축
영주시 (1건)	• 주차장 조성(보행친화환경조성)	•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차부지 확충을 위한 주차장 조성
상주시 (5건)	• 왕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노후화된 골목상권 시설 개보수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제공
	•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 지원	•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실증단지, 보금자리 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으로 청년 창농 활성화 도모
군위군 (3건)	• 경북 멀티미디어 콘텐츠 청년캠퍼스 조성사업	• 비대면 시대 대응 지역문화관광 콘텐츠와 멀티미디어의 융복합
의성군 (1건)	•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협업 JOB	• 로컬푸드 창업연구소, 사회적기업x청년협업 "로컬물류 집하장 사업"
청송군 (3건)	• 지역자원연계 창업지원학교 운영	• 산림분야 창업희망자 선발 및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 실시 등
	• 지역자원연계 창업지원사업	• 청송의 청정 환경, 청송 슬로건인 산소 관련 사회경제사업체 설립
영양군 (2건)	• 도시민 체험농원 조성사업	• 정주민,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공간 및 농업체험시설 등 조성
	• 농촌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확충	• 고령농가 및 중노년 구직자를 위한 인력지원, 일자리 안내 등
성주군 (1건)	• 성주역 신도시 디자인 설계 용역	• 디자인된 계획형 신도시 조성 기반 마련으로 인구유입 토대 마련
봉화군 (1건)	• 다목적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 숙박시설 및 청소년 이용 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
울릉군 (1건)	• 울릉자생식물 식재공원 조성	• 자연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장, 여가생활 공간 조성

구분	사업명	내용
예천군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라벨 지역거점센터 조성-유휴시설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소공원 조성, 담장 및 거리 채색, 통일된 디자인 간판 정비, 청년 창업사업 연계 지원, 지역민 프렌차이즈 입점 지원 등
영주시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 • 영주시 화장장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경북 동북지역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이용 가능한 시설 설치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상주시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 합창·낙동 생활권 농촌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과 경북의 공공 연계사업 개발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상주시 합창, 낙동권 생활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
청송군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러로 같이하는 가치증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송군과 영양군의 함께 생활하는 전통적 생활권 가치 회복 - 그린, 화이트, 옐로, 레드, 실버를 활용한 가치증대사업 실시

구분	사업명	내용
경상북도 (2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및 청년커플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만 15~39세, 커플은 부부)대상 정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수당 국비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경제 순환을 위한 농민수당 국비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원목욕탕 국비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목욕사업장의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향 수요자 트렌드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형 은퇴자 의료복지마을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후 생애주기를 고려한 의료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을 이용한 놀이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한 유아, 어린이, 학부모가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결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관광지와 연계하여 인구소멸지역 장소제공 및 결혼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준비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직장인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직장인 대상으로 전입 신고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입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임신부(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준비 중인 여성 대상 건강검사 및 엽산제 지원 등 건강관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위성오피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 및 자연휴양시설 활용 사무실 및 커뮤니티(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아동 건강증진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을 통한 아동 체력데이터 분석 및 개인별 건강맞춤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환경개선 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및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인프라 조성,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청년 유치 	

구분	사업명
포항시 (1건)	•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실적지원금 지원사업
경주시 (1건)	•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
김천시 (1건)	•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100일 대작전
안동시 (1건)	• 가족친화 프로젝트
구미시 (2건)	• 인구정책 원클릭 통합홈페이지 운영
	• 구미(GUMI) 함께 살피미 앱 구축운영
영주시 (1건)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조성
영천시 (1건)	•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 운행
상주시 (1건)	• 육아 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경시 (1건)	• 문경 전입장학금 지원
경산시 (1건)	• 수성*경산 동일생활권*동반성장 프로젝트

구분	사업명
군위군 (2건)	• 군위 패밀리(Family+Infra) 조성
	• 군위 인재양성원(공립학원) 운영
의성군 (1건)	• 미래 교육지구 운영
청송군 (1건)	• 출산축하용품 <행복 맘꾸러미> 지원사업
영양군 (1건)	• 인구증가 정책사업
영덕군 (1건)	• 비대면 영덕아미맘 임산부 건강교실
청도군 (1건)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성주군 (1건)	• 농막규제 자체완화로 군민 편의제공
칠곡군 (2건)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 칠곡군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
예천군 (4건)	• 예천군 여성회관 리모델링
	•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
봉화군 (1건)	•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울릉군 (1건)	• 울릉군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운영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지방중소도시 쟁점

■ 김용현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경상북도 지방 중소도시의 쟁점¹⁾

- 인구, 산업, 고용 일자리를 중심으로 -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

<요 약>

- 경북 중소도시 쟁점 : 인구감소(고령화, 저출산,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양적인구 감소), 직주불일치, 생산성 및 일자리 감소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시대 경북의 정책대응 역량과 준비는 많이 미흡한 수준
- 관계 및 유동인구를 향상하는 듀얼라이프(두지역살기) 정책화 및 추진체제 마련
 - 인구 2원화 정책(자연인구+사회인구(관계 및 유동인구 증대, 듀얼라이프))
 -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듀얼라이프 정책 추진, 경북도-시군 연계 인구정책 추진 체제 마련, 지역 인구 흐름 강화 정책 필요
 - 1시군 1듀얼라이프 모델 발굴 지원, 복수주소제(직주불일치 해소), 빈집은행 등 제도 정비
- 지역형 일자리 모델 정립 시행(1시군 1일자리 프로젝트)
 - 경북지역 시군단위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심 상향적 수요형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시행

1. 중소도시 개념

■ 개념 및 논의의 필요성

- 중소도시의 개념 불명확
 - 중소도시는 지역의 크기나 인구 규모가 중간 정도인 도시
 - 도시의 규모는 학자에 따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규모는 인구를 통해 정의
 - 중소도시로 상정 가능한 **최소 인구를 5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인구의 최대범위에 대해서는 3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로 다양²⁾
 - ※ 중소도시는 학자에 따라, 목적에 따라 정의하는 범위도 다르고, 같은 중소도시의 범주에 묶였다 하더라도, 각 도시마다 처한 상황은 상이. 지역에 따라 수도권 중소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구분 하거나, 도시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의 의도적인 투자로 생성된 중소도시와 자연 발생적인 중소도시로 구분
- 다양한 형태의 도시화 추세
 -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시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있지만, 각 도시마다 인구증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중소도시, 광역시 주변 중소도시는 주변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인구 20만 명 이하의 자연 발생적인 지방 중소도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

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발견과 시각 차원에서 경상북도 지방 중소도시의 쟁점을 검토
2) 경기도에 27개로 가장 많은 도시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는 50만 이상 도시가 1개, 40만 이상 도시 또한 1개에 불과하며, 20만 도시 2개, 10만 도시는 5섯 개를 나타냄.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처럼 인구가 100만 명을 넘거나 성남시, 부천시와 같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처럼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 않는 도시도 있음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와 상주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 교통문제, 도심지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소멸위기 지역 발생, 이의 해소 위한 지방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 방향

○ 중소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과 유형별 정책 추진 필요

- 중소도시는 일반적으로 도시체계상 인구규모 분포에 따라 일정 규모의 도시를 의미하나 최근 도시체계가 단위 도시 중심에서 도시권(city region)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소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필요
- 지방중소도시를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의 비수도권 도시로 정의하되(2010년 기준), 도시의 산업 구조,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유형구분 시도(40개 도시 대상) 필요

■ 지역균형발전에서 지방중소도시 소외³⁾

○ 지방 중소도시는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

- 지방중소도시는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 여기에 거주하는 지방보통시민⁴⁾에 대한 정책배려도 사실상 취약
-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3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 심화
- 인구감소로 인해 고용감소, 재정력 감소, 행정서비스 약화, 삶의 질 저하 등 초래
- 세계화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국토공간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대도시권-농어촌'으로 재편

○ 산업구조고도화, 교통발달은 지역중소도시의 어려움 가중

- 지방중소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및 도심공동화 생활권 확대 등은 지역 중소도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지역중심, 도시 중심의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은 점차 약화, 정부의 지역공동체 사업 강화를 통한 지방중소도시 활력 증진 필요

2. 지방소멸 위기⁵⁾ : 지역 중소도시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구조변화 : 인구감소, 인구 구성의 불균형

○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이지만 그 영향은 온전히 지방도시 위기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2020, 0.84)이 1이 되지 않으며, 2025년에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 저출생

○ 2020년 인구의 데드크로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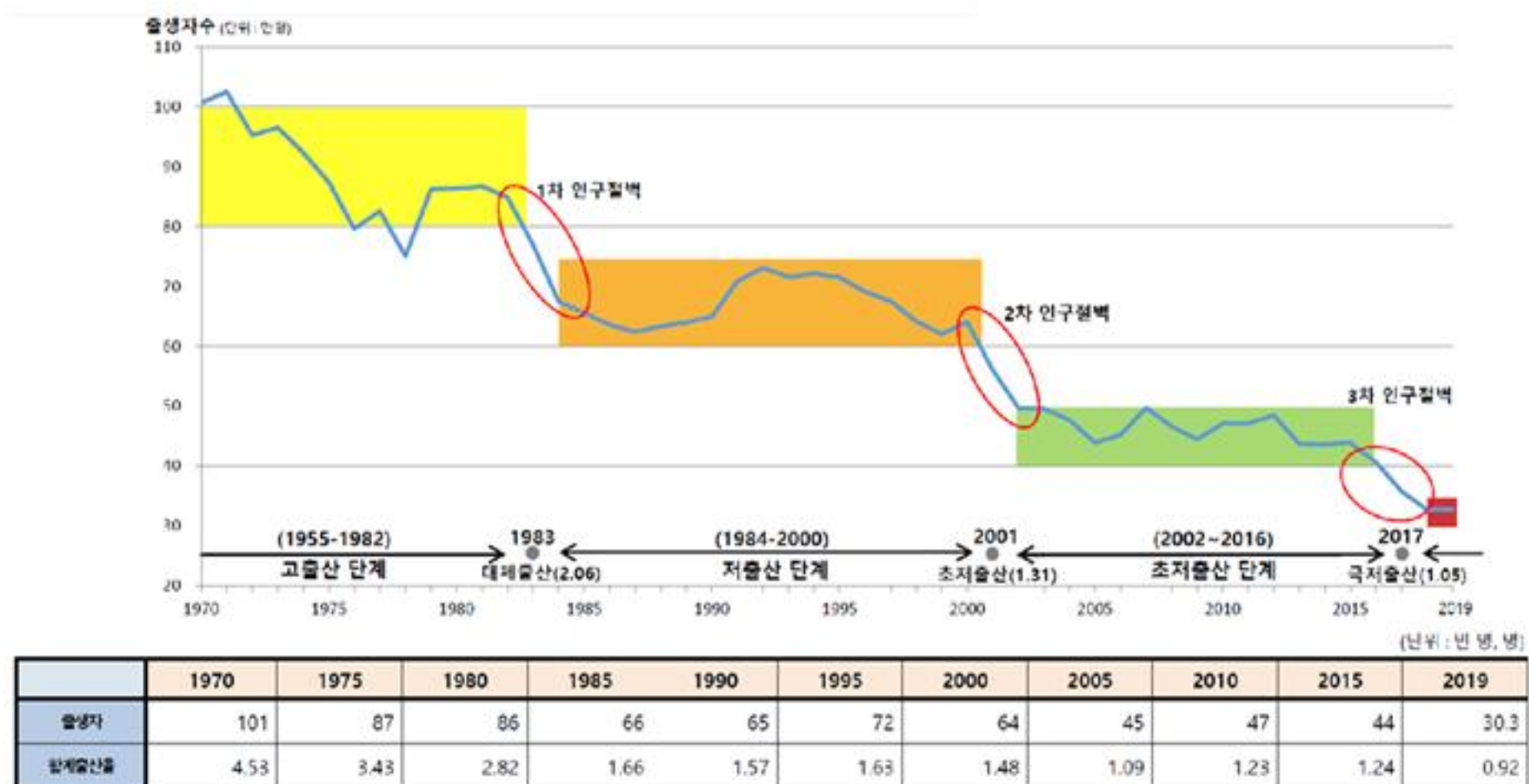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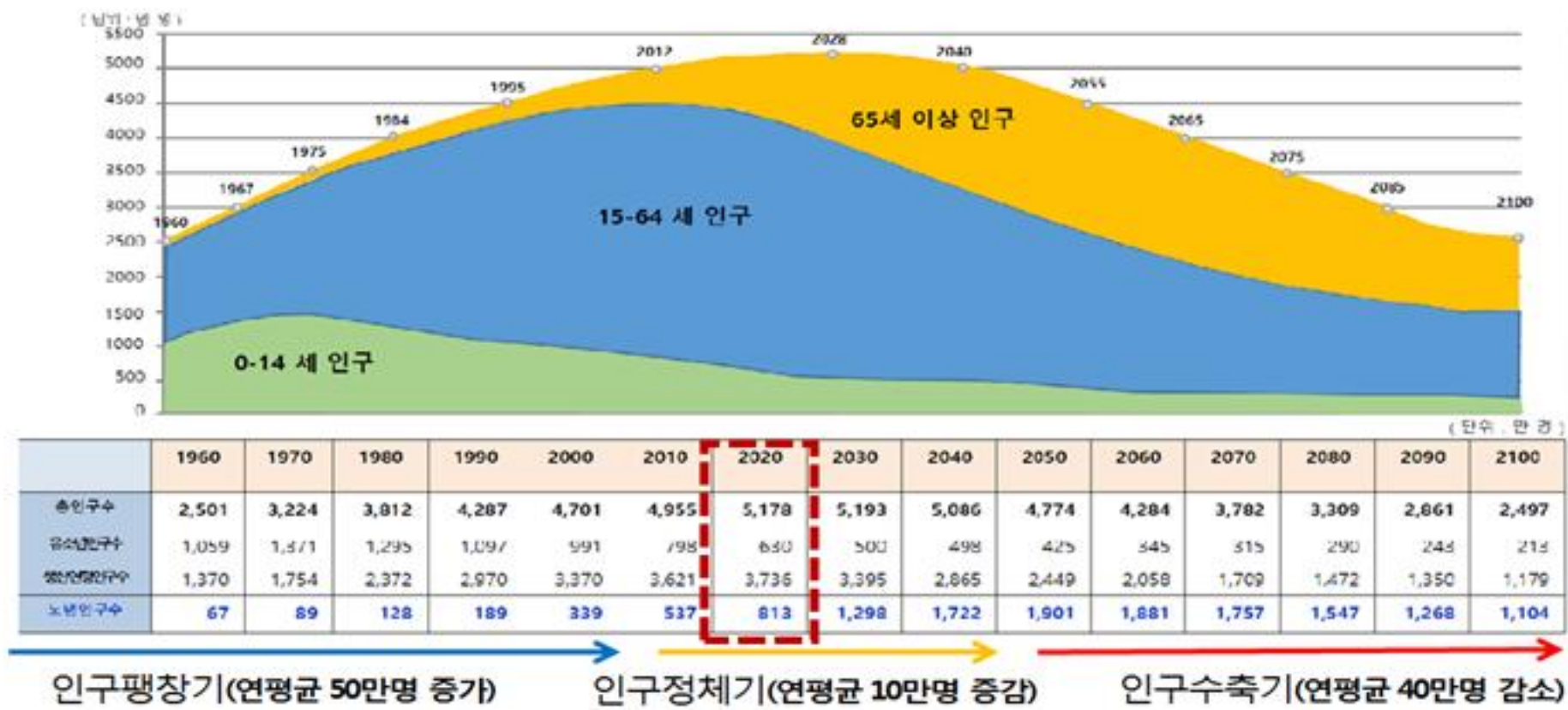
-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전년대비 20,838명 감소. 노동인구가 2040년 까지 17% 줄어 들 것이란

3) 대구경북연구원, '대한민국에 지방도 있다'(2011)에서 지역중소도시 혹은 지방보통시민으로서 삶의 질과 정책방향을 논의(지방보통 시민의 행복한 삶, 지방 산업에 활력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4) 서울특별시민, 서울보통시민, 지방특별시민, 지방보통시민으로 구분

5) 지역산업 및 고용정책 성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확인 가능, 이상호, "지역소멸위기현황과대안적정책방향", 대통령 직속일자리특별위원회 발제 자료, 김용현, 「대구경북 일자리 구조의 특성과 현황 및 정책대안」(2020).

전망이 있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경험



<그림 1> 인구구조 변화와 출생자수 변화

■ 고령화

○ 2차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 시기인 2040년까지 매년 45만명씩 증가

※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2020년,

- OECD 37개국 중 고령인구 빈곤율이 가장 높고, 15년 뒤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위에 랭크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5~64세)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3명(2021년)이며, 앞으로 40년 후에는 80명
 - 2020년 고령인구 비율 전국 16.4%, 경북 21.7%, 강원 20.7, 전북 21.4, 전남 23.4%, 경남 17.4%, 구미 9.6%
-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인구 1% 포인트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0.5%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성장시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 지역산업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진행

○ 해양 및 내륙의 지역 주력 산업 위기

-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초호황과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접어들면서 2009년 이후 조선산업 위기발생
- 지역의 주력산업인 포항의 철강과 구미의 IT 산업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즉 지역의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산업단지 내 중후장대 지역 거점 제조업(창원 : 기계, 포항 : 철강, 광양 : 제철, 울산 : 조선, 자동차)에서 수출, 생산, 고용의 어려움이 발생

○ 지역의 경제성장률 둔화, 취업자 증가 둔화(성장 역동성 부족)

- 대구와 경북의 성장률 및 취업자 추세변화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대구와 경북의 경제성장률 둔화, 취업자 증가 둔화를 확인할 수 있음(성장 역동성 부족)

○ 정부 중심 고용정책은 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강하였음

- 산업정책 혹은 기업정책에서 일자리 및 고용정책은 별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자료 분석이나 연구에서도 별도로 미스매치 현상 발생.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있었지만 지역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고용정책은 별도로 없었음
- 최근 지역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서 광주형과 구미형 일자리가 논의되는 등 지역 수준의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대학과 기업 및 산업이 연계되는 일자리 사업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지만 관련 산업입지(산업단지공단 등)나 재정 등은 모두 정부의 정책 및 의사결정 범주에 있음
- 고용부 중심의 일자리 공시제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역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최근 경제 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이 기획 진행되고 있음

■ 수도권과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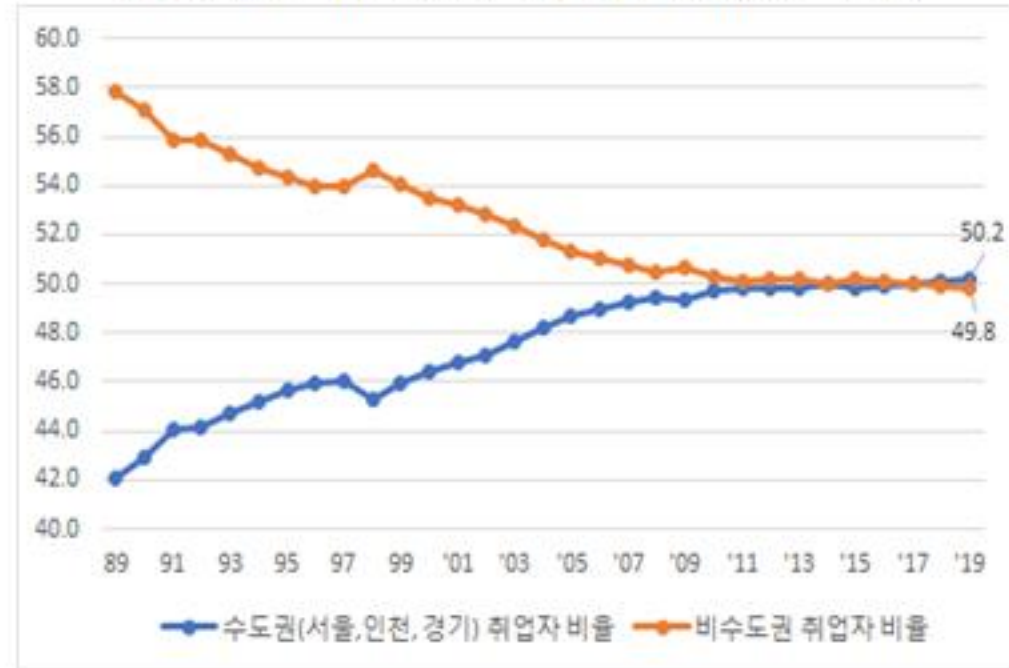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자 비중 역전 현상

- 수도권 취업자는 2013년 12,610.3천 명에서 12,952.9천명으로 342.9천명 증가하고, 비수도권 취업자는 2013년 12,689.1천 명에서 12,944.3천명으로 255.2천 명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1990~2000년대에는 지역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력제조업 및 지역전략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은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해당 지역 제조업 일자리로 수급 조절되었음
- ※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지역의 가장 큰 쟁점은 청년인구유출과 일자리수급미스매치이며,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은 임금 미스매치, 정보 미스매치, 기술(직능)에서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가 가장 대표적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지역 주력 제조 산업의 쇠퇴와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
- 이후 50% 수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자리 비중이 보합세를 이룬 이후 2019년에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50.2%, 비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48.2%로 취업자 비중이 역전되었음
- ※ 수도권 취업자의 상대비는 '89년 -27.2% → '19년 0.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자(천 명) 추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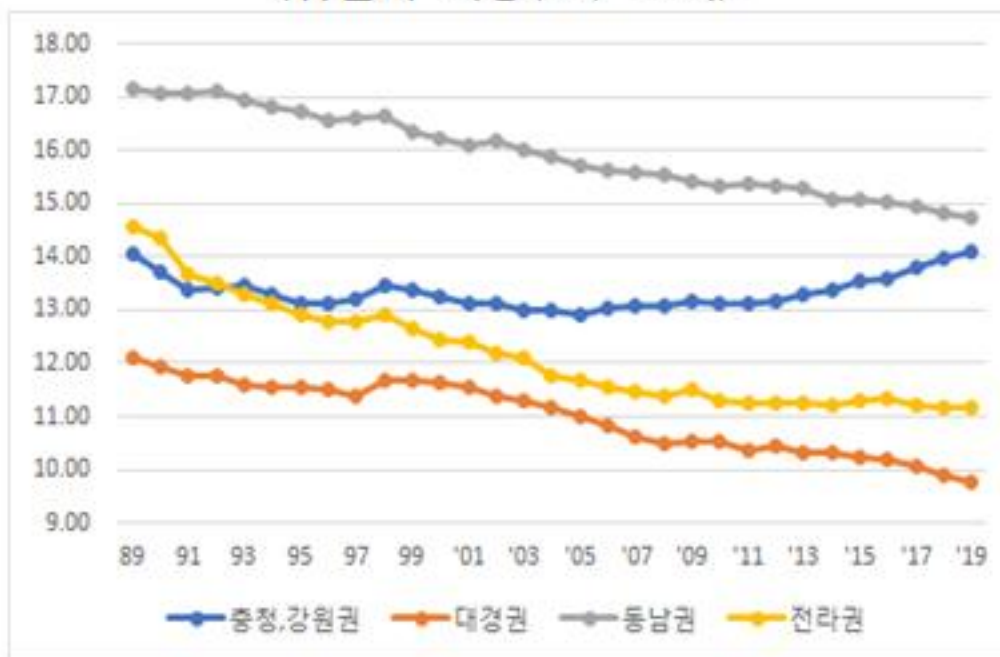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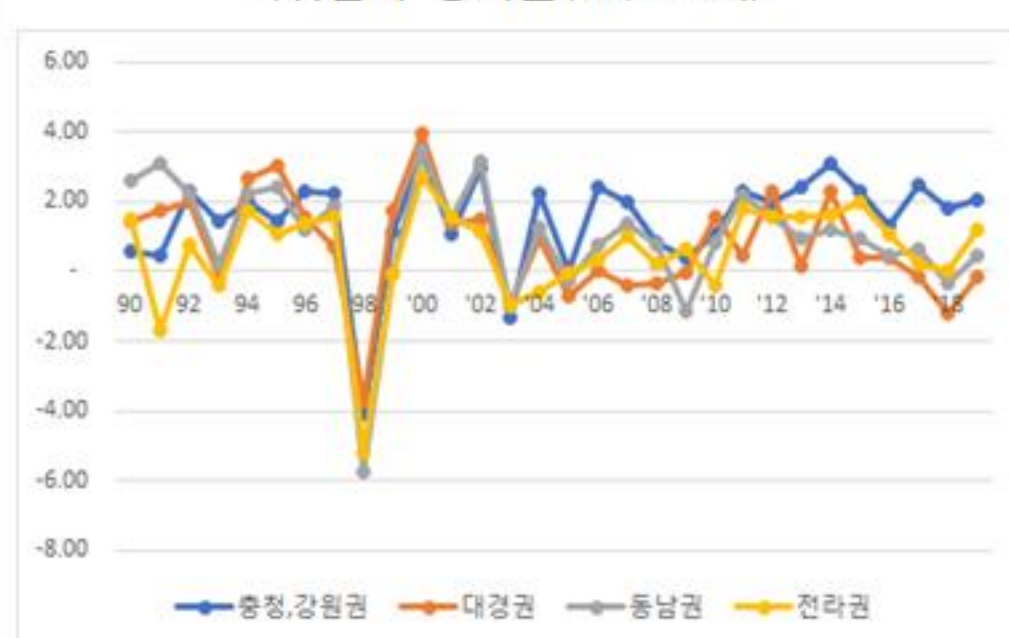
〈그림 2〉 취업자 및 취업자 비중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타 지역과 다르게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충청강원권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고, 실제 취업자 증가율도 높게 나타남

〈취업자 비중(%) 추이〉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 취업자 비중 및 증가율 추이

■ 수도권과 달리 지역인적자원 축적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작동하지 않음

○ 대구경북 지역은 인적자원개발 축적의 외부효과가 작동하지 않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대체로 지역평균인적자본의 외부효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어, 인력양성과 개발 및 활용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생산성 증대)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지역평균인적자본의 증가는 지역근로자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의 외부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지역평균교육년수 1년 증가는 근로자 개인의 임금을 3.7~4.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경북의 지역평균인적자본 1년 증가는 근로자 개인의 임금을 3.8~6.7% 감소시키는 부(-)의 외부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정(+)의 임금프리미엄과 부(-)의 지역평균인적자본 임금프리미엄이 서로 상쇄되고 있음. 지역인적자본축적의 낮은 임금프리미엄은 우수 기업과 임금근로자의 여타 지역으로 유출을 설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음

→ 지역대학을 졸업한 고급인재가 지역의 좋은 기업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거나, 지역대학이 지역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나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일자리 공급측면)과 고용률(일자리 수요측면)의 괴리 증대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갭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간의 갭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수도권, 비수도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차이(%p)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은 2012년 이후부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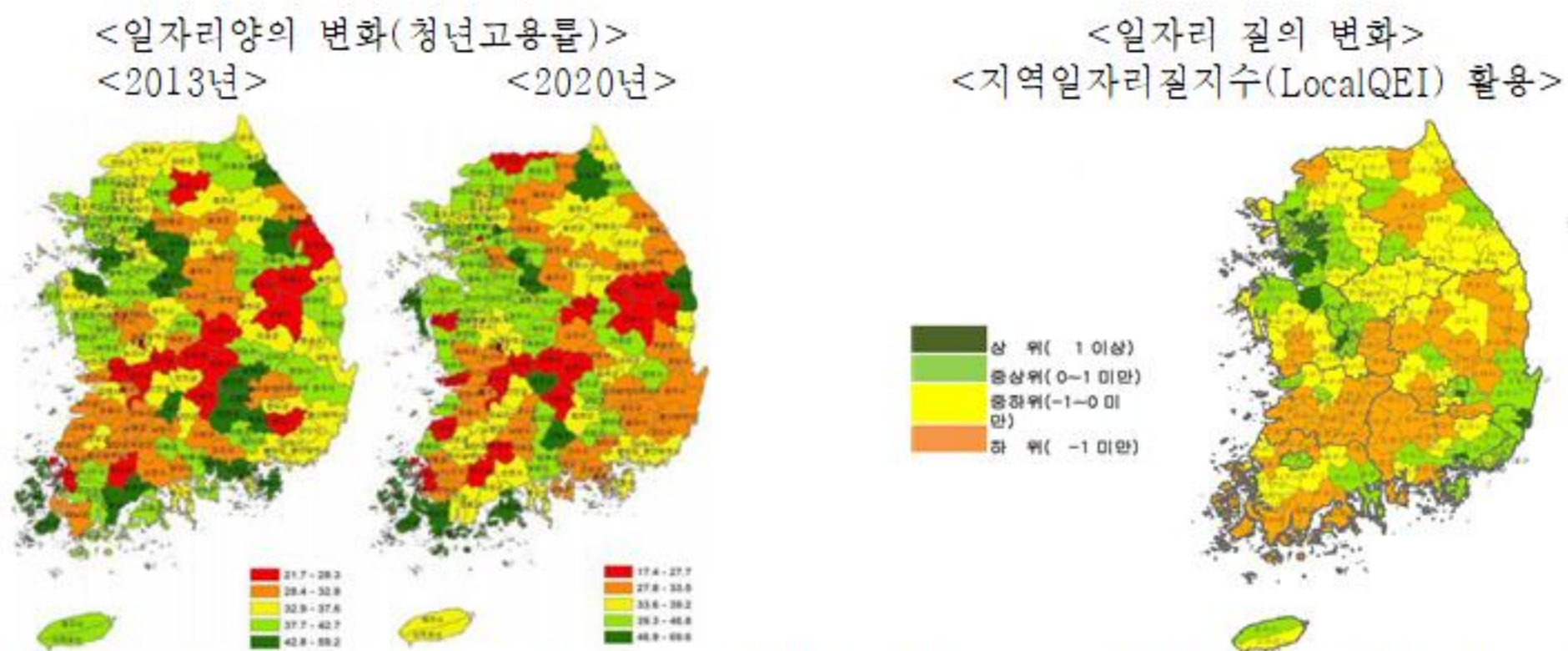
■ 지역일자리 양과 질의 위기

○ 일자리 양의 수도권 집중

- 수도권 취업자 상대비가 상승하고 지리적 면적(수도권은 전국의 11.8%)에 따른 상대 밀도는 5.4배 → 7.5배 증가
- '15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층의 고용기회 악화되어 청년고용률은 '89년 9.6%p → '14년 4.2%p 까지 하락 → '19년 6.4%로 증가
- 전체 고용률: 농업 지역일수록 높고, 대도시 혹은 산업지역일수록 낮음
- 청년 고용률: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그리고 산업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청년고용률 경상북도 낮은 지역 27.8~23.6

○ 지역간 일자리 질 격차: 지역일자리질지수(LocalQEI) 활용-시군구별 분포

- 상위지역(39개)의 82%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상위지역(93개)는 비수도권산업/거점도시, 경기도 주요도시, 광역시의구지역, 하위지역(54개) : 대부분 비수도권 도지역의 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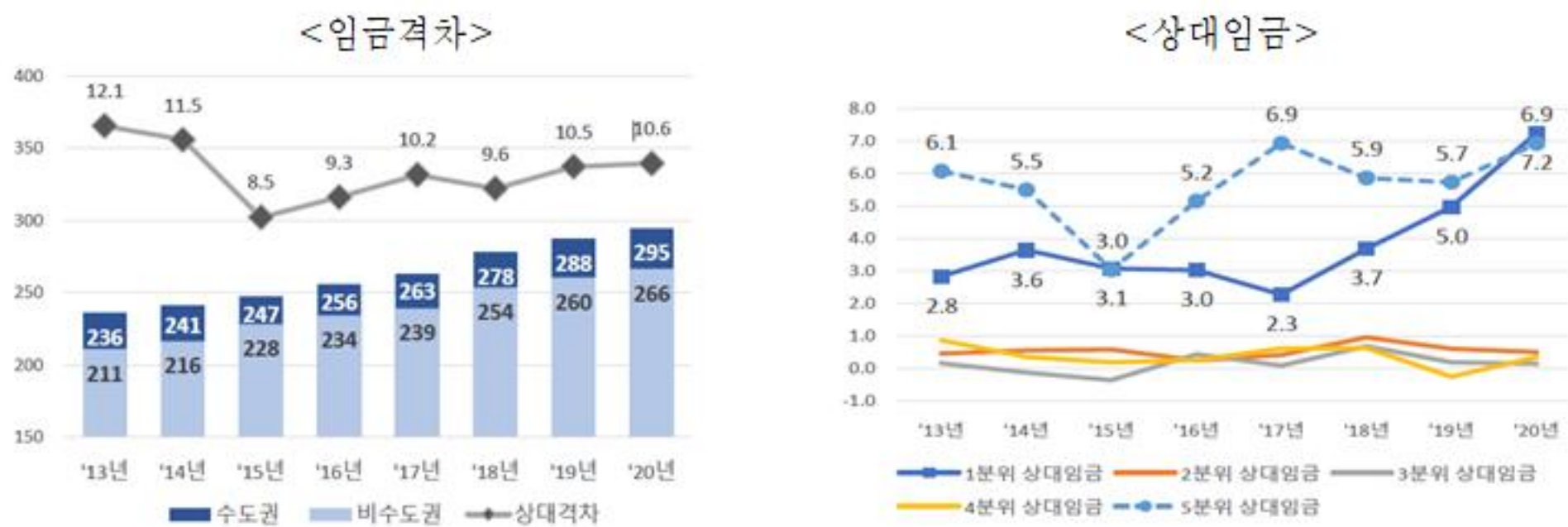


주 : 지역일자리질지수는 고소득비율(소득4분위), 고학력비중(전문대학이상), 고숙련비중(전문가/관리자)을 고려한 시군단위 비율을 지수화 한 것임

<그림 4>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 2010년대 중반이후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상대임금격차 확대

- '16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임금격차가 증가하여 '20년에는 10.6%(수도권이 295만원, 비수도권 266만원)으로 확대
- 상위5분위 상대임금은 '17년까지 급속하게 증가, 하위1분위 상대임금도 '18년부터 증가하여 '20년에는 7.2% 수준을 기록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상반기

<그림 5> 임금격차와 상대임금 추이

○ 수도권 중심의 탈 제조업화와 공간분업의 강화

-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용의 서비스화 혹은 탈 제조업화가 진행되다가 2010년 대 이후로 정체 상태를 유지함(수도권내부에서도경기도의제조업취업자는증가)
- 비수도권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89년 22.1%에서 '09년 16.6%로 하락한 후, 소폭 증가하여'19년까지 17.7% 수준을 유지

<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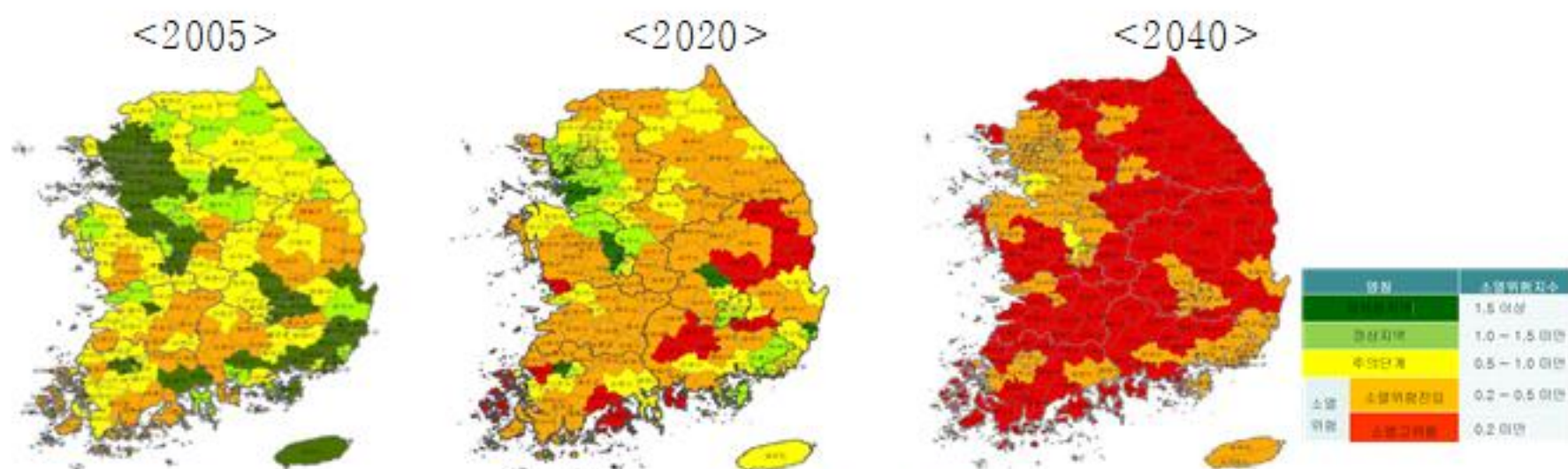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 추이(%)>



<그림 6>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 지역일자리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확산

- 군부는 소멸 완료단계, 대도시 원도심, 산업 쇠퇴 지역으로 확산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65세이상인구⁶⁾, 2005년 34곳→2020년 105곳→20년 후는?



<그림 7> 지역소멸 위기 추이

6) 저위험지역 1.5 이상, 정상지역1.0~1.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 지역은 소멸위험진입(0.2~0.5 미만), 소멸고위험 0.2 미만

3. 경상북도 중소도시 현황 및 쟁점사항

1) 인구 규모 감소 및 인구 순유출 증대

■ 인구규모별 경상북도 중소도시 구분

○ 인구규모별 경북 지역 중소도시 규모 분류

- 50만 이상, 30만 이상~50만, 10만 이상~30만 미만, 5만 이상~10만, 5만 미만(가)으로 구분
- 경상북도는 50만 이상 도시 포항과 40만 이상인 구미가 대표적인 지방도시이며, 경상북도 지역의 생산 중심 역할
- 20 만 명 대 도시는 경산과 경주시 2개 지역이며, 10만 도시는 안동, 김천, 칠곡, 영주, 영천의 5곳 지역이 나타남
- 상주, 문경, 예천, 의성군 등 4개 지역은 5~10만 이하 지역이며, 인구 5만 이하 지역은 울진, 성주 등 10개의 농산 어촌 지역임

○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세 지속

- 경상북도의 칠곡군은 郡(군) 지역으로 인구 10만이 넘는 반면, 상주, 문경은 (市(시))급 도시이지만 10만이 되지 않고 있음
- 20여 년 전과 비교하여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표 1>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

(단위 : 명, %)

행정구역	2000(B)	2010	2020(A)	2021. 08		구분	A-B
				2020. 08	2021. 08		
경 북	2,797,178	2,689,920	2,639,422	2,640,932	2,630,254		-157,756
포항시	515,977	514,755	502,916	503,883	503,344	대도시 917,157 (34.9%)	-13,061
구미시	336,914	404,920	416,328	416,551	413,813		79,414
경산시	213,821	240,708	263,728	262,300	267,935	중소 도시1 1,136,104 (43.2%)	49,907
경주시	290,149	267,098	253,502	253,460	252,344		-36,647
안동시	183,903	167,886	158,907	158,867	157,534		-24,996
김천시	149,864	136,136	140,548	140,511	140,130		-9,316
칠곡군	103,537	119,087	114,758	114,889	114,021		11,221
영주시	131,175	113,926	103,119	103,652	102,258		-28,056
영천시	119,639	103,190	102,015	101,523	101,881		-17,624
상주시	124,674	105,607	97,228	97,875	96,019		-27,446
문경시	89,900	77,391	71,406	71,258	71,045	-18,494	
예천군	59,885	47,049	55,613	55,457	55,846	중소 도시2 273,862 (10.4%)	-4,272
의성군	76,327	58,832	51,724	51,940	50,952		-24,603
울진군	66,298	52,430	48,716	48,776	48,125	농산 어촌 303,132 (11.5%)	-17,582
성주군	51,104	45,289	43,414	43,319	42,880		-7,690
청도군	52,497	44,391	42,263	42,480	41,736		-10,234
영덕군	51,131	41,377	36,313	36,591	35,678		-14,818
고령군	37,587	34,678	31,361	31,477	30,792		-6,226
봉화군	42,865	34,567	31,494	31,701	30,969		-11,371
청송군	34,248	26,715	25,044	25,122	24,773		-9,204
군위군	32,637	24,736	23,256	23,409	22,853		-9,381
영양군	22,805	18,451	16,692	16,680	16,350		-6,113
울릉군	10,241	10,701	9,077	9,211	8,976		-1,164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21.08.기준

7)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대한민국에 지방도 있다」,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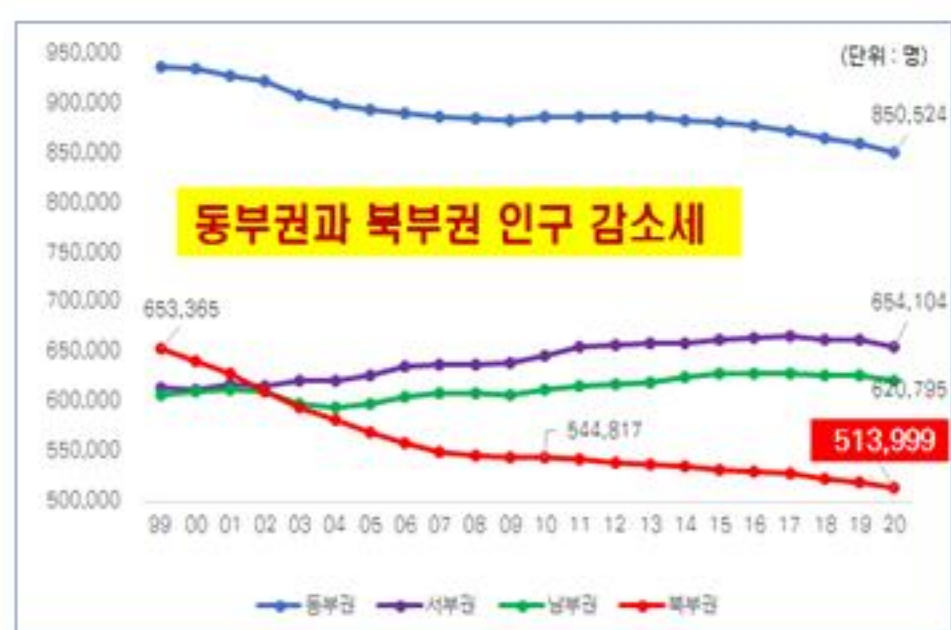
■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와 고령화, 저출생

- 2020년 기준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는 263만 9천 422명으로 전국 대비 5.09%를 차지
- 전년 대비 26,414명 감소(2021년 6월 기준으로는 2,632,401명)
 - 2019년 기준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는 266만 5천 여 명으로 전국 대비 5.1% 차지
 - 2020년 기준 북부권 인구는 51만 3천 여 명, 경상북도 전체 대비 19.5%이며 타 권역 대비 가장 적은 인구, 동부권 850,524명(32.2%), 서부권 654,104명(24.8%)

<경북전체 주민등록 인구 추세>



<경북도 권역별 인구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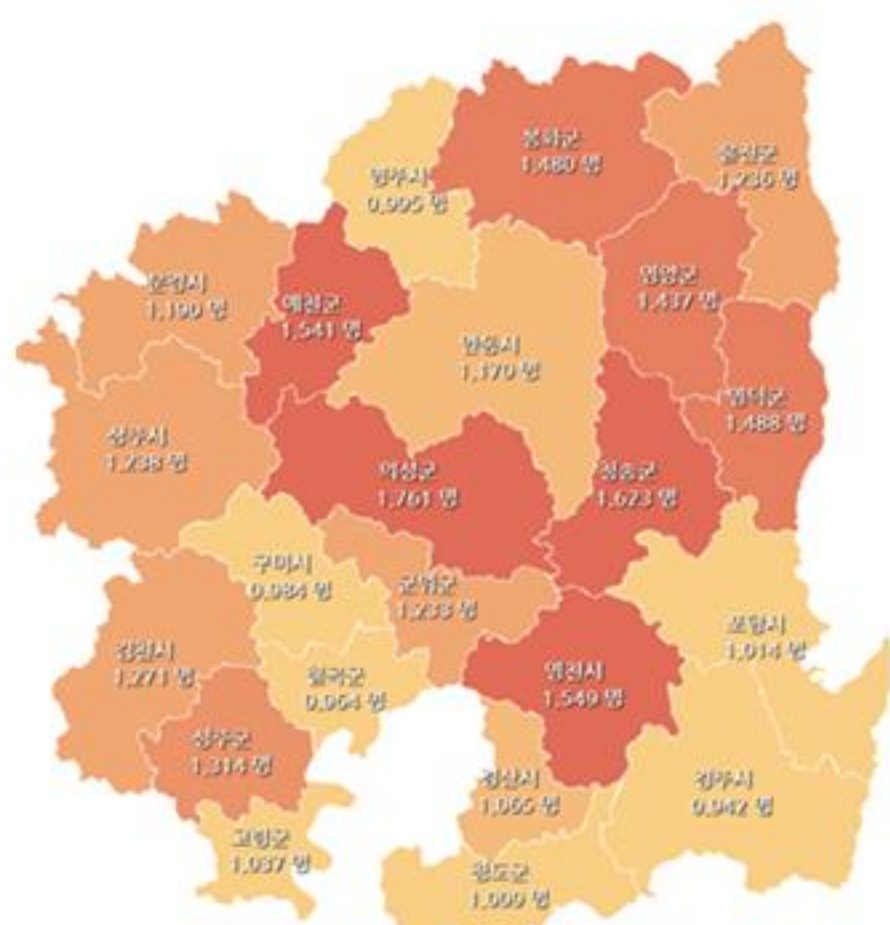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그림 8> 경북 인구 추이(1999~20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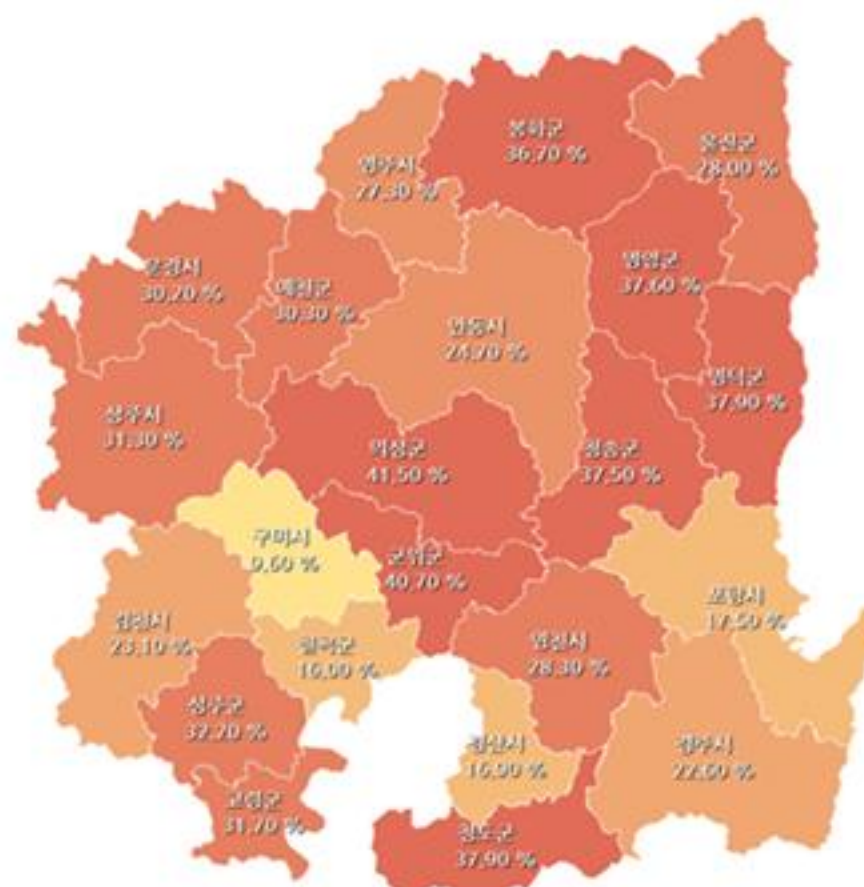
○ 고령화율과 합계출산률

- 2020년 가임여성(15~49세) 1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전국 0.84, 경상북도 1.00, 대구 0.81, 구미시 0.98
-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백분비 전국 15.7%(2020), 25%(2030), 경북 22.0%(2021.1/4)

<2020년 합계출산률(%)>



<2020년 고령화율(%)>



자료 : 통계청

<그림 9> 경북 합계출산율과 고령화율(2020년)

■ 경상북도 시·군간, 시도간 순이동자 추이

- 2020년 기준 경북도 내 시·군간 순이동자 흐름을 볼 때, 구미시, 안동시, 포항시, 예천군 등으로의 전입이 많음. 그러나 여타 시도 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많아 전체 인구는 순유출
 - 예천군은 신도청 출범 이후 경북도내와 여타 시도에서 전입 인구 증가로 순유입
- 경북 시·군간 순이동자는 시급 도시를 중심으로 전입이 늘었으며, 군지역은 인구 유출 발생 (2020년 기준 인구 순 이동이 플러스인 유입 지역은 영천, 경산, 예천임)
- 전체 순이동자에서 순유출이 많은 지역은 구미시, 포항시, 상주시, 칠곡군 순임
 - 대체로 경북도 시급 도시는 경상북도 관내에서 유입이 많고, 경북도 이외 지역으로 유출
 - 군 급 도시는 대체로 경북 관내에서 유출

<표 2> 시·군간 순이동자 수(2016~2020년)

(단위 : 명)

구분	경북도내 시군간 인구 순 이동					2020년 시도간 순이동자(b)	2020년 전체 순이동자(a+b)
	2016	2017	2018	2019	2020(a)		
경상북도	0	0	0	0	0	-16,978	-16,978
포항시	-276	-189	-104	359	479	-4,006	-3,527
경주시	-515	-331	-397	-80	-366	-496	-862
김천시	900	592	-231	460	355	-554	-199
안동시	-515	-1848	-2,266	-616	703	-1,032	-329
구미시	-559	2,311	1,648	1,097	1,087	-5,511	-4,424
영주시	130	-138	-377	-214	-184	-1,083	-1,267
영천시	155	113	472	249	223	-68	155
상주시	102	-71	194	269	-791	-1,813	-2,604
문경시	-421	-511	-355	289	16	-318	-302
경산시	201	104	61	-167	246	595	841
군위군	44	-19	-57	-46	-173	-124	-297
의성군	-53	-153	28	-74	-168	-17	-185
청송군	-58	-112	-88	-151	43	-91	-48
영양군	-25	-101	11	-112	-100	6	-94
영덕군	37	-31	-44	-277	-352	-286	-638
청도군	-82	-80	-86	-102	-98	-12	-110
고령군	-9	-54	-118	-45	-139	-553	-692
성주군	-7	-85	-92	-238	-143	-113	-256
칠곡군	294	-1,782	-1,149	-1,596	-687	-1,310	-1,997
예천군	1,037	2,787	3,389	1,504	465	407	872
봉화군	-197	-248	-138	-258	-207	-78	-285
울진군	-138	-120	-269	-183	7	-224	-217
울릉군	-45	-34	-32	-68	-216	-297	-513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 경상북도 전체 및 청년 인구의 유출·입 요인

- 지난 6년간('15~'20) 경북 지역은 직업, 교육, 주택, 가족 순으로 순유출이 높고 청년은 직업, 주택, 교육 순으로 순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인구 순유출은 청년인구가 압도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청년 순유출은 직업으로 약 5만 여 명, 주택으로 약 1만 6천 여 명, 교육으로 약 1만 5천 여 명이 순유출
 - 2020년 경북 전체 순유출 대비 청년 순유출은 117.9%
- 대체로 “직업”을 이유로 가장 많이 이동하지만 직업 이외 “주택”과 “교육” 부문도 순유출의 큰 요인으로 작용
- 가족과 자연환경은 대체적으로 인구 순유입 효과로 작용

<표 3> 지난 6년간(2015~2020년) 경상북도 전체 및 청년의 인구 이동 요인

(단위 : 명)

구 분	경북 전체			청년(19~39세)		
	유출	유입	순유출	유출	유입	순유출
전 체	1,945,184	1,905,101	-40,083	868,866	796,320	-72,546
직 업	517,060	491,014	-26,046	302,933	251,754	-51,179
가 족	496,078	485,843	-10,235	216,001	223,870	7,869
주 택	616,736	606,139	-10,597	224,580	208,648	-15,932
교 육	110,970	93,862	-17,108	51,176	35,909	-15,267
주거환경	61,582	59,935	-1,647	25,590	22,316	-3,274
자연환경	24,570	42,207	17,637	4,519	7,771	3,252
기 타	118,188	126,101	7,913	44,067	46,052	1,98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 인구 순 유출 현황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직업적 사유에 의한 순 이동이 높게 나타남
 - 지난 3년간 대도시(포항, 구미), 중소도시1(경산,경주,안동,김천,칠곡,영주,영천)의 직업별 이동은 각각 -14,513 명과 -11,004명임
 - 대도시와 농산어촌은 교육과 관련한 순유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산어촌의 군 단위에서는 자연환경으로 유입이 많이 증가
 -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에 의한 인구 순 유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3년간 대구, 울산, 경남에서 경북으로 인구가 순유입, 경기와 서울쪽으로 많은 인구 순유출
 - 지난 3년간 대구에서 경북으로 순유입은 10,137명으로서 중소도시1로 유입이 많이 되었고, 대도시인 포항 구미에서는 경기도 쪽으로 순유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충북, 강원으로도 지난 3년간 1,000여명 이상이 순유출
 - 경북도 내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2는 순유입, 중소도시1과 농산어촌에서는 순유출로 나타남

<표 4> 3년간(2018~2020) 경상북도 인구 순유출(=총 전출-총전입) 원인⁸⁾과 지역 (단위 : 명)

구분	행정 구역	전체	대도시 (포항, 구미)	중소도시1 (경산, 경주, 안동, 김천, 칠곡, 영주, 영천)	중소도시2 (상주, 문경, 예천, 의성)	농산어촌 (울진, 성주, 청도, 영덕, 고령, 봉화, 청송, 군위, 영양, 울릉)
	전체	-30,774	-19,821	-10,466	5,857	-6,344
이동사유	직업	-26,643	-14,513	-11,004	-763	-363
	가족	-7,116	3,210	-7,363	1,180	-4,143
	주택	1,028	-1,122	3,741	1,862	-3453
	교육	-10,060	-6,925	-630	-507	-1,998
	주거환경	-1,878	-861	-1,660	509	134
	자연환경	9,513	-710	3,702	2,573	3,948
	기타	4,382	1,100	2,748	1,003	-469
순이동 광역시도	서울	-15,343	-6,836	-6,656	-702	-1,149
	부산	-718	-822	-328	285	147
	대구	10,137	-737	9,363	1,613	-102
	인천	-1,308	-813	-635	75	65
	광주	-71	-15	-68	36	-24
	대전	-2,727	-1,216	-1,076	-261	-174
	울산	6,208	589	4,999	379	241
	세종	-1,568	-558	-737	-153	-120
	경기	-18,357	-10,258	-7,301	-23	-775
	강원	-1,062	-400	-337	-60	-265
	충북	-3,052	-1,272	-1,132	-339	-309
	충남	-3,513	-1,812	-1,251	-226	-224
	전북	-110	-11	-82	-21	4
	전남	-401	-297	-80	47	-71
	경북	0	4,566	-5,561	4,766	-3,771
	경남	1,793	403	739	423	228
	제주	-682	-332	-323	18	-45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원자료

2) 전출입 및 인구 순이동 사유(구미시 사례)

■ 2010년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 : 순유입

- 2010년 (전체)전출사유는 주택 사유가 높지만 청년은 주택, 직업, 가족 사유가 높게 나타남
 - 하지만 구미 지역 순전출 사유를 볼 때, 직업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유출도 많지만 반대로 직업을 이유로 유입도 많음 (청년층도 마찬가지임)

■ 2020년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음 → 순유출 발생

- 2020년 (전체)전출사유는 직업과 주택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지만 청년층은 직업을 사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36.8%)

8) 인구이동 요인(전출입 사유)은 다음과 같음.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주거 환경(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자연 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그 밖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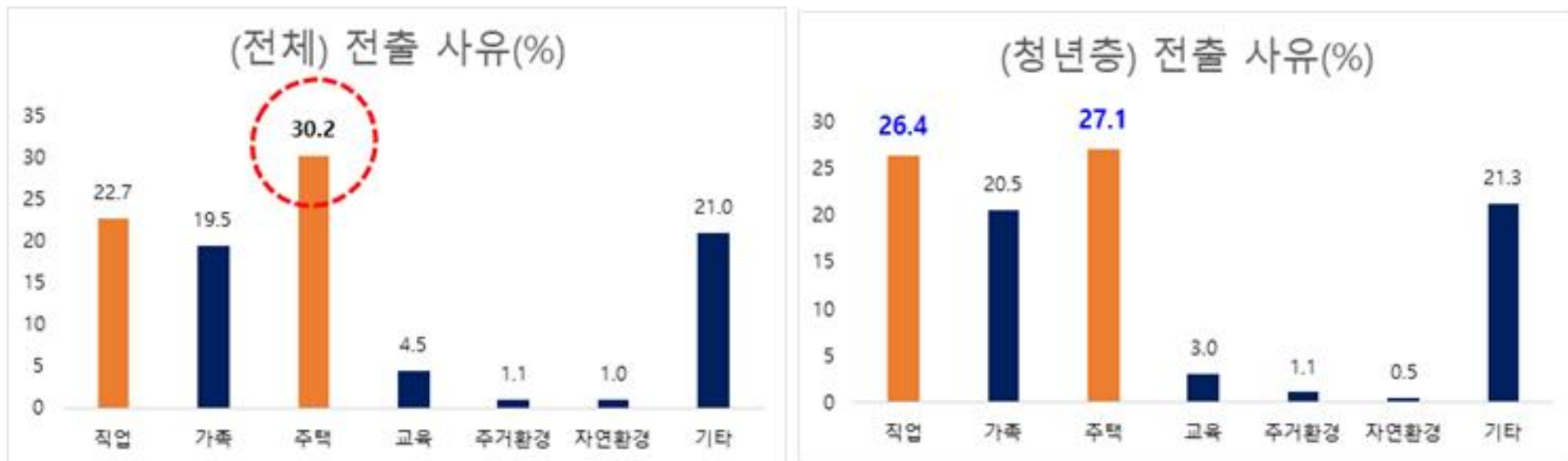
○ 구미시 전 연령과 청년층 모두 전반적으로 직업과 교육을 사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 2010, 2020년 구미 인구 전출입 사유

(단위 : 명)

전출입 사유	2010						2020					
	구미(전체)			청년(19~39세)			구미(전체)			청년(19~39세)		
	전입	전출	순전출	전입	전출	순전출	전입	전출	순전출	전입	전출	순전출
직업	18,661	13,980	4,681	12,223	8,677	3,546	13,998	16,886	-2,888	9,052	10,961	-1,909
가족	11,420	11,969	-549	6,085	6,747	-662	12,141	12,193	-52	6,485	6,261	224
주택	17,282	18,591	-1,309	8,285	8,919	-634	16,056	16,810	-754	7,185	7,390	-205
교육	2,810	2,761	49	860	1,001	-141	2,389	3,555	-1,166	1,060	1,996	-936
주거환경	683	647	36	376	359	17	2,143	2,317	-174	1,175	1,263	-88
자연환경	613	610	3	125	167	-42	440	628	-188	105	135	-30
기타	12,813	12,905	-92	7,288	6,987	301	5,016	4,218	798	2,101	1,756	345
전체	64,282	61,463	2,819	35,242	32,857	2,385	52,183	56,607	-4,424	27,163	29,762	-2,599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그림 10> 2010년 구미 인구 순유출입(전체,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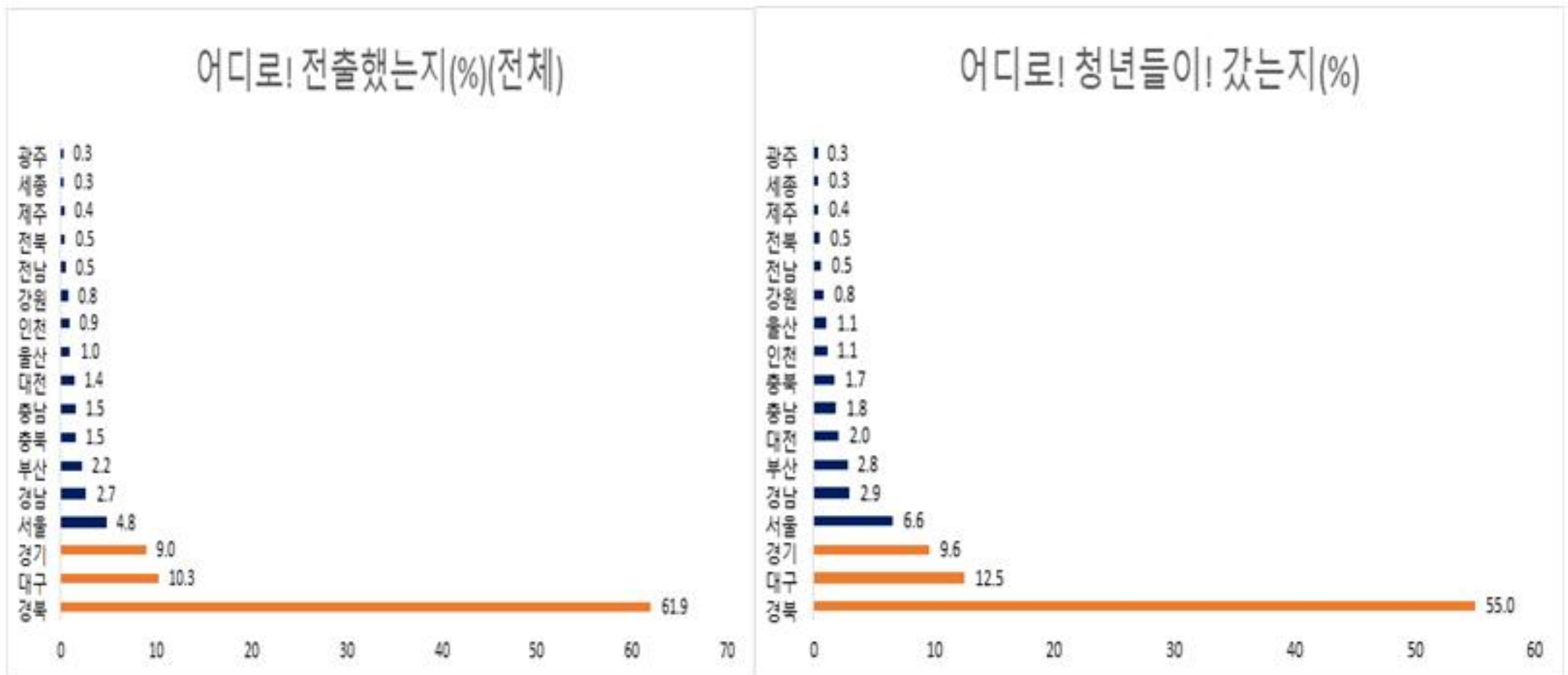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그림 11> 2020년 구미 인구 순유출입(전체, 청년)

→ 구미 전출입에서 직업적 요인이 청년유출의 가장 큰 요인임을 확인가능

■ 2020년 전출 지역 (구미 → 타 지역)

- (전체) 경북(구미 이외 지역), 대구, 경기로 전출이 많음, 청년의 경우도 경북 대구 경기 순으로 전출이 높음
 - 경기도로 전체 전출은 5,071명, 청년의 전출은 2,847명으로 나타남
- (청년) 경북(구미 이외 지역), 대구, 경기 순으로 전출이 높음
- 경기도로 전체 전출은 2,847명으로 나타남



<그림 12> 구미에서 전출지(전체, 청년)

■ 구미시 2020년 전출인구 목적지(시도, 시군구)

- (경북으로의 전출) 구미시 2020년 전출인구는 대부분 경북도내로 이동(61.9%), 그 중 구미 내에서의 이동이 대부분(74.1%)이며 다음으로 칠곡군(8.4%)으로 전출
- (대구로의 전출) 10.3%, 그 중 달서구(24.2%)와 북구(21.4%)로의 전출이 많음
- (경기로의 전출) 9.0%, 그 중 파주시(15.7%)와 평택시(8.8%)로의 전출이 많음
- (대전으로의 전출) 1.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전광역시 5개구(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중에서 서구와 유성구로의 전출만 발생

<표 6> 구미시 2020년 전출인구 목적지(사도)

지역코드	지역	가구(세대)	인구(명)	비율(%)
11	서울	1,512	2,708	4.8
26	부산	903	1,272	2.2
27	대구	1,877	5,833	10.3
28	인천	381	512	0.9
29	광주	125	148	0.3
30	대전	441	818	1.4
31	울산	371	546	1.0
36	세종	117	188	0.3
41	경기	2,581	5,071	9.0
42	강원	378	452	0.8
43	충북	581	869	1.5
44	충남	524	866	1.5
45	전북	234	263	0.5
46	전남	255	298	0.5
47	경북	3,847	35,047	61.9
48	경남	1,091	1,507	2.7
49	제주	154	209	0.4
계	-	15,372	56,607	100.0

<표 7> 구미시 2020년 전출인구 목적지(시·군구)

지역	인구(명)	비율(%)	지역	인구(명)	비율(%)
대구	5,833		김천시	1,872	(5.3)
중구	341	(5.8)	안동시	383	(1.1)
동구	759	(13.0)	구미시	25,977	(74.1)
서구	294	(5.0)	영주시	138	(0.4)
남구	422	(7.2)	연천시	231	(0.7)
북구	1,246	(21.4)	상주시	494	(1.4)
수성구	832	(14.3)	문경시	353	(1.0)
달서구	1,414	(24.2)	경산시	685	(2.0)
달성군	525	(9.0)	군위군	134	(0.4)
안양	35	(6.9)	의성군	260	(0.7)
평택	445	(8.8)	청송군	62	(0.2)
오산시	189	(3.7)	영양군	47	(0.1)
시흥시	157	(3.1)	영덕군	51	(0.1)
용인시 기흥구	182	(3.6)	청도군	65	(0.2)
용인시 수지구	101	(2.0)	고령군	50	(0.1)
파주시	797	(15.7)	성주군	167	(0.5)
김포시	154	(3.0)	찰마군	2,932	(8.4)
화성시	529	(10.4)	예천군	197	(0.6)
대전	818		봉화군	49	(0.1)
서구	241	(47.4)	울진군	68	(0.2)
유성구	267	(52.6)	울릉군	33	(0.1)
경북(3)	5,047			49	(0.1)
포항시 남구	261	(0.7)			
포항시 북구	280	(0.8)			
경주시	258	(0.7)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3) 직주 불이치 쟁점

■ 경북의 직주불일치 현황 : 경북 사업장 주소 기준 취업자

○ 사업장 주소 기준 경상북도 취업자 **1,493,585명(a)**

○ 거주지(주민등록) 주소 중심 경북 취업자 **1,394,906명(b, 통계청)**

○ 경북지역 사업장과 거주지 주소 동일 취업자 **1,347,780명(c)**

○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있는 여타 지역 거주자 **145,803명(d=a-c)**

○ 경북 거주 취업자 중 사업장 주소가 여타 지역에 있는 사람 **47,126명(e=b-c)**

- 순수 경북지역 사업장 주소가 있고 외부지역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취업자는 **약 10만 명**

(98,679명) 수준(a-b 혹은 d-e) → 경상북도 주소 갖기 운동 정책 필요

<표 8> 여타 지역 거주자 중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있는 취업자

지역 코드	경북사업장 주소 기준 취업자(명)	비중(%)	월평균 임금(만원)
전체	1,493,585	0.09	273.08
서울	1,293	0.09	311.5
부산	2,332	0.16	328.5
대구	122,570	8.21	342.9
대전	374	0.03	656.7
울산	15,208	1.02	318.6
세종	90	0.01	300.0
경기	820	0.05	524.6
강원	764	0.05	253.6
충북	530	0.04	220.6
충남	24	0.00	280.0
전북	168	0.01	100.0
경북	1,347,780	90.24	263.5
경남	1,630	0.11	328.4

주 :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샘플 수가 적어 유의 필요
 자료 :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여타지역 주소지를 두고 경북에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대전, 경기, 대구에 주소를 두고 경북 소재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북에 사업장을 두고 대구, 울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많음

- 인천, 광주, 전남,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분석상 없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외지에 있으면서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취업자는 총 145,803명 (취업자 가족을 고려할 경우 수치는 보다 높을 수 있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외지에 있으면서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취업자는 총 145,803명 (취업자 가족을 고려할 경우 수치는 보다 높을 수 있음)

■ 경북내 시군에서 직주 불일치

○ 경북 23개 시군의 거주지(주민등록) 중심(통계청 기준) 취업자와 사업장 주소 기준 취업자 갭은 98,679.45명(6.6%)

<표 9> 경상북도 시군 거주지 및 사업장 기준 취업자 현황(전체)

-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 없이 직장 주소지만 경북에 있는 취업자에 대해 경북 각 시군의 사업장 지역으로의 주소 이전 정책 중요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음

○ 대부분 거주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는 비율이 높음(약 93%)

-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내외를 이루는 근거리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것으로 분석됨

예) 대구 거주 포항 취업자 2,345명, 부산 거주 포항 취업자 392명 등

- 듀얼라이프 실현을 위한 도로교통 개선책 필요

○ 경북도 대부분 지역이 사업장 주소지 기준 취업자가 주민등록 중심 취업자보다 많음

-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구미, 경주, 영천, 성주, 고령 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 정주여건 불편이 중요 원인 듀얼라이프 실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

※ 주소 기준 취업자가 사업장 중심 취업자 보다 많은 지역은 포항, 영주, 칠곡 지역임

※ 임금이 높은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사업장 주소 지역보다는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지역	주민등록 주소 기준 취업자(A)	사업장 주소지 기준 취업자(B)	차이(C=(A-B))
경북 합계	1,394,906	1,493,585(100.0%)	-98,679
포항시	271,398	267,145(17.9%)	4,253
경주시	133,360	151,299(10.1%)	-17,939
김천시	66,965	68,434 (4.6%)	-1,469
안동시	81,081	81,336 (5.4%)	-255
구미시	238,119	266,099(17.8%)	-27,980
영주시	53,986	53,405(3.6%)	581
영천시	53,128	67,708(4.5%)	-14,580
상주시	48,383	49,869(3.3%)	-1,486
문경시	35,417	36,280(2.4%)	-863
경산시	136,140	136,398(9.1%)	-258
군위군	11,626	14,417(1.0%)	-2,791
의성군	27,428	31,019(2.1%)	-3,591
청송군	15,385	16,428(1.1%)	-1,043
영양군	9,457	9,824(0.7%)	-367
영덕군	18,051	20,207(1.4%)	-2,156
청도군	21,164	25,667(1.7%)	-4,503
고령군	17,260	28,230(1.9%)	-10,970
성주군	19,945	30,302(2.0%)	-10,357
칠곡군	67,706	66,797(4.5%)	909
예천군	21,585	22,795(1.5%)	-1,210
봉화군	16,831	18,649(1.2%)	-1,818
울진군	24,502	25,103(1.7%)	-601
울릉군	5,990	6,174(0.4%)	-184

주 : 1. 경상북도 내 거주자이면서 경북도내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취업자는 1,347,780명, 경상북도 거주 취업자는 1,394,960명

2. 기초시군에 대해서도 시도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20년 상반기, 원자료

■ 구미 경주 영천 고령 사례

<표 10> 구미, 경주, 영천, 고령의 직주 불일치

구미시 현황		주민등록 기준 취업자 238,119		경주시 현황		주민등록 기준 취업자 133,360	
지역 코드	사업장 주소(구미) 취업자(명) 및 비중(%)	지역 코드	사업장 주소(경주) 취업자(명) 및 비중(%)				
-	266,099 100.0	-	151,299 100.0				
부산	2100 244 0.09	부산	2100 855 0.57				
대구	2200 16,395 6.16	대구	2200 3,165 2.09				
대전	2500 126 0.05	울산	2600 14,621 9.66				
경기도 성남	3102 267 0.10	경기도 용인	3119 235 0.16				
충북 옥천	3333 22 0.01	충북 영동	3334 36 0.02				
포항	3701 157 0.06	경남 밀양	3808 130 0.09				
경주	3702 163 0.06	경남 양산	3810 116 0.08				
김천	3703 2,338 0.88	포항	3701 6,279 4.15				
안동	3704 62 0.02	경주	3702 124,753 82.45				
구미	3705 224,318 84.30	구미	3705 183 0.12				
영주	3706 50 0.02	영천	3707 592 0.39				
상주	3708 335 0.13	경산	3710 309 0.20				
윤경	3709 54 0.02	청도	3736 20 0.01				
경산	3710 856 0.32	울릉	3743 5 0.00				
군위	3731 104 0.04						
의성	3732 26 0.01						
성주	3738 306 0.11						
칠곡	3739 20,274 7.62						

영천시 현황		주민등록 기준 취업자 53,128		고령군 현황		주민등록 기준 취업자 17,260	
지역 코드	사업장 주소(영천) 취업자(명) 및 비중(%)	지역 코드	사업장 주소(고령) 취업자(명) 및 비중(%)				
-	67,708 100.00	-	28,230 100.00				
부산	2100 389 0.57	대구	2200 13,441 47.61				
대구	2200 8,278 12.23	경기도 가평	3137 42 0.15				
울산	2600 308 0.45	경남 창원	3811 182 0.64				
경남 양산	3810 131 0.19	경남 합천	3840 267 0.95				
포항	3701 367 0.54	김천	3703 82 0.29				
경주	3702 871 1.29	영천	3707 68 0.24				
영천	3707 47,749 70.52	고령	3737 13,784 48.82				
경산	3710 9,433 13.93	성주	3738 75 0.27				
군위	3731 32 0.05	칠곡	3739 291 1.03				
청도	3736 47 0.07						
칠곡	3739 103 0.1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년 상반기, 원자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년 상반기, 원자료

- [취업자] 여타 지역 거주자로 경북 내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 사업장을 둔 취업자가 많음 (약 57.7%, C(A-B)가 큰 순서임)
 - 관련 사업장 기준 취업자 임금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임금보다 높은 수준
 - 직종에서도 전문가 등이 여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북도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다수

<표 11> 경북의 업종 및 직종별 직주불일치 현황

산업별	거주지 기준 취업자		사업장 기준 취업자			차이 C(A-B)
	취업자 (명) A	임금 (만 원)	취업자 (명) B	비중 (%)	임금 (만 원)	
농림어업	248,951	158.3	257,138	17.2	158.4	-8,187
광업	1,884	269.2	1,916	0.1	270.0	-32
제조업	303,458	335.7	354,534	23.7	339.4	-51,07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241	355.6	4,796	0.3	369.6	-55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456	334.7	9,423	0.6	365.3	-967
건설업	95,737	245.7	102,791	6.9	248.2	-7,054
도매 및 소매업	145,571	215.8	148,709	10.0	219.2	-3,138
운수 및 창고업	62,643	262.6	66,776	4.5	265.8	-4,133
숙박 및 음식점업	91,771	144.4	92,234	6.2	146.4	-463
정보통신업	11,129	306.5	12,400	0.8	306.6	-1,271
금융 및 보험업	30,516	348.3	30,042	2.0	359.4	474
부동산업	14,399	200.9	14,700	1.0	203.5	-3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133	297.1	21,046	1.4	317.5	-2,9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1,668	233.1	43,693	2.9	235.0	-2,0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9,039	249.5	61,856	4.1	255.5	-2,817
교육 서비스업	70,474	304.8	80,486	5.4	320.0	-10,0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6,120	162.2	119,862	8.0	170.3	-3,7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632	187.7	16,850	1.1	191.5	-218
협회·단체·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533	204.1	50,476	3.4	198.9	1,05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337	70.1	1,337	0.1	70.1	0
국제 및 외국기관*	1,214	380.0	2,522	0.9	368.4	-1,308

주: 거주지 기준은 주민등록 기준을 의미

직종별	거주지 기준 취업자		사업장 기준 취업자			차이 C(A-B)
	취업자 (명) A	임금 (만 원)	취업자 (명) B	비중 (%)	임금 (만 원)	
관리자*	30,860	643.0	37,591	2.5	634.3	-6,7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6,952	297.7	192,694	12.9	318.0	-25,742
사무 종사자	162,475	303.6	184,743	12.4	309.8	-22,268
서비스 종사자	133,879	178.8	136,173	9.1	179.3	-2,294
판매 종사자	131,288	213.4	130,590	8.7	217.5	6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3,214	224.3	251,557	16.8	238.3	-8,34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4,272	288.7	142,882	9.6	289.7	-8,610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16,723	299.3	237,888	15.9	298.0	-21,165
단순노무 종사자	175,241	133.5	179,468	12.0	134.3	-4,227
전체	1,394,904	263.9	1,493,586	100	273.1	-98,682

주: 1. 거주지 기준은 주민등록기준을 의미
2. 전체 취업자수가 다소 차이 나는 것은 소숫점 영향임

4) 생산성 및 산업입지와 일자리 쟁점

■ 경북 전체 생산액 및 업종별 생산비중 감소

○ 경북의 2019년 명목 생산액은 108.8조원으로 전국의 5.5%로 2000년 대비 1.5%p 감소

- 경북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비중이 약화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약화
- 2019년은 2000년에 비해 지역내총생산은 1.5%p, 감소하고 제조업은 3.1%p, 서비스업은 0.4%p 감소

<표 12> 지역내총생산성(GRDP, 명목)

(단위: 백만원, %)

지역별	경제활동별	2000	2019
전국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655,879,090	1,927,421,209
	제조업	172,551,674	486,034,797
	서비스업	342,779,960	1,115,713,971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5,717,427(7.0)	106,805,459(5.5)
	제조업	21,137,074(12.2)	44,030,502(9.1)
	서비스업	14,435,253(4.2)	42,604,371(3.8)

주: ()은 전국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각년도

■ 경북 생산성과 성장률 둔화

○ 생산성과 성장률 하락세

- 경북의 생산성도 2017년 110조원을 피크로 하향세이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높으며, 전국 생산성 증가에 비해 낮은 수준

<경북도 지역내총생산과 전국대비 비중(백만원, %)>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실질) 추이(%)>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당해년 및 기준년 시장 가격 기준, 각년도
 <그림 13> 지역내총생산 비중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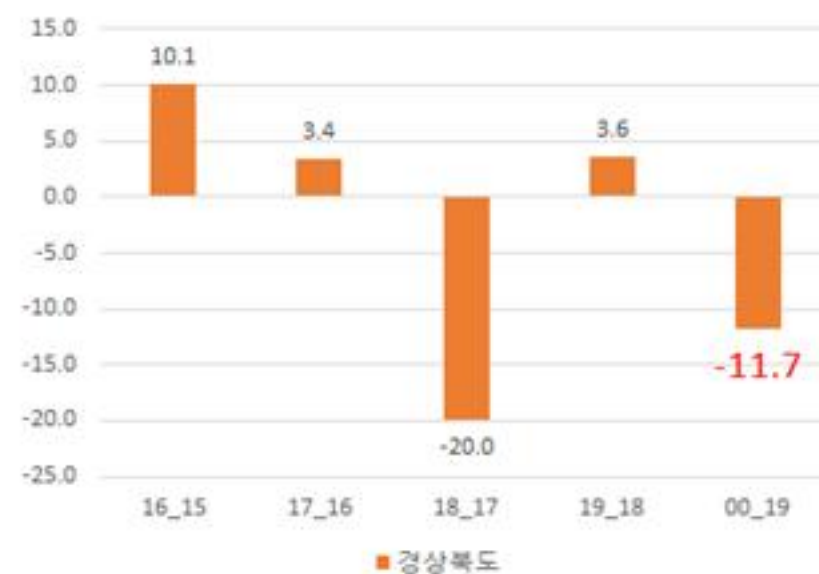
■ 경북 취업자 증가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

- 2020년 경북 취업자는 전년 대비 1만1천7백 명 감소, 2021년 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백 명 증가
-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부적 충격에 의한 취업자 감소 이후 최근에는 구조적요인으로 취업자가 감소세이며, 코로나19가 추가 적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미칠지는 미정
- 2021년 7월 기준 제조업 9천5백 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8천7백 개 일자리(취업자) 감소



<경북 취업자(천명)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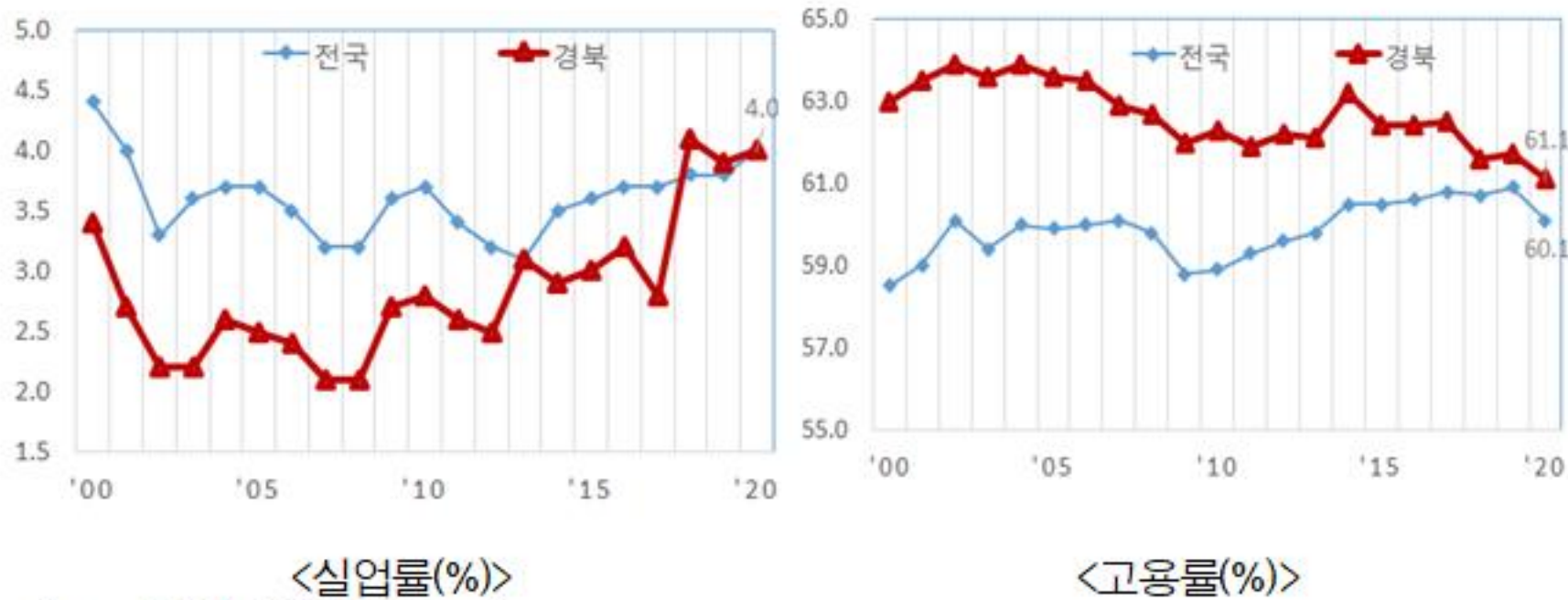


<경북 취업자 증감(천명)>

<그림 14> 경북 취업자 추이 및 증감

■ 실업률증가, 고용률 감소세

- 고용률은 낮게, 실업률은 높게 전국수준으로 수렴
- 고용률의 경우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전국수준과의 차이가 높지 않음
 - 실업률은 2017년 이후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하방으로 전국수준으로 수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15> 경북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 시군별 생산 자체는 증가하는 그 비중이 하락 특히 농산어촌 지역 생산성 비중이 하락

- 인구규모 비중과 다른 생산액 및 취업자비중
 - 2018년 기준 포항 구미의 생산액이 52.4천억으로 전체의 48.2% 차지하며, 중소도시1은 36.1% 차지, 중소도시2는 5.8%, 농산어촌은 9.9%를 차지하여 인구대비 생산액의 차이 발생
 - 경북의 대도시, 중소도시1, 중소도시2, 농산어촌의 인구는 각각 34.9%, 43.2%, 10.4%, 11.5%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구는 약 34.9% 차지
- 취업자 비중 약화되었으나 인구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21년 상반기는 2013년 보다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경상북도 2021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국 대비 5.6%로 2013년 상반기 5.3% 보다 0.3%p 낮음
 - 취업자 비중은 중소도시1과 중소도시2는 증가 하였지만, 군 단위 농산어촌의 경우는 감소
- 10억 생산대비 취업계수 및 생산성 증가율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고용 탄성치도 감소 예상

※ 참고, 인구 비중 대도시(2개) : 917,157(34.9%), 중소도시1 : 1,136,104(43.2%), 중소도시2 : 273,862(10.4%), 농산어촌 : 303,132(11.5%)

<표 13> 경상북도 시군별 생산성(GRDP) 및 취업자 현황

(단위 : 10억원, 천명, %)

행정 구역	시군별 생산성(GRDP)						시군별 취업자					
	2015			2018			2013 1/2			2021 1/2		
	생산액	비중	비고	생산액	비중	비고	취업자	비중	비고	취업자	비중	비고
경북도	103,120	100.0		108,783	100.0		1,391.3	100		1,419.9	100	
포항시	16,588	16.1	51,320	18,577	17.1	52,438	248.3	17.8	456.6	249.8	17.6	461.6
구미시	34,733	33.7	(49.8)	33,860	31.1	(48.2)	208.3	15.0	(32.8)	211.8	14.9	(32.5)
경산시	7,231	7.0	35,325 (34.3)	7,794	7.2	39,300 (36.1)	125.7	9.0	597.2 (42.9)	146.5	10.3	619.3 (43.6)
경주시	9,961	9.7		10,171	9.3		142.2	10.2		139.4	9.8	
안동시	3,249	3.1		4,898	4.5		86.6	6.2		84.9	6.0	
김천시	4,965	4.8		5,528	5.1		69.0	5.0		76.6	5.4	
칠곡군	3,877	3.8		4,283	3.9		62.4	4.5		59.4	4.2	
영주시	2,785	2.7		3,005	2.8		55.7	4.0		53.0	3.7	
영천시	3,259	3.2		3,621	3.3		55.6	4.0		59.5	4.2	
상주시	2,197	2.1	5,892 (5.7)	2,158	2.0	6,322 (5.8)	53.8	3.9	151.9 (10.9)	55.9	3.9	157.3 (11.1)
문경시	1,432	1.4		1,679	1.5		37.6	2.7		37.3	2.6	
예천군	1,034	1.0		1,194	1.1		25.7	1.8		32.1	2.3	
의성군	1,230	1.2		1,291	1.2		34.8	2.5		32.0	2.3	
울진군	2,719	2.6	10,582 (10.3)	2,311	2.1	10,722 (9.9)	26.8	1.9	185.6 (13.3)	25.8	1.8	181.7 (12.8)
성주군	1,608	1.6		1,830	1.7		25.4	1.8		25.0	1.8	
청도군	1,003	1.0		1,021	0.9		25.5	1.8		26.1	1.8	
영덕군	802	0.8		779	0.7		20.5	1.5		19.5	1.4	
고령군	1,358	1.3		1,506	1.4		21.0	1.5		18.8	1.3	
봉화군	980	0.9		1,024	0.9		19.5	1.4		19.4	1.4	
청송군	693	0.7		714	0.7		16.1	1.2		16.7	1.2	
군위군	765	0.7		818	0.8		14.1	1.0		14.5	1.0	
영양군	374	0.4		402	0.4		10.7	0.8		10.3	0.7	
울릉군	280	0.3		318	0.3		6.0	0.4		5.6	0.4	

주 : 위 표에서 제시한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 취업자 합계는 통계청의 광역도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당해년 가격, 각 년도

○ 산업단지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취업자도 감소

-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의 생산성 및 취업자가 감소, 산업단지 중심 첨단화 및 맞춤형 일자리 모델 구축

<표 14>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단위 : 개, 천㎡, 명, 백만원, 천달러, %)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고용	누계생산(백만원)	누계수출(천달러)
2019년2분기(A)								
국가	6개	83,686	78,545	2,600	2,141	102,373	28,097,421	12,874,593
일반	73개	48,324	48,117	1,926	1,721	49,810	8,683,367	1,878,590
농공	69개	11,701	11,611	1,067	949	21,119	4,237,394	969,964
소계	총148	143,711	138,273	5,593	4,811	173,302	41,018,182	15,723,147
2021년2분기(B)								
국가	6개	83,853	56,031	2,551	2,151	96,431	27,627,302	12,310,514
일반	74개	50,232	50,015	2,016	1,817	49,717	7,862,983	1,874,617
농공	69개	11,696	11,610	1,096	974	20,354	4,996,660	1,250,299
소계	총149	145,781	117,656	5,663	4,942	166,502	40,486,945	15,435,430
증감(B-A)								
국가		167	-22,514	-49	10	-5,942	-470,119	-564,079
일반		1,908	1,898	90	96	-93	-820,384	-3,973
농공		-5	-1	29	25	-765	759,266	280,335
소계		2,070	-20,617	70	131	-6,800	-531,237	-287,717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

4. 정책제언 : 쟁점사항 해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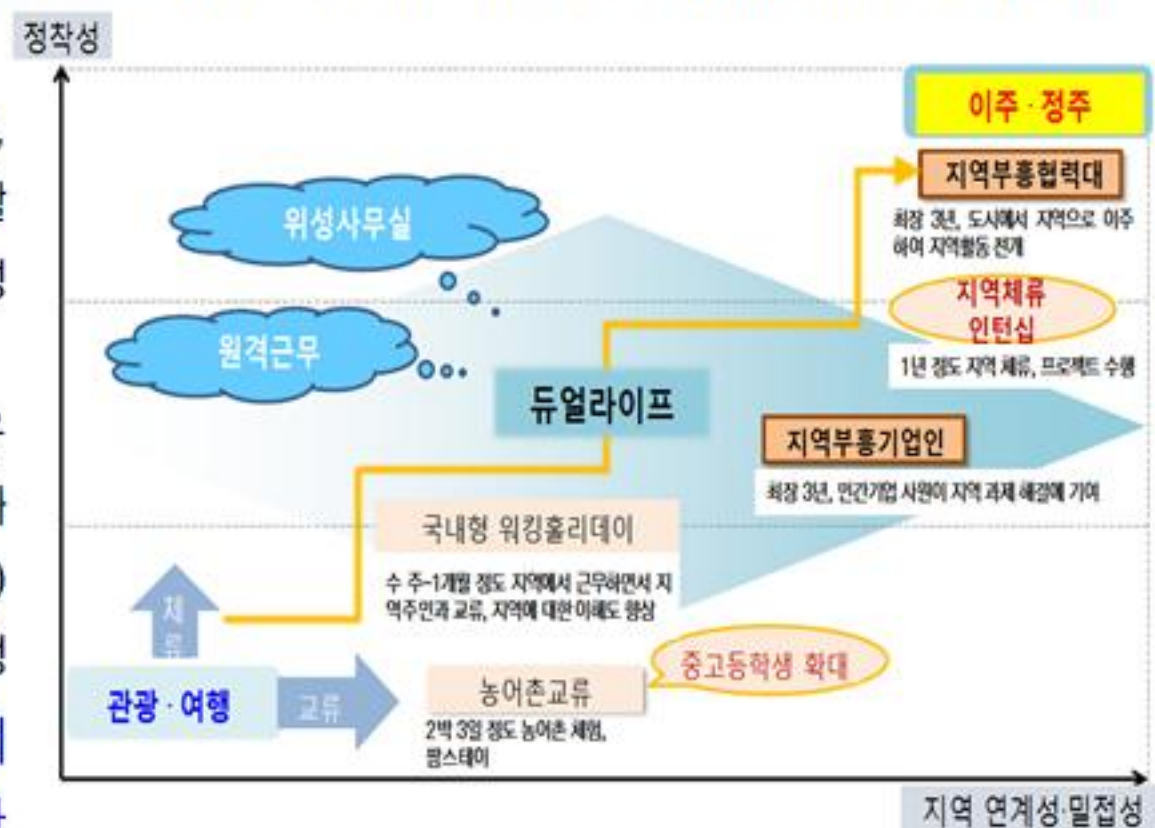
1) 듀얼라이프 정책화

■ 듀얼라이프 정책화 및 지원체제 마련 : 관계 및 유동인구 정책⁹⁾

- 경북 미래 인구정책 이원화 : 자연적 인구증가 정책과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
- 출산지원 정책 등 자연적 인구증가 정책 + 사회적 인구정책(듀얼라이프 : 관계 및 유동인구 전략)
 - 인구 양적 성장 중심 정책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맞춘 인구관리 정책의 유동인구 사회적 동태성 강화 정책 → [듀얼라이프 모델 사업화]

- 제도 구축으로 복수주소 갖기, 빈집은행 구축, 인구지역활력특별법 제정, 가칭)인구지역활력종합발전계획 수립,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정책 재정지원사업 발굴 등
- 듀얼라이프 인구정책 위한 추진체계 구축, 유동인구 활성화 위한 시군 듀얼라이프 모델화 및 1시군1프로젝트 추진, 사회인프라(SOC) 개선과 보완, 제도 구축(보완)의 큰 방향 설정

- 두지역살기(듀얼라이프) 정책은 지자체 간 인구 유입의 출혈경쟁을 피하고, 지자체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유동 혹은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예, 울릉도 한 달 살기)



<그림 16> 일본의 관계인구 모델

■ 사례

- 두지역살기(듀얼라이프, 멀티 헤비테이션)는 두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제2의 거점(거주)공간을 마련하여, 두 곳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왕래하는 삶을 의미
 - 제2의 거점 공간은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숙박시설이나 친인척·지인 집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일본 지바현 두 지역살기 정책 사례
 - 일본 지바현 카나안 마을 :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설립(2015~), 인구 약 1,500명,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후, 청년 예술가 작업실로 조성,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 노트북만 있어도 작업이 가능한 IT분야의 청년들을 위하여 설립, 시골프리랜서 양성, IT 계열의 강좌, 빈집 임대 후 셰어하우스 운영
 - ※ 커뮤니티 : 청년간, 지역주민과 청년간 융화, 일자리 자립의 원동력(2018년 12월까지 약 60명의 외지인력과 교류)
 - 일본 지바현 이스미시 : 빈집은행 운영, 마을 내 81채의 빈집확보, 인구 약 1,800명, 코워킹스페이스, 공간무상임대(5년), 지역부흥협력대 2명, 2018.11~2020년까지 80명 교류 목표, 강좌를 통하여 코딩 교사 양성 후

9) 경상북도 「듀얼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에서 일부 인용

2) 듀얼라이프(두 지역 살기) 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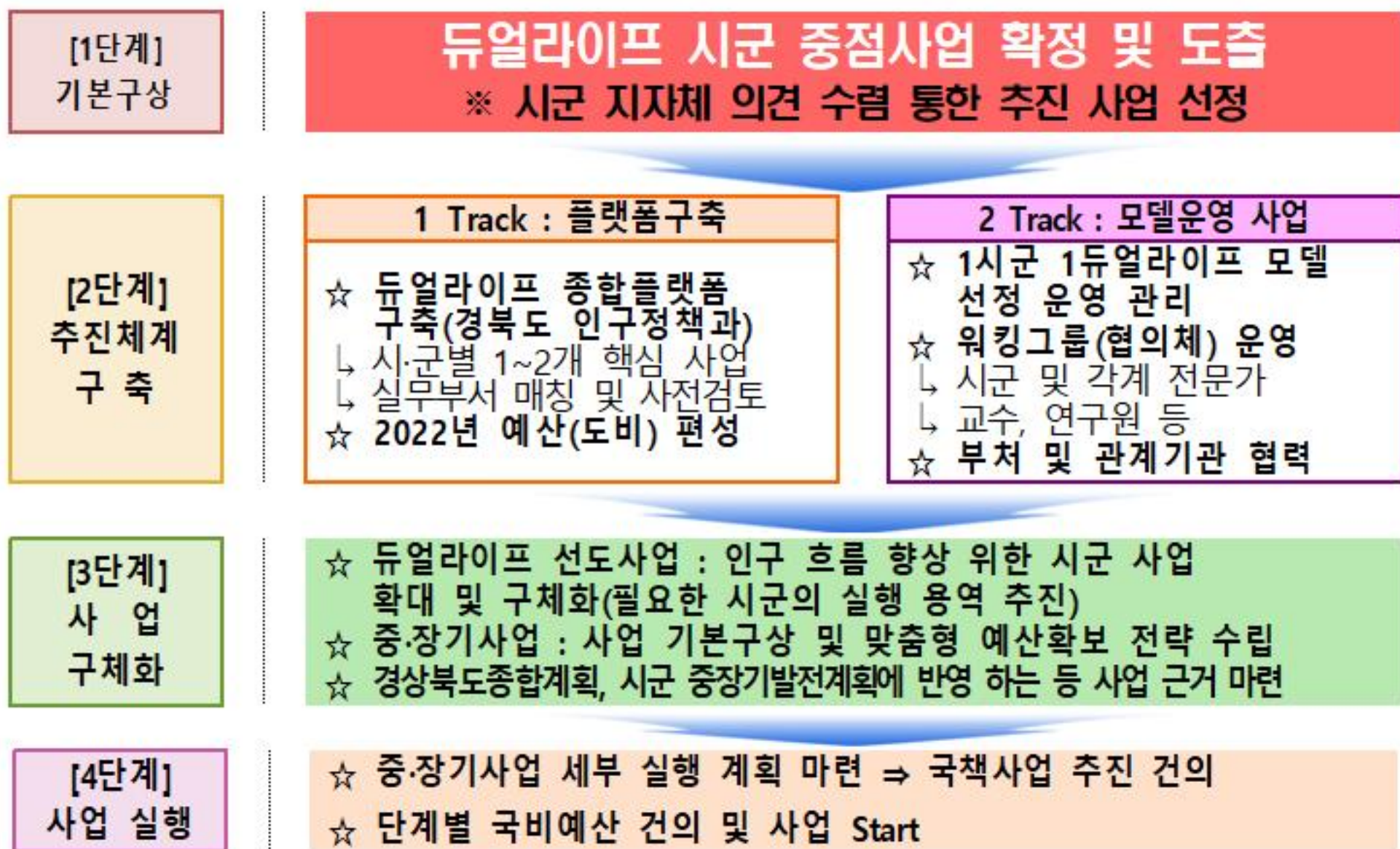
■ 듀얼라이프(두 지역 살기) 추진방향

- 경북 미래 인구정책 방향(정책 이원화) : 자연적 인구증가 정책과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
- 출산지원 정책 등 자연적 인구증가 정책 + 사회적 인구정책(듀얼라이프 : 관계 및 유동인구 증대 전략)
 - 인구 양적 성장 중심 정책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맞춘 인구관리 정책인 유동인구의 사회적 동태성 강화 정책 마련 → [듀얼라이프 모델 사업화]
 - 듀얼라이프 정책 : ① 추진체계 및 플랫폼 구축, ② 유동인구 활성화 위한 시군 듀얼라이프 모델화(8대 전략, 5개 모델, 85개 사업), ③ 듀얼라이프 1시군 1프로젝트 추진, ④ 사회인프라(SOC) 개선, ⑤ 제도 구축(복수주 소재, 빈집은행 등)

■ 추진체계 및 플랫폼 구축

○ 경상북도 듀얼라이프 추진체계 마련

- 경상북도 정책총괄기관 혹은 인구정책과를 듀얼라이프 주관기관¹⁰⁾ 지정 운영



- 주 : 1. 경상북도 내 총괄 추진체계와 각 시군 내 듀얼라이프 추진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시군간 유기적 정책 연계 및 협조 필요
2.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 가능

<그림 17> 경북 듀얼라이프 추진체계(안)

10) 듀얼라이프 정책은 인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획실이나 미래전략기획단 혹은 인구정책과(향후 인구정책총괄국 신설 고민)인 전담기관에서 수행 할 수 있음. 현재 경상북도 인구정책과는 총 10명(과장 1, 팀장 3 포함)에 불과, 조직 격상 및 강화 필요. 인구정책과는 저출산 관련 사업, 정부정책 동향파악, 국회의원 요구자료, 인구의 날 행사, 저출산 극복 범 도민공감대 확산 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이웃사촌시범마을조성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향후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인구관리정책관(국장급) 지정, 인구정책으로서 듀얼라이프 정책 표면화¹¹⁾

○ 경상북도 듀얼라이프 운영 통합 플랫폼(홈페이지 등) 구축 및 관리 운영

※ 통합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듀얼라이프 사업에 대한 안내, 커뮤니티, 피드백, 홍보, 확산, 갈등해소, 듀얼라이프 중개자 및 촉진자(퍼실리테이터) 인력 양성 등 역할

- 시군의 책임자와 연계되는 듀얼라이프 관리 운영 체계 구성 및 TF팀 운영

- 듀얼라이프 추진협의체 구성(경상북도(총괄), 시군), 경상북도 내 시군 협력을 통한 인구유입대책 마련 및 조정

※ 경북도 시군 단위 인구유입정책의 출혈 경쟁에 대한 정책(갈등)조정 등, 예, 안동시에 거주하면서 영주에서 일하고 있는 형태(생산일자리형 듀얼라이프 모델)

○ 듀얼라이프 플랫폼 구축 : 듀얼라이프 시군 대표 브랜드 사업 탑재 운영

- 경북형 듀얼라이프 통합플랫폼 관리 운영

- 경상북도와 시군에서 발굴된 듀얼라이프 시군 모델 및 사업 통합 운영 관리

- 경상북도 각 시군의 듀얼라이프 사업 혹은 정책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 듀얼라이프 정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운영(듀얼라이프 정책의 '구독경제' 도입) → 정책수용태세 마련, 아래 범주별 선택권으로 구분 모바일 서비스 등 앱 개발과 홍보)¹²⁾

※ 경북형 플랫폼에서 듀얼라이프 정책 검색 방식: ①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 유입형으로 구분, ② 미래산업, 미래주거, 도시정비, 미래관광, 그린인프라, 미래도로교통, 경관 등으로 구분, ③ 권역별 23개 시군 선택의 폭 지정(공급 : 도시유형(4개, 23개 시군, 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I), 중소도시형(II), 대도시형으로 구분한 듀얼라이프 정책 자료 제공, ④ 인구유형별 : 청년형, 중장년형, 고령자형, 은퇴자형 등, ⑤ 듀얼라이프 기간별 : 관광형(일시방문), 주말형(4~5일), 계절형(단기체류), 직장형(중장기체류) ※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https://live.jeonnam.go.kr/#none>) 참조

■ 듀얼라이프 1시군1프로젝트 추진

○ 경상북도 듀얼라이프 정책 모델 브랜드화

○ 23개 시군의 1시군 1프로젝트 브랜드화(23개 시군 46개 듀얼라이프 사업 예시)

○ 사회인프라(SOC) 개선 및 전략과 모델 연계(미래 산업, 주거, 그린인프라, 도시정비, 관광, 교통, 경관 등)

○ 사례, '경상북도 시군에서 한 달 살기 사업' 디자인

※ 듀얼라이프 수요 공급 모델과 경상북도의 비전과 전략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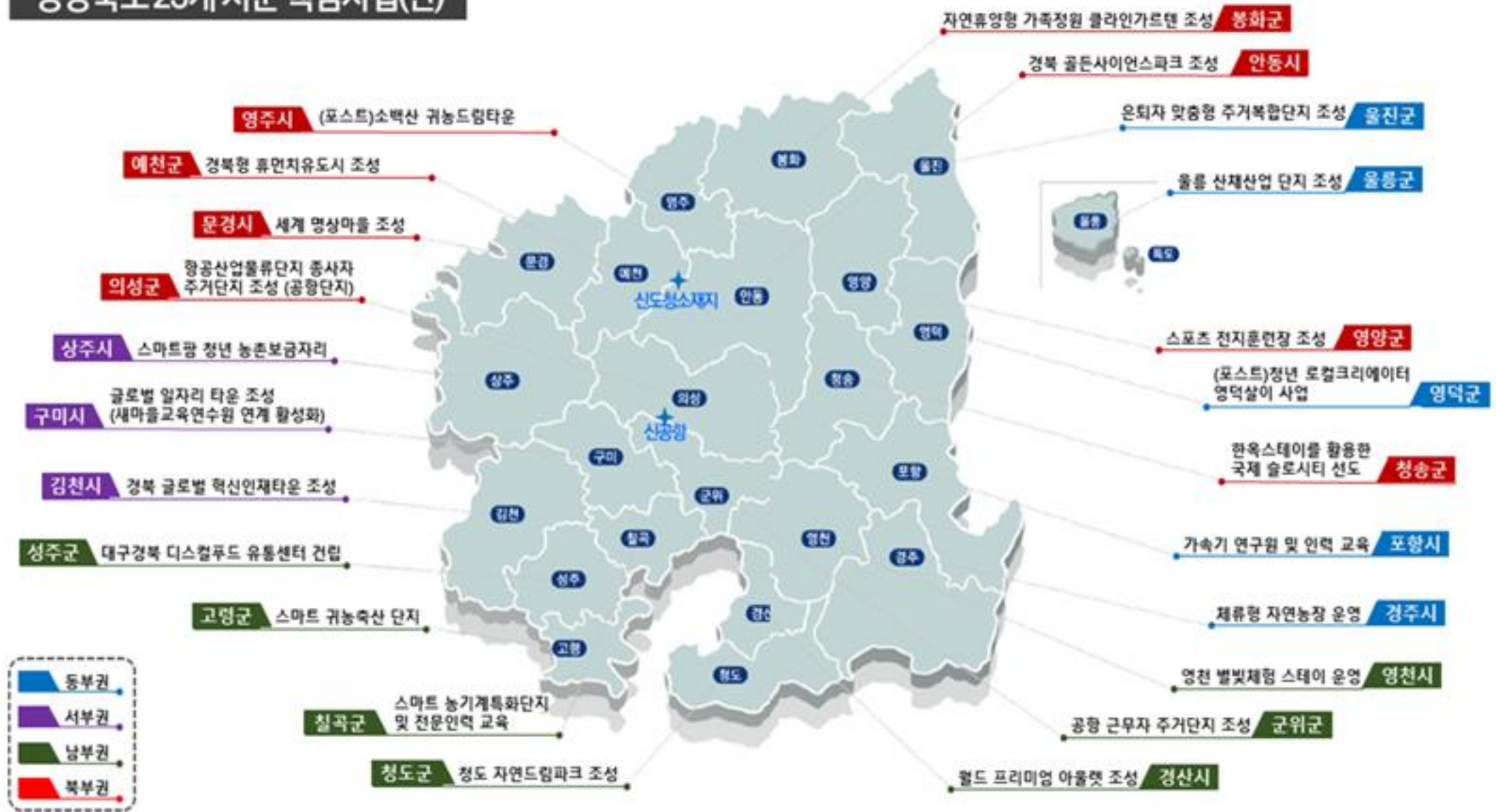
11) 경상북도 듀얼라이프를 '경북으로 오이소' 사업과 연계, 듀얼라이프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군 지역별, 특성별, 유형(연령)별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2) 온라인(인터넷)상에서 '경북 듀얼라이프'를 검색하면 바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듀얼라이프 정책을 확인하고 소비자(여타지역 주민)가 정책을 확인하고 시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듀얼라이프 **서비스 통합 추진체계 마련(듀얼라이프의 구독경제화)**. 다양한 형태의 검색엔진과 소통 방 마련, 빈집은행 DB, 듀얼라이프 컨설팅단(주거 및 조세전문가) 운영

<표 15> 시군 듀얼라이프 모델 사례

시군	프로젝트명	실행방안
영양군	• 별빛 오지체험 '영양 은하수' 프로젝트	• 접근도 개선(남북6축고속 도로), 주거개선(모듈형 주택, 전원주택단지 마련), 자연숲의 그린 인프라 대책과 융합
예천군	• 경북형 휴먼치유도시 조성	• 동서횡단 초광역 연결축으로서 철도망, 수혜지역자연숲의 그린 인프라 대책과 융합
봉화군	•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 경북선(점촌~영주),영동선 및 울진~분천 신설로 접근도 개선, 자연숲의 그린 인프라 대책과 융합
영주시	• (포스트)소백산 귀농드림타운	• 경북선(점촌~영주)접근도 향상, 귀농 체류형 주거지원, 주민등록이전 및 빈집구입에 대한 지원책 마련

경상북도 23개 시군 핵심사업(안)



<그림 18> 경북 듀얼라이프 모델 사례(안)

■ 듀얼라이프 제도 구축 및 정비(복수주소제, 빈집은행 등)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경상북도조례 제4247호, 2019. 10. 31., 제정, 시행 2019. 10. 31.] 개정을 통한 두 지역살기 정책 및 지원근거 제시
 - ※ 법 제3조(도지사의 책무) 3항에 '도지사는 유동 및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 삽입
- 수도권 거주자의 경북도 내 소멸위험지역에 듀얼라이프 중 주택을 매입(주말농장, 주말주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완화 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면제조건 명시
 - ※ 수도권 소재 거주자가 경북도 시군에 귀농과 전원생활을 위한 주말농장이나 주말주택 구입시 '별장'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별장으로 취급한다하더라도 구입시 취득세 완화 등
 - ※ 듀얼라이프 촉진을 위한 시골주택 구입시 '주말주택' 혹은 '별장' 구분의 명확한 근거 마련(주택가격, 주택유형,

주거형태, 시골주택 생활패턴 등 고려)

- 타지역 거주자가 듀얼라이프를 목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매입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나 요건을 기존 보다 완화할 필요

-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 수도권 및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토지 포함 주택 취득가액이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 취득 후 보유기간이나 토지 및 주택 취득가액 기준 완화 필요

- 경북도 내 소멸위험지역에 위치한 빈집이나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 혹은 한시적 면제

- '경상북도 빈집은행' 구축 운영

- 경상북도는 시군 자료 협조를 받아 관리 운영하면서 시군 정책 연계(듀얼라이프 종합플랫폼에서 관련 빈집 데이터베이스(DB) 연계)

- ※ 빈집 실태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빈집플랫폼 공개량)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¹³⁾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¹⁴⁾에 (가칭)빈집은행 구축 제도화

- ※ 조례규정도 불구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는 빈집에 대한 조사나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 깨어진 유리창 이론 등에 근거 빈집 방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건의(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영국 빈집 방치 기간 2년 경과시 법적강제력)

- ※ 23개 시군단위 빈집조사표 등 확인을 통해 경북도 차원의 빈집실태조사, 빈집 DB구축과 관리 운영 등 지원체제 마련

- 경상북도로의 듀얼라이프 수요 충족 위한 컨설팅단 운영(인구정책총괄국, 통합플랫폼내 듀얼라이프 Q&A을 만들고, 주택 및 조세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복수주소제(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주소지 인정) 건의

- ※ 주민등록 주소 이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지원체제 마련(지원균형발전 측면), 주민등록 주소를 여타지역에 두면서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약 15만 명에 이릅니다

- 이주 활성화지역 지원 사업, 인구 감소 소멸지역을 이주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거소나 거주소로 등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민법상 거소지역 법률행위 특례 제공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후지역',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특례 등 참고, 이주활성화지역 운영 방안마련

- 이주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총당하는 방안 검토

- 고향이주 희망 지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하여 고향이주 희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거소나 거주

13) 한국국토정보공사, 빈집정보시스템(<https://gongga.lx.or.kr/portal/main.do>)과 연계(현재 영주, 김천, 경주 등 3개 시가 실태조사 진행 중이며, 고령군은 실태조사 완료)

14)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로 등록할 경우 명예주민증 발급

- 이주 확인 개인에게 이주에 필요한 활동 특례 제공, 주택 및 토지구입 세제 감면(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보육·의료·보건 등에 관한 바우처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

※ 주민등록주소가 여타시도에 있고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2주소로 간주 [지방세 배분 원칙 마련, 예시]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세원 70%, 사업장 주소지 지자체 세입 30%

→ 경북형 복수주소제 우선 시행

■ 1시군 1일자리 모델 구축

○ 지방산업 단지 및 농경 단지 중심 일자리 모델 마련 및 집행

-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최근 정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연계
- 상향적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과 일자리 계획 마련 등

<표 16> 경상북도 시군 산업단지 현황(2021년 기준)

지역	국가산단(6)	지방산단(74)	농공단지(69)
포항시	포항국가, 포항블루밸리	신홍,영일만2,포항4,광명,영일만3,영일만4,영일만,영일만,영일만(포항외국인),그린	청하
경주시	월성전원	강동,건천제1,건천제2,명계2,문산,석계,석계2,외동,외동2,천북,화산,모화,계내2,서동,구어2,건천용명,건천3,나아,계내5,문산2,검단,석계4,건천4,명계3,천북2,녹동,양남,대곡2,외동3,혁신원자력연구	건천,내남,서면,안강,외동
구미시	구미국가(1단지)[재생사업지구], 구미국가(2-4단지), 구미국가(2-3단지), 구미국가(4단지), > 구미4(산업), > 구미4(구미외국인),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고아,산동,해평,고아제2
경산시		경산1,경산2,경산4,경산3(구 진량2),경산1-1(구 진량3)	
김천시		김천1,김천1(3단계)	감문,대광,아포,지례
문경시		신기제2,신기	가은,가은제2,마성,산양,영순,영순제2,산양제2
상주시		상주청리,상주한방,상주	공성,외담,함창,함창제2,화동,화서,화서제2
안동시		경북바이오,경북바이오2차	남선,남후,풍산
영주시		두전,영주,가흥,갈산,SK머티리얼즈(구 OCI머티리얼즈),	문수,반구전문,봉현,장수,적서,휴천
영천시		고경,영천첨단부품소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고경,도남,본촌,북안,화산
고령군		개진,성산,고령1(구 다산),고령2(구 다산2),월성,동고령(구 박곡),송곡,열쇠	개진,쌍림
군위군			군위,효령
봉화군		석포	봉화,봉화제2,유곡
성주군		성주,월항,성주2	선남,성주,월항
영덕군			영덕,영덕로하스특화,영덕제2
예천군			예천,예천제2
울진군			울진
의성군			다인,봉양,의성,단일
청도군			청도,풍각
칠곡군		왜관,왜관(기존),왜관(추가),왜관3,연화	기산,칠곡농기계특화
울진군			평해,죽변해양바이오
영양군			남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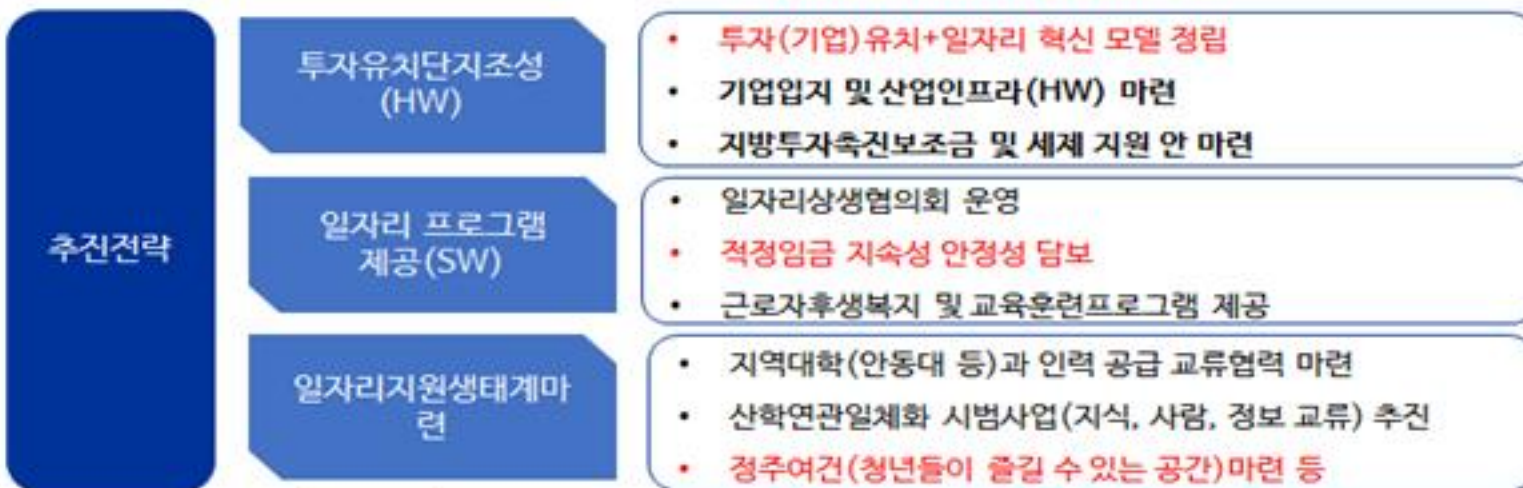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안동형 일자리 개념 및 내용(사례)

- 안동형 일자리는 생명바이오식품 분야 신규기업유치, 기업확장(합자)투자, 창업혁신 상생일자리 모델임
- 부지공급+세제감면(HW측면)+인력양성(SW측면)+정주여건 등 일자리지원생태계 통합 지원체제 마련

사업명 안동형 상생일자리 모델 (I) 구축

목표 생명바이오식품 신지식기업(산업) 일자리 확충



주 :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나누기)을 동시에 진행하는 지속 상생발전 모델
 <그림 19> 안동형 상생일자리 모델

※ 경주형 투자유치일자리 모델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분야 대기업유치와 지역 중소중견기업 합자 투자형으로 유치기업의 일자리창출, 생산증대,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등을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 발전하는 **‘지속상생발전 모델’**임(비전, **“전기자동차 상생 일자리의 중심 경주”**)

※ 완성차 관련 대기업 유치와 지역기업의 컨소시엄¹⁵⁾을 통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 공동출자와 연구개발, 전략적 OEM 형성

○ 생명바이오식품 분야 ‘안동형 일자리 모델’은 제조서비스 융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임

- 생명바이오식품 산업 분야 ①대기업(협력업체 포함) 투자 유치, ② 기존기업 지원 및 확장(증설투자), ③창업 인프라 활용 일자리 창출

○ 경북바이오산업단지내 안동형 일자리 모델지구 지정

-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내 바이오산업(생물산업)부지를 ‘안동형 일자리’ 모델 지구로 지정

→ 기업유치부터 일자리 유지 관리 까지 전주기적지원체제 마련

-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내 ‘안동형 일자리’부지 추진(약 15만m²)



주 : SK케미칼안동백신(SK바이오사이언스)공장 신증설과 연계

○ 대기업 및 고용효과가 큰 우수기업(20개社) 유치(투자촉진형) <그림 20> 안동형 상생일자리 모델 지역

15) 완성차 대기업 유치가 어려울 경우 경주지역 중심의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사업 가능(컨소시엄을 통한 대기업 원청업체와 협상력 강화), 부품 중견기업들의 합자투자를 통해 완성 전기차 생산조립공장 설립도 가능

- 1,000개 일자리 창출 협약(연구개발 등 고급일자리 50개, 중급일자리 200개, 생산전문인력 750개)

○ 기존 기업 지원 및 투자 확장을 통한 부지와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통한 일자리 창출

- 대학과 지역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500개 일자리 창출 협약(연구개발 등 고급일자리 10개, 중급일자리 90개, 생산전문인력 400개)

※ (주)웰츄럴바이오 등 안동 소재 29개 생명바이오식품기업과 추가 일자리 창출 협약 통한 안동형 일자리 구체화

■ 경북지역 시군 단위 기업 부설연구소 연계 일자리 모델 구상

○ 시급 도시와는 달리 군 단위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많음

<표 17> 경북지역 기업연구소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북	경산시	163	184	201	219	233	235	224	222	231
	경주시	89	103	124	124	127	139	119	118	123
	고령군	12	12	21	23	26	25	25	24	22
	구미시	270	305	350	394	408	419	420	417	400
	군위군	6	8	9	8	9	11	9	9	6
	김천시	31	40	36	43	53	56	60	62	64
	문경시	15	13	15	16	15	14	14	14	13
	봉화군	2	2	2	3	2	1	1	1	1
	상주시	14	16	14	14	15	20	21	19	18
	성주군	26	31	41	49	55	62	71	66	58
	안동시	12	14	14	20	29	32	31	32	30
	영덕군						1	1	1	
	영양군						1	2	2	2
	영주시	7	8	7	10	11	11	12	11	12
	영천시	44	60	72	75	82	86	86	87	90
	예천군	1	1	3	3	4	4	3	3	3
	울릉군	1	1		1	1	1	1	1	1
	울진군	3	3	5	5	5	6	5	5	4
	의성군	6	8	6	6	7	6	5	6	4
	청도군	8	8	10	11	11	12	9	11	12
철곡군	99	122	137	158	155	161	146	151	159	
포항시	109	119	128	137	143	147	153	166	197	

자료 : 기업부설연구소(<https://www.rnd.or.kr/user/infoservice/stats1.do>)

5. 결론

■ 경상북도 지방 중소도시 문제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를 해소하는 것임

→ 정책의 2원화 필요[자연적 인구 증가, 사회적 인구 증가정책(듀얼라이프)]

- 지역균형발전 측면 유동인구 증대 위한 정부 정책방향 마련과 제도 개혁
- 복수주소제, 빈집은행,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연계한 듀얼라이프 정책 추진체제 마련
- 지방 교부세 및 지방세 배분, 부동산 취·등록세 조정 연계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시대 경북의 정책대응 역량과 준비는 많이 미흡한 수준

■ 경상북도 시군 산업단지 내 1시군 1일자리 프로젝트 상향적 추진 등

- 안동 생명 바이오 식품 분야 일자리 모델, 경주 전기자동차 상생일자리 중심, 구미 배터리 양극화 집적화 단지 조성 등

< 부 록 >

■ 듀얼라이프 수요공급 모델(안)

● 수요모형 : $F(U_d) = \alpha + Pa + Lt + li + Ee$ ● 공급모형 : $F(U_s) = \alpha + Pa + Lt + li + Ee$
 [U: 도시(=듀얼라이프+경제영토확장), P: 인구, L: 생활, I: 인프라, E: 기타 등, $d=1, \dots, 5$, $s=1, \dots, 4$, $a=1, \dots, 4$, $t=1, \dots, 4$, $i=1, \dots, 7$]
 → 미래 도시(지역) 경쟁력은 듀얼인구(+주민등록인구), 도시인프라(서비스), 기타(제도)로 구성

<수요와 공급측 듀얼라이프 유형화>

구분		수요: 듀얼라이프 유형(5개)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수요자 고려, U_d)	공급: 도시유형(4개, 23개 시군) 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I), 중소도시형(II), 대도시형(공급자 고려, U_s)
인구규모 (u)	주민등록인구		
	듀얼인구		
인구 (연령) (P)	청년형		
	중장년형		
	고령자형		
	은퇴자형		
생활 (기간) (L)	관광형(일시방문)		
	주말형(4~5일)		
	계절형(단기체류)		
	직장형(중장기체류)		
인프라 (I)	미래산업		
	미래주거		
	도시정비		
	미래관광		
	그린인프라		
	미래도로교통		
	경관		
기타지원방안(공동사업, 법제도, 형·재정)			

<수요와 공급 균형에 의한 듀얼라이프 사업(안)>

구분		공급: 도시유형(4개, 23개 시군) (공급자 고려, U_s)			
		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I)	중소도시형(II)	대도시형
수요: 듀얼라이프 유형(5개) (수요자 고려, U_d)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 두 지역살기(듀얼라이프) 수요(여타지역)공급(경북시군) 일치에 따른 사업모델 제시(23개시군 46개 사업)

■ 경상북도 듀얼라이프 비전 및 전략





<토론자료>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 김규호 명예교수 (경주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경주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김규호

-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 II. 한국판 뉴딜정책
-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 전략

■ 문제지역 해소

- 과밀, 침체, 낙후지역

■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정책

- 하향식개발 : 성장거점정책
- 상향식개발 : 지방분권, 선택적 공간폐쇄전략
- 과밀억제정책

■ 국가균형발전정책

- 중앙 집권식 · 하향식 → 분권적 · 상향식

■ 외생적, 타율적 발전전략

- 내생적, 자율적 발전전략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 Invention → Innovation → Diffusion

■ 지역혁신체계

- 개념
 - 제품, 공정 및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 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NGO구성요소
- 하부구조
 - 공간, 시설
- 상부구조
 - 관련조직, 제도, 주민의식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지역혁신체계

■ Techno-polis의 문제점

- 연계체계부족 → 연구개발 결과 산업화 저조

■ 지역혁신체계

지역 사업체 영세성

기술협력, 제휴, 정보 및 지식활용의 한계

클러스터 정책 : 공간적 외부효과

집단학습, 공동마케팅 전략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지역혁신체계

■ 지역혁신체계의 문제점

- 지역산업 및 혁신정책
 - hardware 중심(첨단지식기반산업, 신 산업지구)
- 클러스터 정책
 - 지역실정 반영 미흡
 - 선택과 집중이 논리

■ 지역혁신의 성공요건

- 지역혁신체계구성 → 핵심전략산업 선정
- 혁신적 클러스터구축
 - 집단적 학습과정 소화능력
 - 정보수집 및 공유에 의한 경쟁력 확보
 - 지역혁신 주체간 원활한 상호작용, 집단학습 환경조성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 가속화

■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수도권에서 행복도시·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명)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행정수도 집중의 문제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화
 -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50% 상회
 - 2040년 51.4%까지 증가 예측
- 비수도권 고령화, 경제의 상대적 쇠퇴
 -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
 - 인구감소
 -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1,000대 기업 본사 75% , 유력 언론사, 금융권 90%, 대형병원 등 수도권에 집중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리얼미터 : 찬성 53.9%, 반대 34.3%(20.7.21)
- 미디어리서치 : 찬성 48%, 반대 44%(20.7.25)
- M B C : 찬성 45.6%, 반대 48.3%(20.8.15)

I.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구·경북의 대응

■ 행정수도 완성 효과

- 수도권 범위확대
 -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외연적 확산
 - 세종, 대전, 청주
- 영남, 호남, 강원지역은 행정수도 완성 영향권에서 소외
 -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범위 확대에 불과
 - 국토의 다극적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대안 요구
 - 영남, 호남, 강원지역에 대한 지역 성장의 핵(growth pole) 설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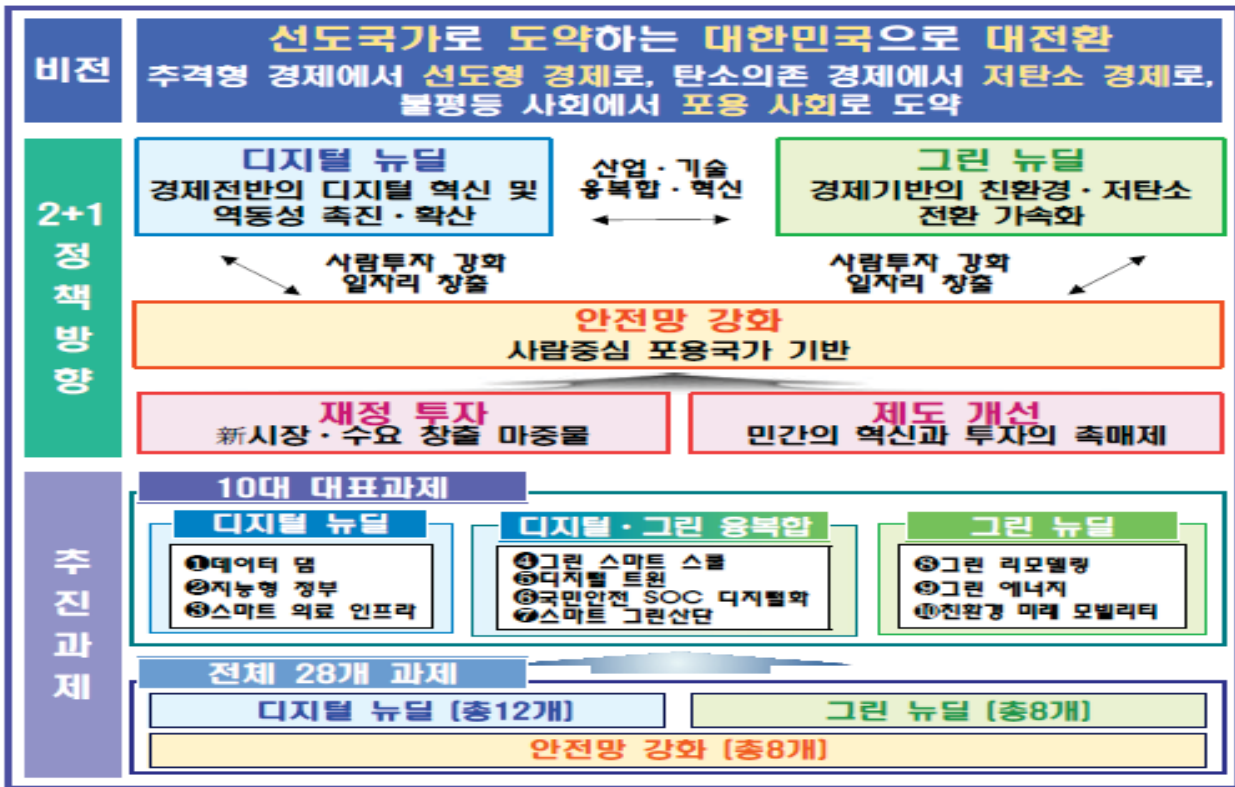
■ 대구·경북의 대응

- 집적경제,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한 경쟁력 제고
 - 권역 내 Mega City조성과 단계적 성장거점 육성
- 공간통합, 산업부문별 기능통합에 의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비한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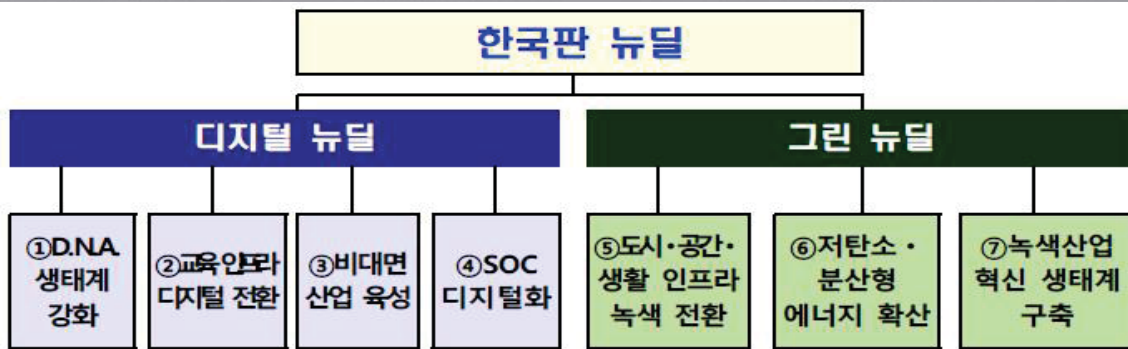


자료 :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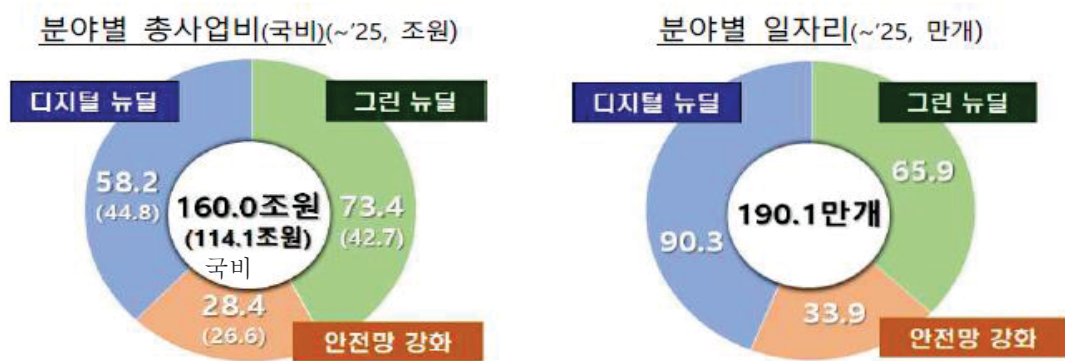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고용 · 사회안전망 + 사람투자)



자료 :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14.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 뉴딜 신산업 규제개혁



목표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동력 창출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

기본방향

先허용-後규제, 네거티브化를 실천하는
도전적 규제정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상생형 규제정비

미래 신기술 발전을 준비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 발전방향

- ① 규제 샌드박스 확대
- (분야) 5+1 → 7+1 체계 (R&D·모빌리티 추가)
 - (특례) 2+2 → 2+2+α년
 - (조직) 한시 → 정규조직화
 - (특구) 국책과제 연계특구 지정
 - (중점) 사업승인 → 규제개선
- ② 포괄적 네거티브 정착
- (신규규제) 규제법제심사 강화
 - (기존규제) 기관별 → 분야별 정비

- ① 갈등 조정체계 강화
- 범위·파급력 감안, 총리 주재 회의/국조실장 협의회 가동
 - 한걸음 모델 확산 / 실증특례·임시허가 활용
- ② 현장소통 채널 활용
- 총리 주재 현장대화 활용 (의견수렴·해결방안 모색)
 - 신산업규제혁신위 상시기동 (Top-down + Bottom-up)

- ①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 (기존) 5개 분야 → (추가) AI,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추가
 - * 20개 신산업 전반 추가 검토
- ② 로드맵 주기적 재설계
- 기술·시장환경 변화 반영
 - 2년 주기 재설계
 - * ('21) 자율주행차 ('22~'23)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 등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 뉴딜 신산업 규제개혁



전략

5대 분야, 20개 신산업 집중 정비
→ 규제특성·갈등상황을 감안한 규제혁신 제도 집중 적용

집중정비

분야

1 DNA 산업	2 비대면 산업	3 기반산업 스마트화	4 그린 산업	5 바이오·의료 산업
① 빅데이터	① 가상·증강현실	① 스마트도시	① 신재생에너지	① 디지털 헬스케어
② 인공지능	② 원격교육	② 스마트그린산단	② 친환경차	② 유전자 검사·치료
③ 지능형 로봇	③ 디지털콘텐츠	③ SOC 스마트화	③ 녹색 인프라	③ 新의약품·의료기기
④ 핀테크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공유경제	④ 친환경 농어업	

◆ 한국판 뉴딜 성과가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에 중점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 뉴딜 4대 원칙

- 초광역권 아젠다 설정
- 한국형 뉴딜의 상징화 및 모범사례 발굴
- 선택과 집중 전략
- 당수도 의사결정

■ 지역균형뉴딜 추진체계

- 디지털, 그린, 사회적 뉴딜 등 횡축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종축
- 횡축과 종축을 Matrix형으로 연결하는 지역균형뉴딜 구상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 지역균형 뉴딜



■ 초광역 뉴딜

- 광역철도망 구축 :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 자율주행mobility : 충청, 경기 등 시범지역 운영
- 디지털 트랜스퍼 :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후 방향설정
- 지방벤처펀드 : 부산벤처펀드 타지역 확산

■ 지자체 주도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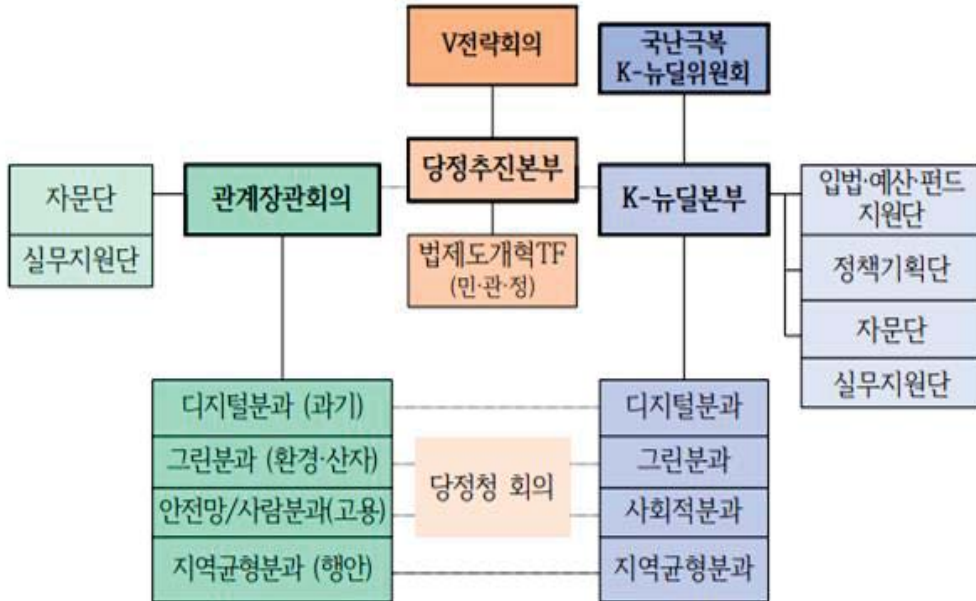
- 지자체가 발표한 지역뉴딜
- 시도당위원장 선정 우선과제

■ 국가주도 뉴딜

- 중앙정부 주도 디지털, 그린, 사회적 뉴딜 중 지역 사업
- 균형발전지표 반영

II.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 추진체계



자료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한국판 뉴딜2020년 추진성과 보고서. 2020. 12.29.

■ 지역균형 뉴딜

- 제2차 전략회의에서 추가
- 한국판뉴딜 성공적 추진과 성과를 지역과 공유
-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 추진

II. 한국판 뉴딜정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역위원회 뉴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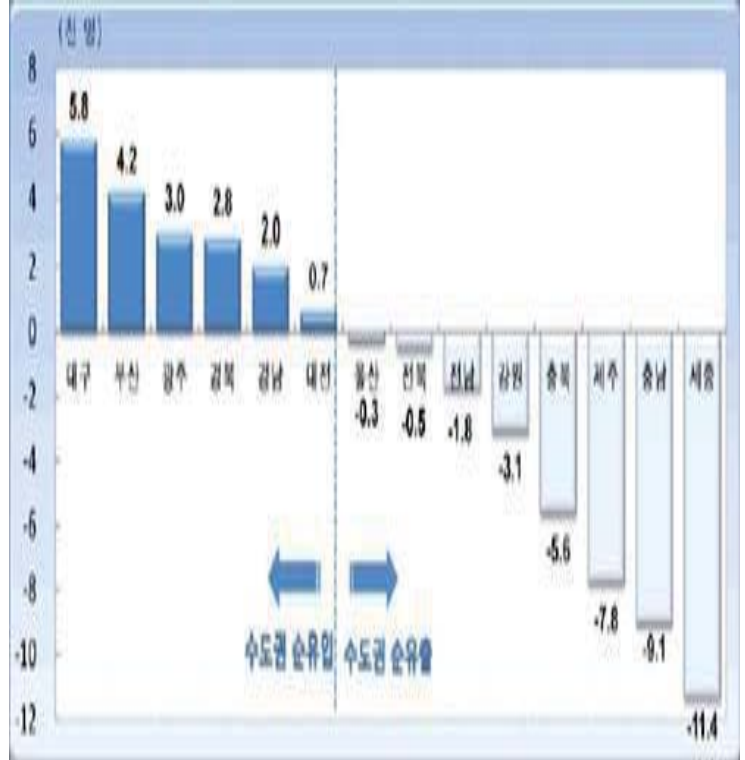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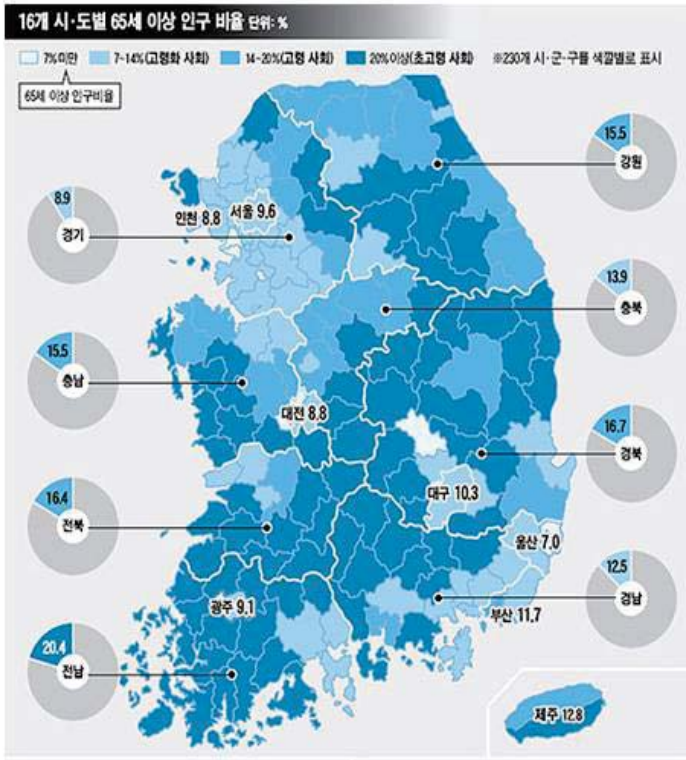


지 역	사 업(31)
구미	항상동 도시재생 프로젝트, City of Ranger 밀리터리 테마파크(2)
포항북	가속기 기반 바이오헬스 뉴딜사업(1)
포항남	산업단지 대개조사업(1)
경주	친환경 축산 바이오발전소 설립, 원전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경주천년한우 TMF사료공장 설립, 청년과 예술인의 매칭을 통한 민간주도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4)
상주문경	경관 및 밀원 숲 조성,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3)
안동예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원도심 재생을 위한 안동역사부지 개발, 원도심↔도청 신도시간 직행로 건설(3)
영천청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청도군 취약지역 스마트 그린 도시 구현(2)
경산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2)
구미갑	4차산업 데이터 생산 테스트베드, ICT를 활용한 재생 산업 활성화,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사업 육성 및 통합 에너지 거래플랫폼 조성, 낙동강 유선장 테마파크 건설 지원사업,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1) 유해어류 수매사업과 친환경 어분비료 공장, 토종어류 스마트 양식 지원과 미래먹거리 확보, 노후 어선 전기 어선 교체와 시 선박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데이터 공유 센터, 웰빙 귀농타운 조성과 귀농 스마트팜 데이터 확보, 인문 데이터 센터, 산단 스마트화를 지원할 재교육 플랫폼 육성 지원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친환경 청년벤처 공유 오피스텔, 한방자원 스마트팜 일반산업단지,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센터 및 헬스포인트와 연계한 지역화폐(13)

III. 대구·경북 현안문제



늘어가는 대구, 소멸 고위험지역 경북



출처 : 허재완, 광역화시대, 대구·경북의 미래, 2018. 11

III. 대구·경북 현안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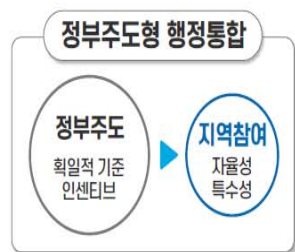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방향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구·경북 지역에 설치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존보다 폭넓은 자치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포함

기본원칙	일대일 대등통합	한쪽의 흡수가 아니며, 기존 권한과 지위를 유지 또는 상향
	지방분권형 통합	효율성이 아닌 지위 및 권한 특례에 중점
	상생의 통합	중앙, 지방, 주민 상생 발전 지향
	상향식 통합	지방과 주민의 주도



통합방식	대구+경북 완전통합을 통한 완전 자치를 지향 : 500만명 규모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원칙적으로 폐지 > 경북 : 23개 시·군 존치 > 대구 : 8개 구·군 존치, 자치구 or 특례시 형태
	지역주도형 새로운 지방정부 창설 : 경북 및 대구 권한·기구·정원 + α(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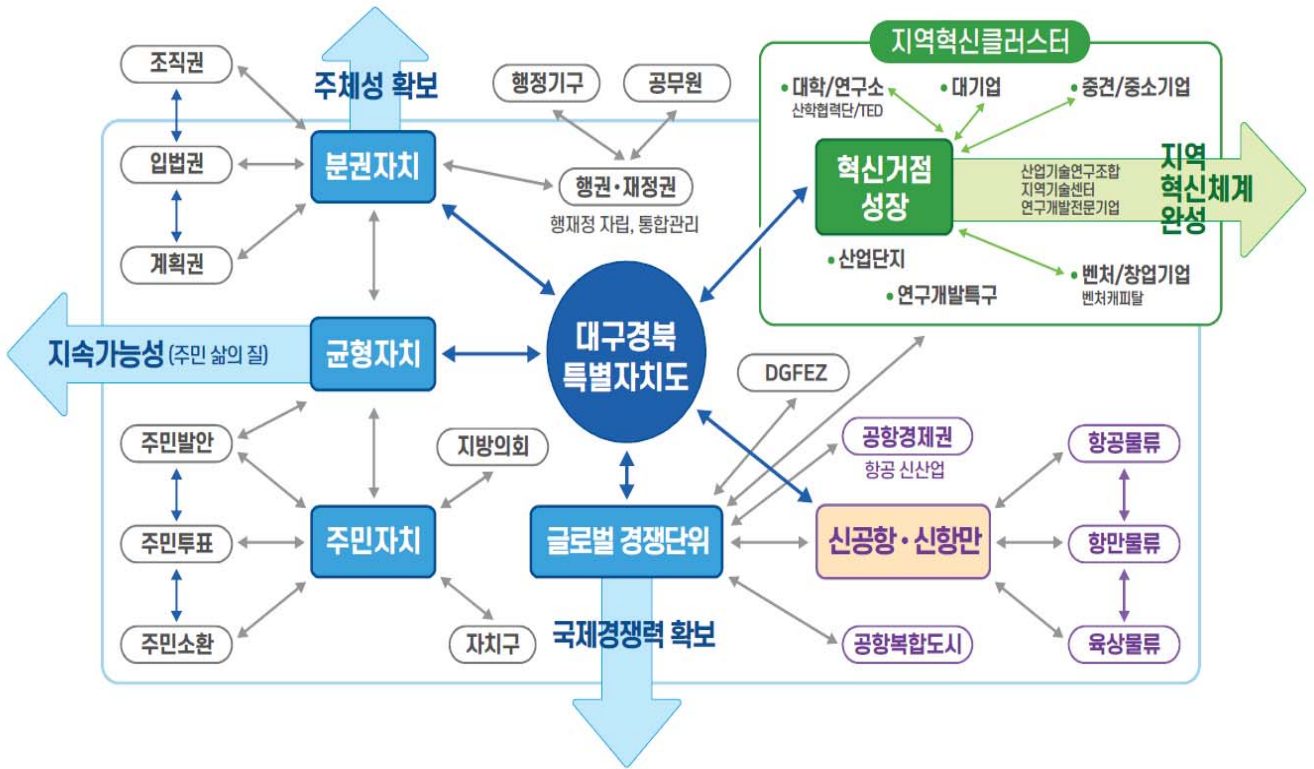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 지방분권법 +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자료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2020).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행정통합모델



자료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2020).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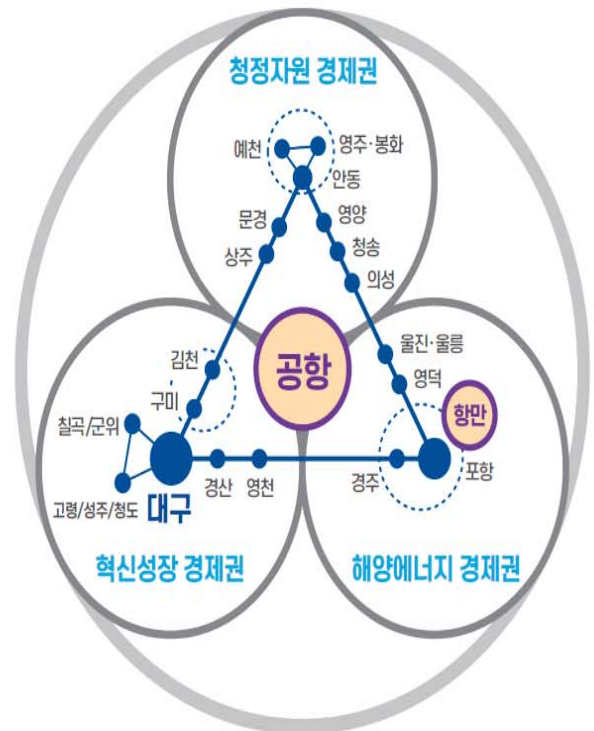
3대 경제권 + 2포트 인프라

3대 거점 경제권

- ☑ 혁신성장 경제권 (10) 대구, 김천,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 해양에너지 경제권 (5)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 청정자원 경제권 (9)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2대 포트 (port)

- ☑ 하늘 길 : 통합 신공항
- ☑ 바닷 길 : 포항 영일만 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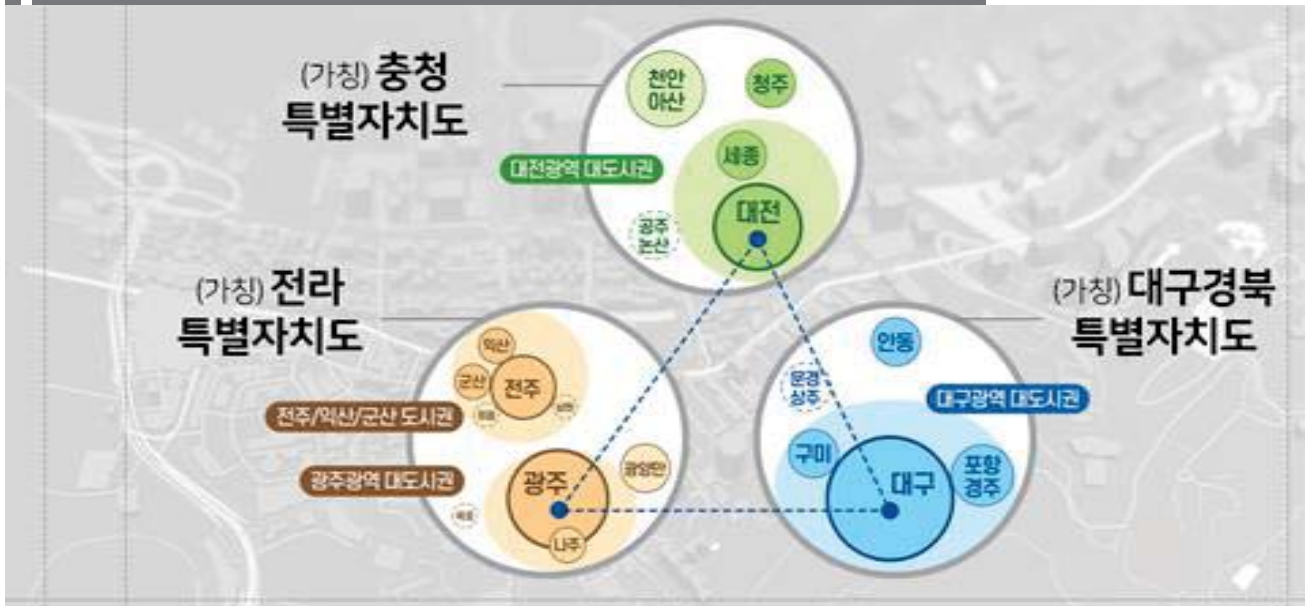


자료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2020).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3개 특별자치도



자료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2020).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 특별자치도 : 권역 내 중심지와 주변지역 불균형 문제 발생 가능성
- 광역시 기초단체 통합(2~3개), 시·군(4~7개) 통합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구상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

■ 대구경북통합특별시

- 대구광역시 7개 구, 1개 군
- 경상북도 23개 시·군
- 31개 기초자치단체 존속

■ 대구경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7개 구 : 준자치구
- 24개 시·군으로 편성
- 준자치구 : 해당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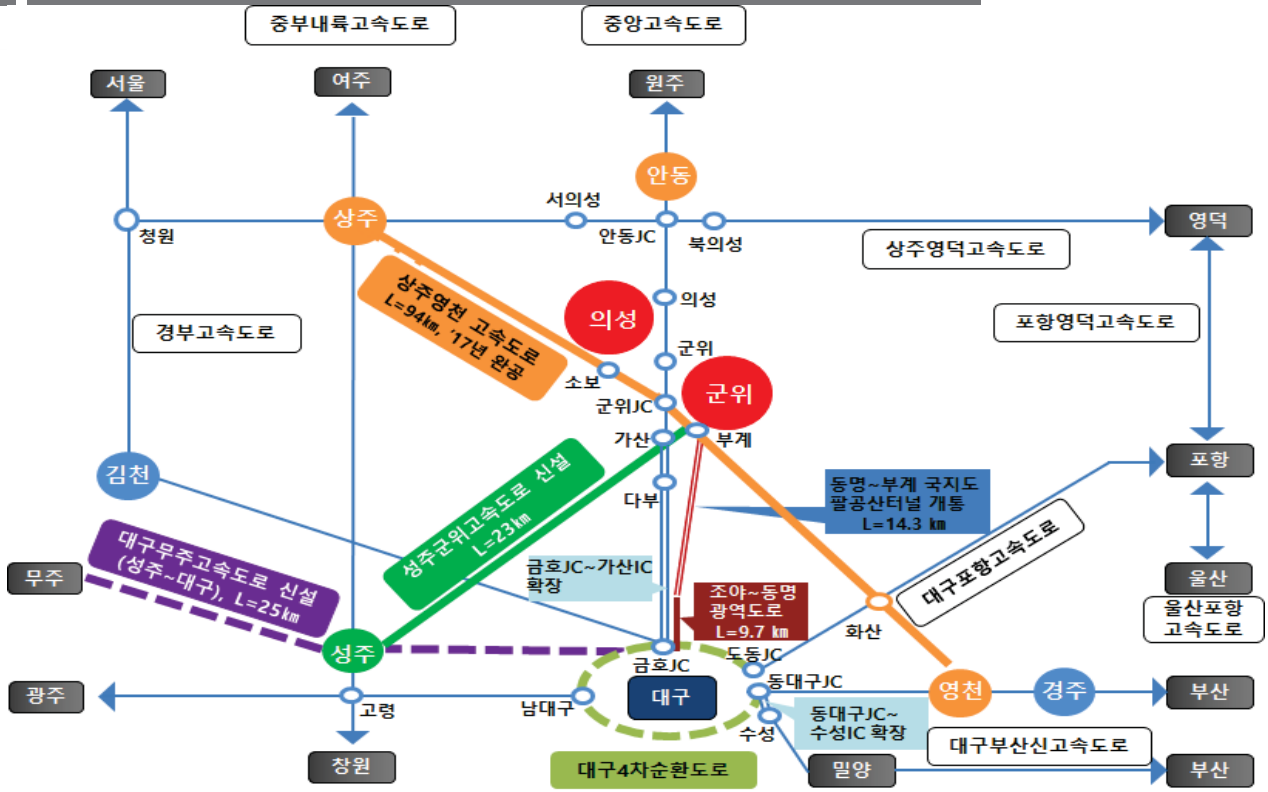
■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문제점

- 도시연담화에 의한 집적경제 : 행정통합보다 교통망체계
- 지역내 불균형 초래
- 현행 지방자치법 :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도로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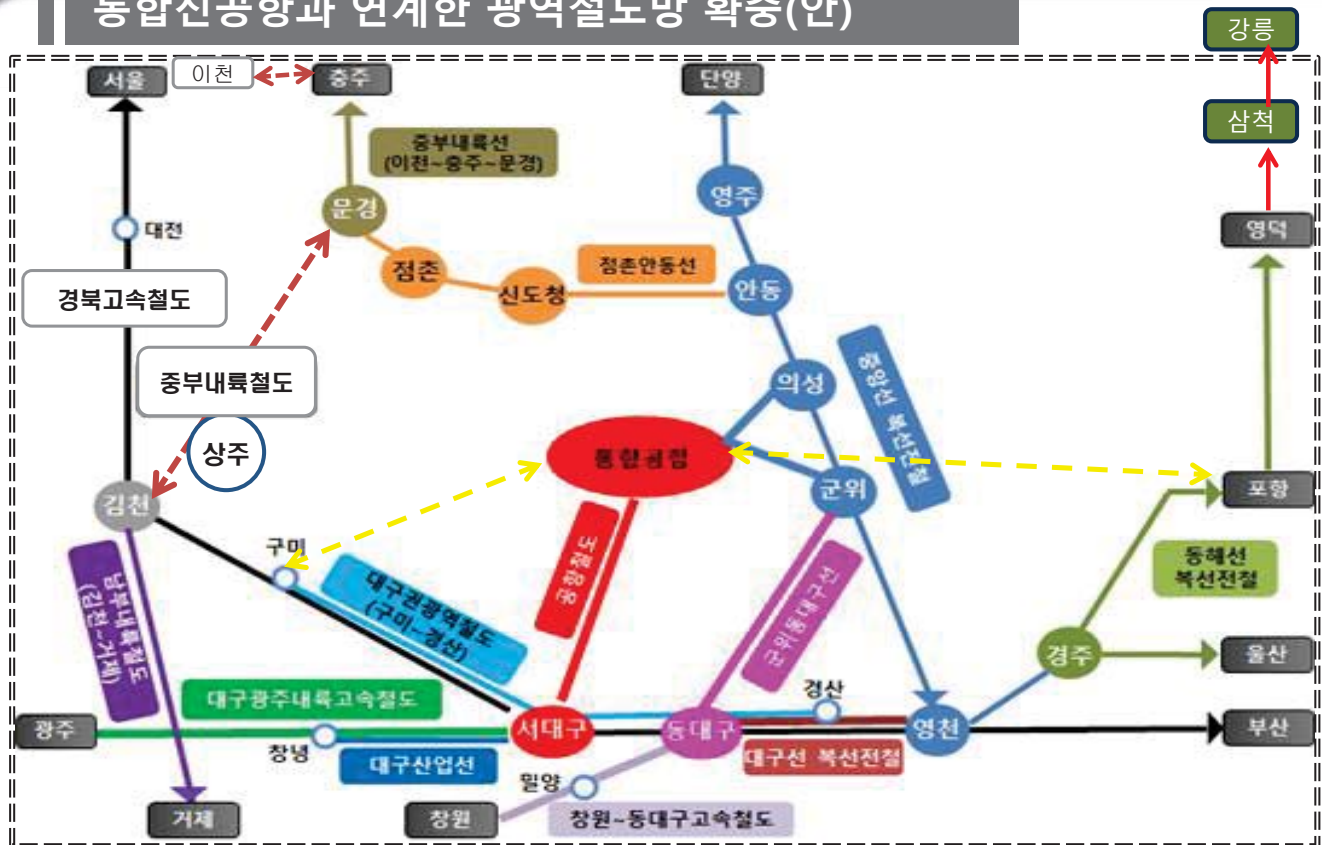


자료 : 경상북도(2017). 대구통합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

IV. 대구 · 경북 현안문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철도망 확충(안)



자료 : 경상북도(2017). 대구통합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조성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생태계 등이 공항 중심으로 집적되어
경제활동 중심 네트워크가 구축된 **글로벌 비즈니스·생산 허브**

개념 정의

- 경제활동 중심의 공항 패러다임 변화
→ 산업·비즈니스 등이 결합된 공항경제권 조성



- 주요 공항 중심,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관련산업 육성 → 지역 신성장 거점화

공항경제권 도입 배경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18). 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18통합신공항 건설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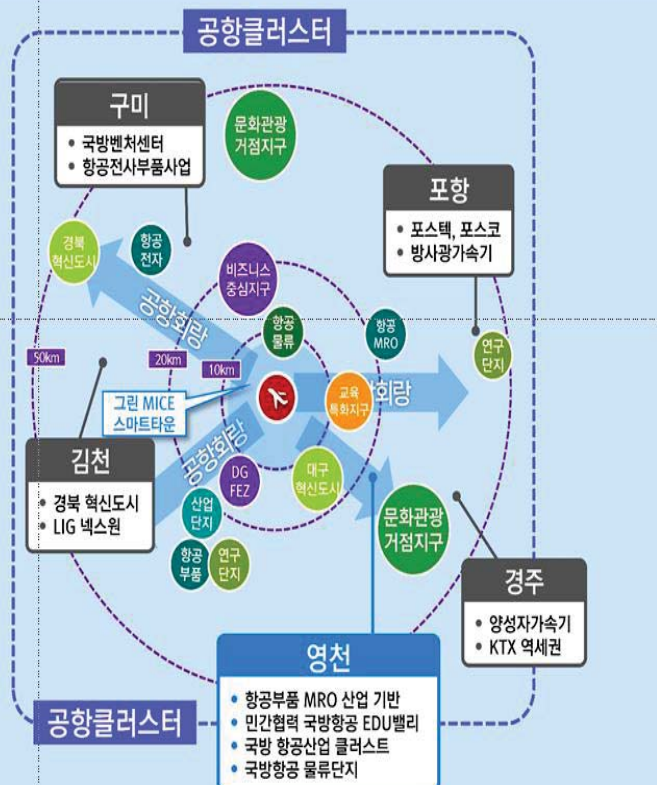
III. 대구 · 경북 현안문제



통합신공항경제권 생태계 구축

대구+ 경북 시·군 공항클러스터 형성

- 1단계: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
- 2단계: 신공항 연계지대 형성
- 3단계: 공항 기반도시 건설
- 4단계: 신공항 경제권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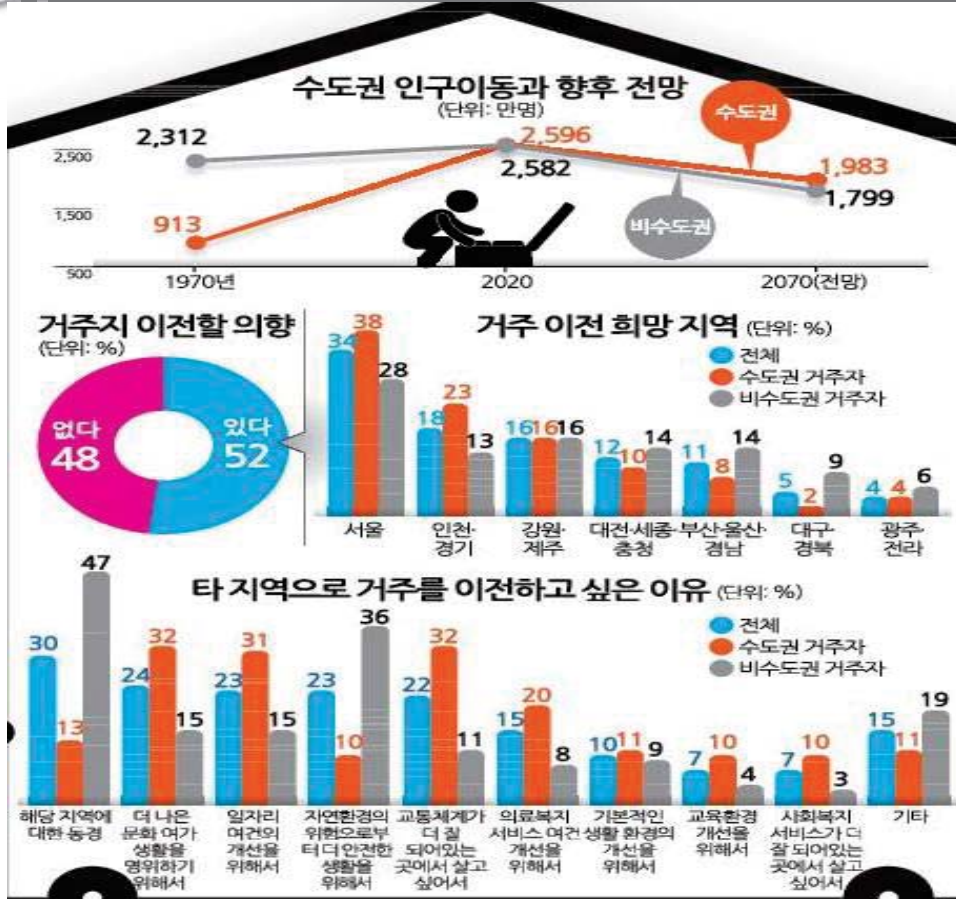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18). 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18통합신공항 건설 정책토론회.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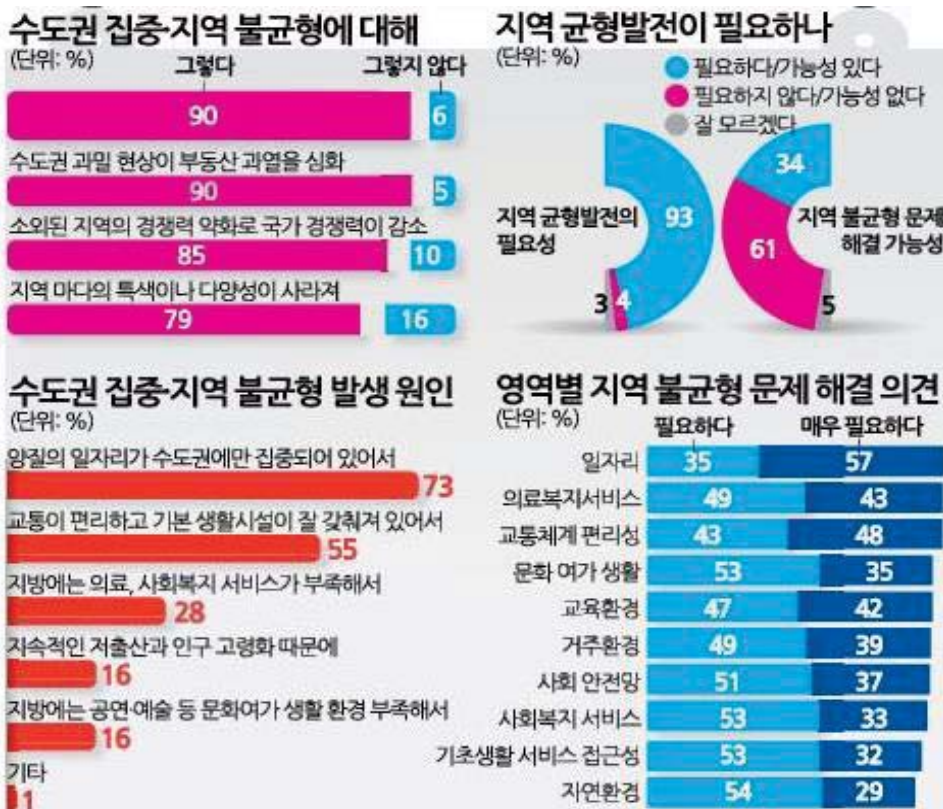
- 한국리서치
- 21. 5. 21~5. 24.
- 18세 이상 1,000명
- 2017년 대비 2047년에 경기, 세종, 충남, 충북, 제주, 인천 등 6개 지역 외 인구감소

한국일보, 2021. 6. 17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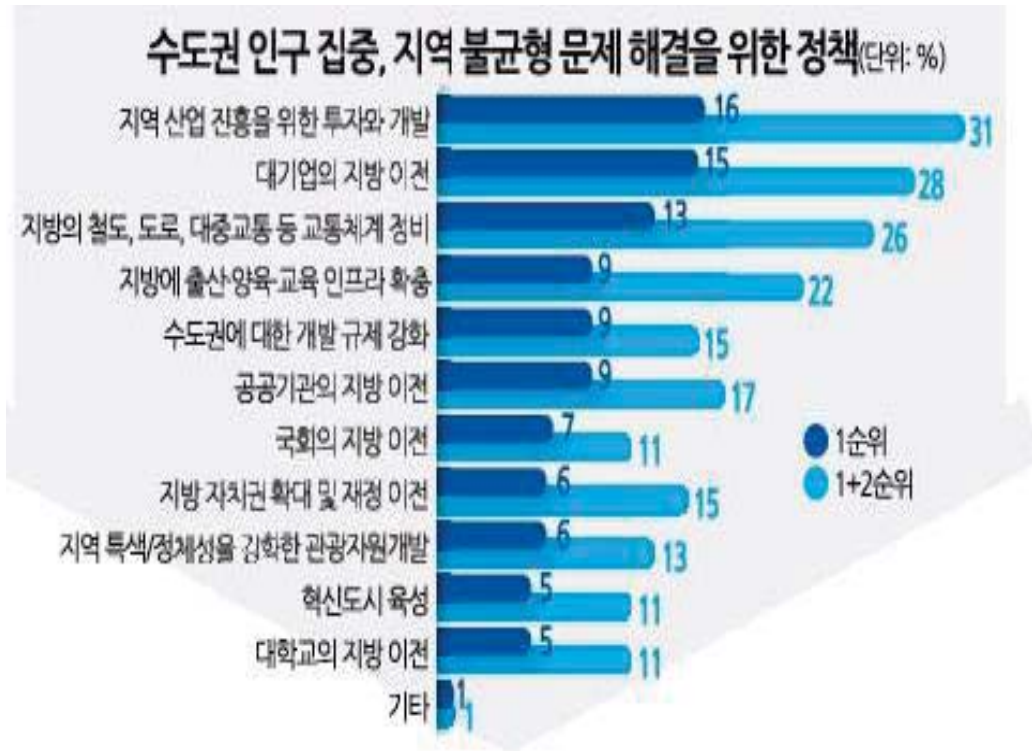


한국일보, 2021. 6. 17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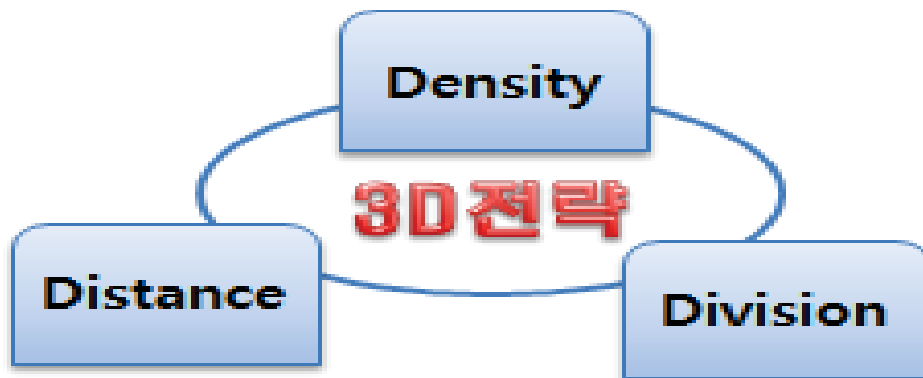
한국일보, 2021. 6. 17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초광역 경제권 구축 방향

- Density(밀도) : 고밀·복합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압축도시화 전략
- Division(분업) : 도시간 특화분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발전략
- Distance(거리) : 각 지역간 거리를 좁혀 이동성을 키우는 Mega City화 전략



자료 : 세계은행(2009). 경제지리 재구축을 허재완(2018). 광역화 시대, 대구경북의 미래에서 재인용

- 초광역 경제권 : 3+2+2
 - 3(충청권, 부울경, 광주전남)+2(대구경북, 전주전북)+2(강원, 제주)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초광역 경제권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초광역 경제권의 필요성과 문제점

• 필요성

-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 간토(關東) vs 칸사이(關西)

• 문제점

- 역내 불균형 : 수도권 · 강원(2,382만 7천명, 92%), 대구권역(221만 3천명), 대전권역(159만 8천명), 부산 · 김해권역(413만 3천명, 92%), 광주권역(161만 7천명, 94%)<2015년 기준>

■ 대응방향

• 역내 교통망체계 개선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 연계교통망 구축에 의한 공간통합
- 구미-대구경북통합신공항-포항 연계 :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 동해남부선, 중앙선 선형개량, 동해중부선, 문경선 등 신설 : 역세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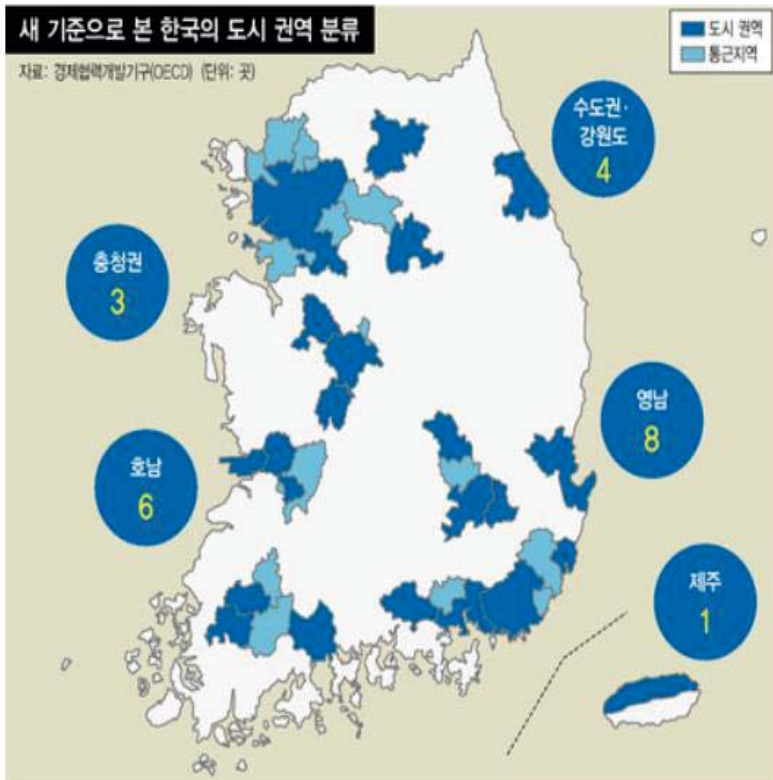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

새 기준으로 본 한국의 도시 권역 분류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위: 곳)



■ 1단계 : 전세계 구역 분류

- 도심 구역 : 1,500명/k² 이상, 5만 이상 공간
- 도시 구역 : 300명/k² 이상, 5천명 이상 공간
- 농촌 구역 : 도심, 도시 공간이 아닌 곳

■ 2단계 : 각국 행정구역 분류

- 도시 : 전체 인구 50% 이상이 도시에 사는 곳
- 타운 : 도심, 도시, 농촌 구역이 혼재된 행정구역
- 농촌 : 행정구역 전체 인구 50%가 농촌 거주

■ 3단계 : 도시 권역 정립

- 한 도시의 인근 지역 중 인구 15% 이상이 해당 도시로 통근하는 지역까지 포괄하는 구역

■ 도시 권역 인구 거주 비율(2015년 기준)

- 수도권 · 강원 : 2,382만 7천명 중 도시거주 92%
- 부산 · 김해 : 413만 3천명 중 도시거주 92%
- 대구권역 : 221만3천명이 도시권역 거주
- 대전권역 : 159만 8천명이 도시권역 거주
- 광주권역 : 161만 7천명 중 도시거주 94%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현황

	광·특별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	서울	25
2	부산	16
3	대구	8
4	인천	10
5	광주	5
6	대전	5
7	울산	5
8	세종	-
9	경기	31

	광·특별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0	강원	18
11	충북	11
12	충남	15
13	전북	14
14	전남	22
15	경북	23
16	경남	18
17	제주	-
계		226

■ 지방의회 의원 현황

- 광역의원 : 829명(비례 87)
- 기초의원 : 2,927명(비례 386)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

■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

- 인구, 재정, 단위면적 규모 격차 심화
 - 현행 행정구역 : 조선말, 일제 초기
 - 22개 도신권역에 집중 : 영국 96, 이탈리아 84, 스페인 81곳(OECD)
 - 도시거주비율 : 수도권·강원(4), 영남(8), 호남(6), 충청(3), 제주(1)
 -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 추세가 심각

■ 행정체계 개편

- 행정체계 개편방향
 - 지방분권, 재정자립 등을 고려한 행정체계 개편
 - 분산형 도시 개편 : 대도시 중심 도시화 완화
- 자체성장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 제도개선, 광역생활권(Nodality)
 - 광역시 → 2~3개 기초자치단체 통합
 - 광역자치단체 → 4~7개 시·군 통합
 - 100만명 단위 기초자치단체 50여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원체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 에너지 공급 분산

- 에너지전환정책 개선
 -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원자로) : 300MW, 대형 원전의 1/150, 건설비용 1/3, 비상계획구역(16km→230m), 사고발생율(1/1,000)
- 소형 양수발전소
 - 신재생에너지 확산 : ESS기능

■ 지방대학육성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 지방대학육성의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위기
 - 지방대학 폐교는 지방소멸의 전조현상
- 지방대학육성정책 전환
 - 지방대학을 연구기관으로 전환(서울대 의대 호원경교수. 한겨레. 2021.3.29.)
 - 지방대학 R&D기능을 통해 지역의 성장극(growth pole) 육성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의 과제

■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초광역 경제권 구축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 연계교통망 구축에 의한 공간통합
 - 구미-대구경북통합신공항-포항 연계 :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 동행남부선, 중앙선 선형개량, 동해중부선, 문경선 등 신설 : 역세권 개발

■ 가속기벨트 구축

- 양성자가속기
 - NT, CT, ST, BT, ET, 첨단의료
- 방사광가속기
- 포항, 경주 가속기와 경산 학원단지 연계 : R&DB기능 구축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권역별 전략산업

IT·BT·NT·GT 기반의 선도산업

- 의약바이오 차세대 의약
- 차세대에너지 태양광(부품), 2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
- NEW IT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 융합기계부품 동력기반 기계부품

녹색산업 융복합화, 친환경 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 라이프케어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 광융복합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 조명
- 친환경 수송기계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 선박

첨단 녹색성장산업의 메카

- 풍력 서비스 제주형 풍력서비스
- 차세대 식품 융합 청정 헬스푸드, 뷰티형장
- MICE 휴양형 MICE(국제회의 등)



동북아 생명-건강산업 신발전 지대 구축

- 기능성 신소재 세라믹/비철소재부품
- 바이오메디컬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 헬스케어 헬스케어인턴트

유망 업종의 미래성장 동력화

- 그린에너지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 IT 융복합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 스마트기기부품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 첨단융합소재 첨단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주력산업 고도화, 그린 신산업

- 에너지플랜트 풍력부품, 원전설비
- 그린화학소재 화학융합소재
- 수송기계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 조선해양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조선 기자재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지역별 전략산업

충북-전략산업

- 반도체
- 바이오-의약
- 전기전자부품
- 태양광
- 풍력기반기계부품

충남-전략산업

- 자동차부품
- 인쇄전자부품
- 동물식의약
- 디지털영상콘텐츠
- 디스플레이

세종-전략산업

- 자동차부품
- 바이오소재

대전-전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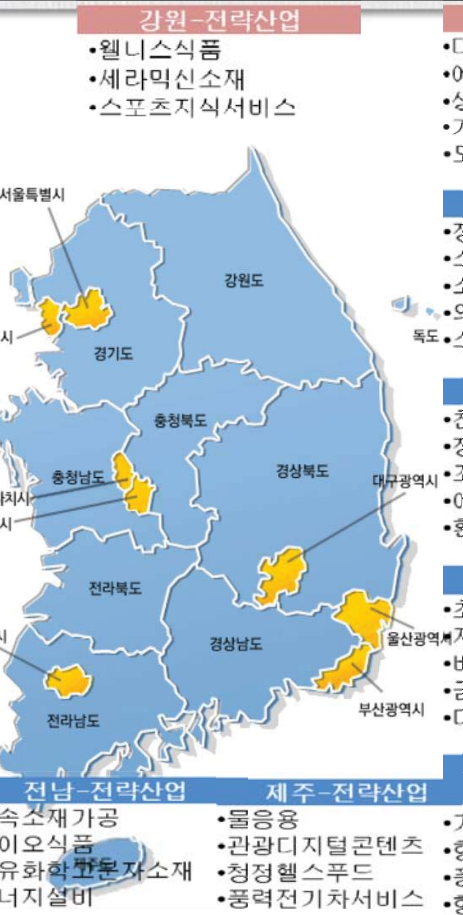
- 무선통신융합
- 메디-바이오
- 로봇자동화
- 금형가공
- 지식재산서비스

전북-전략산업

- 기계부품
- 건강기능식품
- 해양설비기자재
- 경량소재성형
- 복합섬유소재

광주-전략산업

- 스마트가전
- 복합금형
- 생체의료용소재부품
-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 디자인



강원-전략산업

- 웰니스식품
- 세라믹신소재
-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북-전략산업

- 디지털기기부품
- 에너지소재부품
- 성형가공
- 기능형 바이오-소재
- 모바일 융합

대구-전략산업

- 정밀성형
- 스마트분산형에너지
- 소재기반바이오-헬스
- 의료기기
- 스마트지식서비스

울산-전략산업

- 친환경가솔린차부품
- 정밀화학
- 조선기자재
- 에너지부품
- 환경

부산-전략산업

- 초정밀융합부품
- 지능형기계부품
- 바이오-헬스
- 금형열처리
- 디지털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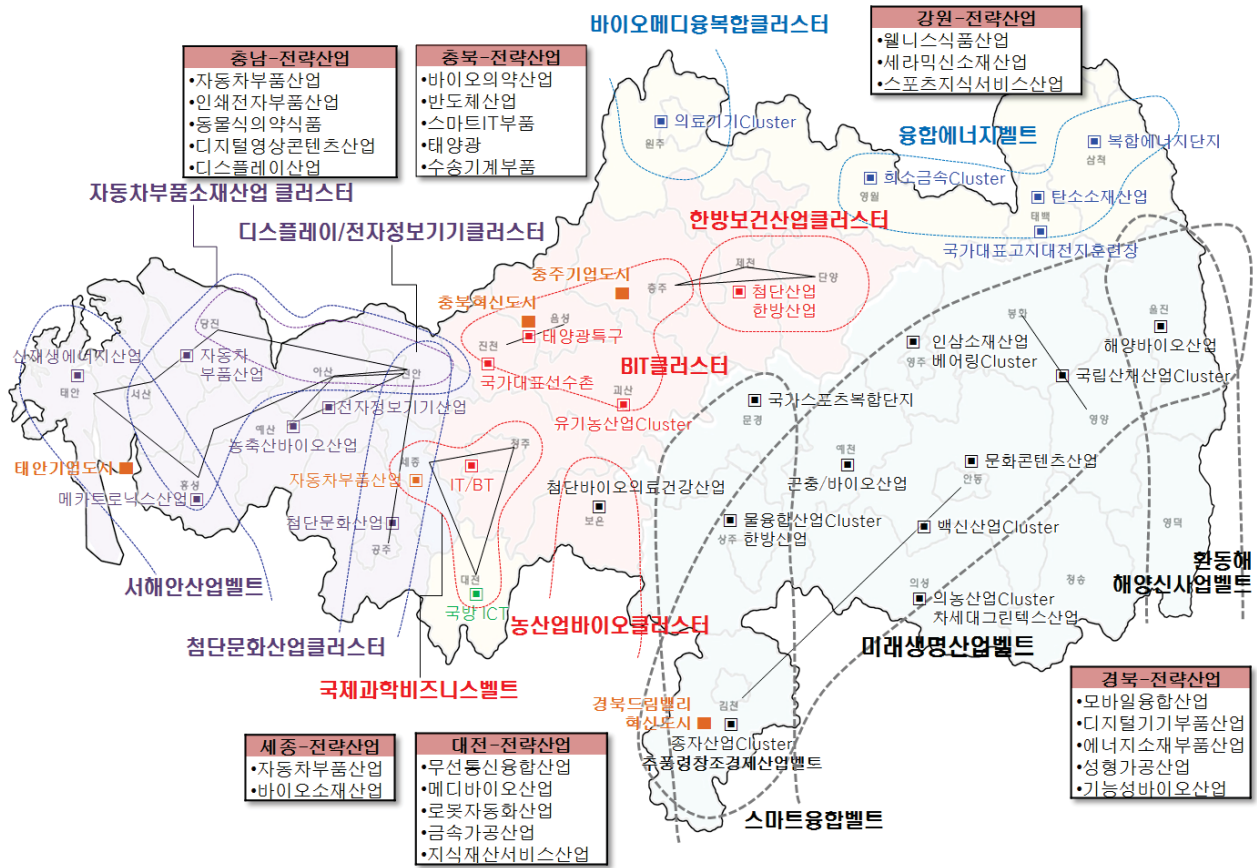
경남-전략산업

- 능형생산기기
- 기계소재부품
- 항공
- 풍력부품
- 형도화바이오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경북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벨트 구축



IV. 국가균형발전과 경북지역의 과제



경북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벨트 구축



경상북도!
소통과 포용으로 균형발전!



MEMO

MEMO